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신윤정  
계봉오·김근태·유삼현·박수빈·김보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
	김근태	고려대학교 교수
	유삼현	한양대학교 교수
	박수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보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11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67-6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00>

## 발|간|사

국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 수준에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출산율 하락은 글로벌 현상으로, 주요 선진 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출산율 하락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변화된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임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데 원인이 있다. 출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최근의 글로벌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주요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족 정책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본 연구는 신윤정 국제협력단장의 연구 책임하에 김보름 연구원, 박수빈 연구원,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 김근태 고려대학교 교수, 유삼현 한양대학교 교수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유용한 자문 의견을 주신 최슬기 KDI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1
요약 .....	3
<b>제1장 서론 .....</b>	<b>7</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b>제2장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b>	<b>15</b>
제1절 개요 .....	17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9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	28
제4절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	34
제5절 소결 .....	62
<b>제3장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 변화와 특징 .....</b>	<b>65</b>
제1절 개요 .....	67
제2절 출산력 결정 모형 .....	67
제3절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 .....	80
제4절 초저출산 결정 요인의 특징 .....	100
제5절 소결 .....	104

---

<b>제4장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초점 집단 토론</b> ...	107
제1절 개요 .....	109
제2절 설문 내용 .....	111
제3절 분석 결과 .....	115
제4절 소결 .....	141
<b>제5장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b> .....	147
제1절 개요 .....	149
제2절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 .....	152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	192
제4절 소결 .....	212
<b>제6장 결론</b> .....	221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	22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26
<b>참고문헌</b> .....	229
<b>부록</b> .....	247

# 표 목차



〈표 2-1〉 OECD 주요 회원국의 2010년과 2021년(또는 2022년) 합계출산율 .....	43
〈표 2-2〉 OECD 주요 회원국의 2000, 2010, 2020년 혼외출산 비중 .....	61
〈표 4-1〉 초점 집단 토론 표본 설계 .....	110
〈표 4-2〉 초점 집단 토론 대상자 및 주요 특성 .....	116
〈표 5-1〉 프랑스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157
〈표 5-2〉 2021년 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의 중점 과제 .....	194
〈표 5-3〉 2021년 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의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 .....	196
〈표 5-4〉 싱가포르의 종일제 영아(2~18개월)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월 기본지원금 .....	205
〈표 5-5〉 싱가포르의 종일제 유아(18개월~7세)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월 기본지원금 .....	205
〈표 5-6〉 싱가포르의 인공임신시술 지원 .....	207
〈표 5-7〉 싱가포르의 아동 발달 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 .....	209

#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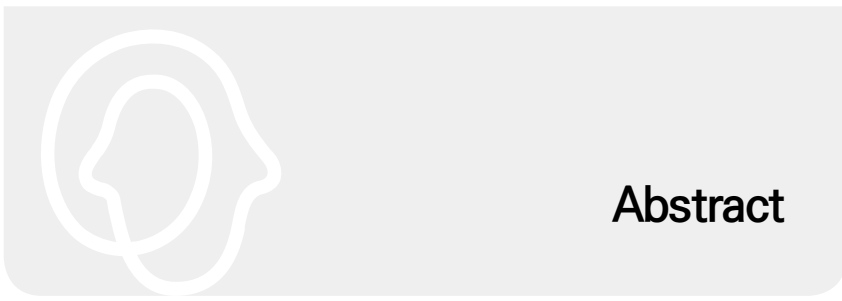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18
[그림 2-2] 젠더 혁명에 따른 출산율 변동의 도식화	20
[그림 2-3] 인간개발지수(HDI)와 합계출산율의 횡단적 관계, 1975, 2005	20
[그림 2-4] 지역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960~2021	37
[그림 2-5] 2000년 이후 지역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2000~2022	42
[그림 2-6] 주요 국가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2000~2022	47
[그림 2-7] 주요 국가별 40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1950~1981년생	49
[그림 2-8] 주요 국가별 여성의 완결출산율: 1950~1971년생 49세 여성	53
[그림 2-9] 2020년 주요 국가별 연령별 출산율 분포	55
[그림 2-10] 2021년 OECD 국가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57
[그림 2-11] OECD 회원국 주요 지역과 국가별 혼외출산 비중, 2000~2022	60
[그림 3-1] 미국국립과학원의 출산력 연구모형	68
[그림 3-2] 불가르트의 근접요인 접근법	70
[그림 3-3] 불가르트의 근접요인 접근법으로 분석한 한국의 출산율	71
[그림 3-4] 출생아 수 변화 분해 분석 (2000~2017)	72
[그림 3-5] OECD 22개 국가의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변화	75
[그림 3-6] 미국의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 (1980~2010)	76
[그림 3-7] 여성의 젠더의식 집단 구성비 및 집단별 경제활동 참여율	79
[그림 3-8] 교육 수준과 기간-기반 유배우 합계출산율 (2001~2020)	82
[그림 3-9] 교육 수준과 결혼의향 분포	83
[그림 3-10]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무자녀 비율 변화	85
[그림 3-11]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과 합계출산율	86
[그림 3-12] 출산의도 결정 과정의 내려티브 프레임워크	90
[그림 3-13] 스위스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95
[그림 3-14] 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무자녀 여성 비율 변화	97





[그림 3-15]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완결 코호트 출산율 추이 .....	99
[그림 3-16]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모형: 미국과 이탈리아의 가상적인 수치들 .....	102
[그림 4-1] 결혼 및 (둘째) 출산 포기 결정 요인 간의 관계 .....	142
[그림 5-1] 싱가포르의 “Made for Families” 이니셔티브 .....	211
[부그림 1] 주요 국가별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 2000~2022 .....	247
[부그림 2] 주요 국가별 tempo 보정 합계출산율 .....	248
[부그림 3] OECD 회원국 국가별 혼외출산 비중, 1960~2022 .....	249





## Abstract

### Fertility Changes and Policy Responses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Project Head: Yoon-Jeong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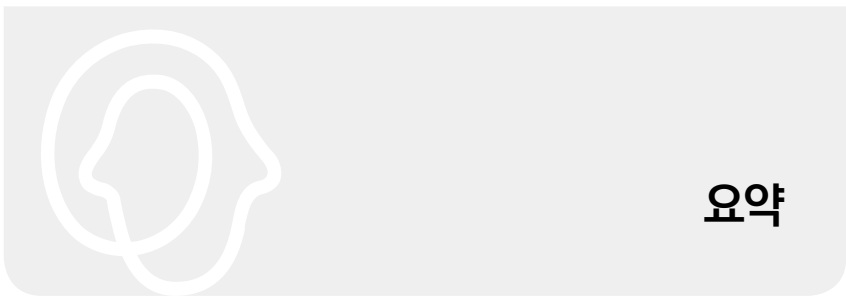
This study analyzes fertility rate changes in major countries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dentifies new factors that have emerged alongside traditional determinants of fertility, and examines the perceptions Korean youth of child-bearing age have about those new factors.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global fertility rates have declined overall, and few countries are expected to see an increase in fertility rates in the near future. In particular, Korea is least likely to see a fertility increase in the foreseeable future. Recent fertility fluctuations have been driven by traditional fertility determinants, and changes in these determinants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new fertility determinants.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these emerging fertility determinants include, among others, uncertainty, insecurity, and frustration. Our analysis of foreign policies suggests that fertility rates can remain moderate if governments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icy efforts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emerging determinants.

Keyword : Fertility,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Policy responses for low fertility, Family policy

---

Co-Researchers: Bongoh Kye · Keuntae Kim · Sam Hyun Yoo · Subin Park · Boreum Kim





## 요약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 0.78명으로 매해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출산을 둘러싼 환경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력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남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황과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재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 변동에 주는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글로벌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는 지연 변천에 따른 템포 효과로 설명될 수 있었으나, 최근 출산율 변동은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상승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며 출산율은 글로벌하게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현격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한 상태이며 다른 지표들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은

#### 4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의 출산율 변동은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과 더불어 이러한 결정 요인에서 변화가 나타나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 출산 및 양육 부담, 생애 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소셜 미디어, 정책적인 요인이 출산과 갖는 관계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초저출산의 주요한 결정 요인은 출산율 상승과 하락의 비대칭성, 경제적 불안정성,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로 요약되었다.

초점 집단 토론 결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의 키워드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감 및 좌절감으로 분석되었다.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은 한층 심화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출산력 결정 요인들과 증충적으로 결부되어 결혼과 출산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랜 학업 기간 및 높은 입직 연령에 따른 만혼과 만산, 조기 퇴직,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염려, SNS와 미디어에서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더욱 키워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 정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임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및 좌절감을 상쇄해 주기에는 역부족하였다.

외국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국가가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새롭게 대두되는 결정 요인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 출산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과 싱가포르 같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경직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

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출산을 제고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재편하고 있었다.

글로벌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어떠한 당위성하에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향후 정책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정부의 결혼과 출산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일시적이고 대증적인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본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해야 한다. 넷째, 미디어와 소셜 커뮤니케이션은 가족의 중요성과 자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세대 간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층 생애과정의 불확실성과 부모 됨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개입과 양육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 출산율, 출산율 결정 요인, 인구, 저출산 대응 정책, 가족정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 국가들은 1990년까지 약 2명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2년 평균 약 1.65명 수준을 보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약 1.76명까지 상승하였으나, 경제 위기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20년 현재 1.59명이며, 국가 간에 현저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2020년도 합계출산율 동향을 보면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대체 수준 가깝게 출산율을 유지하던 프랑스는 1.79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구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스웨덴 1.66명, 노르웨이 1.48명, 핀란드 1.37명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였던 독일은 1.53명, 동유럽 국가들은 체코 1.71명, 헝가리 1.52명, 슬로바키아 1.53명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였다(OECD Family Database, 2023).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 0.78명(잠정치)을 보여 최저 수준을 매해 갱신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OECD Family Database, 2023). 국내 합계출산율 추이는 1984년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인 1.74명에서 2002년 초저출산 이하인 1.17명으로 하락하고 2018년 이후 1명 이하로 고착되고 있다(통계청, 2022).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육 서비스를 2012년에 보편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에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하였고, 2018년에는 아동 수당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그러나 출산율 제고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이러한 외국의 정책들을 한국 사회에 도입하고 나서도 국내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에서 출산율을 하락시키고 있는 요인들이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불안감 확대 등 새로운 출산력 결정 요인들이 등장하고, 자녀 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성 불평등 등 전통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출산율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은 전통적인 출산력 결정 요인에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하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력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가임기 성인 남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응하여 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황과 주요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사점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 변동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sup>1)</sup> 그리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전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최근 추세를 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기간은 2000~2020 기간으로 하였으며, 분석 대상 국가는 38개 OECD 회원국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 지표로 합계출산율,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코호트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 혼외출산 비중을 사용하였다. 국가별 및 지역별로 나타나는 출산율 현황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38개 OECD 회원국은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북미, 중남미, 동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용 자료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와 인류출산 데이터베이스(Human Fertility database)를 활용하였다. 2008~2009년 경제 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국가들이 보이는 출산율 변동에 주목하여 최근의 초저출산 양상의 현황과 이것이 향후 출산율 추이 변동에 주는 함의점을 모색하였다.

1)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는 출산율과 출산을 둘러싼 결정 요인들, 그리고 정책적 환경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위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며,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최근 출산율 하락을 가져온 배경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인구학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산력 결정 모형에 근거하여 전통적으로 제시해 온 출산 결정 요인을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출산력 결정 구조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바,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조건(교육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노동 시간, 출산 및 양육 비용과 생애 과정 불안정성 증가, 부정적 정보의 전파), 가족 정책의 효과성(출산 및 육아 휴직, 공공 보육시설, 현금 지원 정책),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자기 실현주의의 강화, 인식된 양육 부담 증가, 성평등주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초저출산 결정 요인의 특징을 출산율 하락과 상승의 비대칭성,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 가치관과 규범의 중요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인구학·사회학·경제학 등의 학술 분야에서 발표된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수행된 최근의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본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제4장은 제3장에서 논의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결정 요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남녀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임기 남녀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들을 초점 집단 토론 방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대상자는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안배를 고려한 가임기 30~40대 남녀 16명으로 하였다. 토론 내용은 녹음하고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을 코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은 출산율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의 유럽 국가와 일본, 싱가포르

르의 동아시아 국가로 하였다. 유럽 국가의 정책은 MISSOC의 유럽 사회 보장 체계에 따라 가족 급여와 모성 휴가/부성 휴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유사한 일본의 2021년 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 싱가포르의 2021년 판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각 국가의 정책 내용은 2020년 이후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최근 정책 동향의 특징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는 각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제6장 결론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제2장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제4절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제5절 소결



## 제 2 장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 제1절 개요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일부 서구사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해 왔다. 최근 발표된 유엔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3가 이미 저출산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United Nations[UN], 2022).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관찰되던 저출산 현상은 이미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보편적인 인구변동 현상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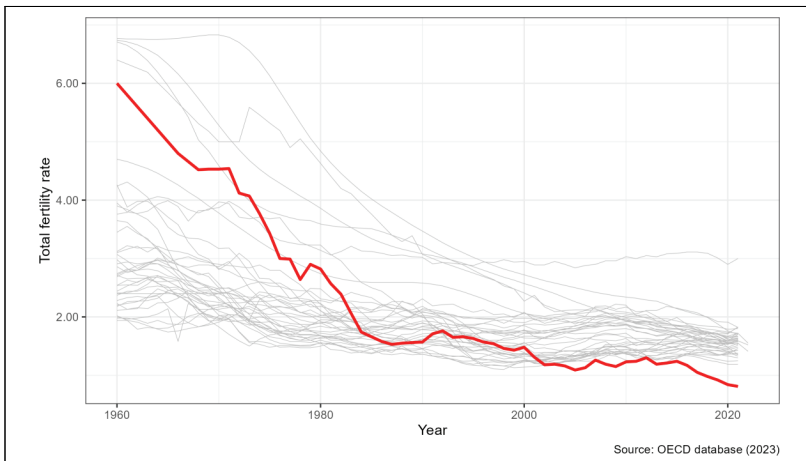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83년에 2.1 아래로 하락하였으며(2.06), 이후 대체 수준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지난 40년간 유지해왔다(통계청, 2023). 특히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정체기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2023년에는 집계 이후 최저치인 0.78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23).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출산율 변동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논의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리 사회보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험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추세가 보여주는 다양성과 역동성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와 확연히

구분되듯, 유럽 각국의 출산율도 역동적인 시계열 변화를 경험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의 사정이 저마다 다른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저출산을 경험한 시점과 출산력 지표가 서로 달라 국내의 경험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양한 양적 자료가 요구되는 국제 비교 연구의 특성상 유럽 국가들을 직접 분석하기보다, 서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과거 경험을 한국의 최근 상황과 비교한 탓으로 여겨진다.

본 장에서는 지난 2008~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유럽과 동아시아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에 주목하고, 합계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코호트 완결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등 주요 출산율 지표의 추세를 살펴본다. 인류출산 DB(Human Fertility Database)와 Eurostat 등 주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주요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지표를 정리하고, 주요 지역 또는 국가별로 분석하고 비교한다.

[그림 2-1]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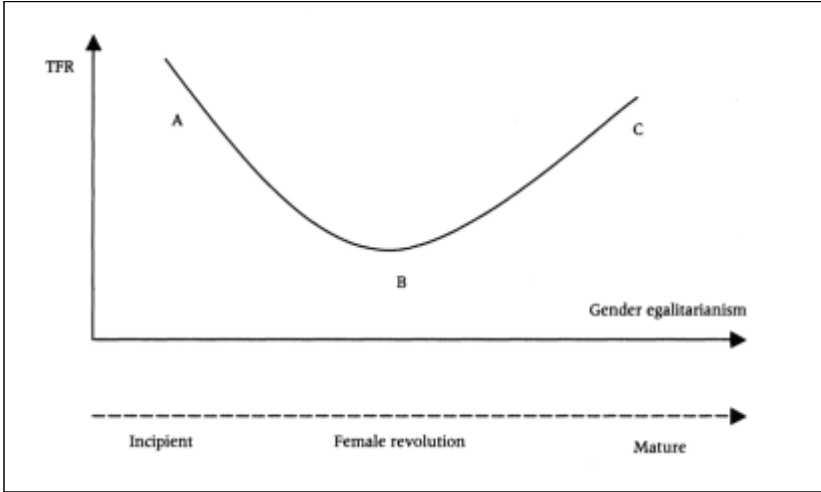
##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 제2차 인구변천과 젠더 관점

저출산의 등장과 전 지구적 확산,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 일부 사회에서 나타난 초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구학 분야에는 유럽 등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주로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과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은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를 주목한다(Lesthaeghe, 2010; Lesthaeghe & van de Kaa, 1986).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함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경험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등 가족에 대한 가치보다 교육, 커리어 등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게 되면서 가족형성과 출산이 지연되고, 동거, 혼외출산, 가족해체 등 가족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약화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 개선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가족 형성이 지연되고, 동시에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탈물질주의, 혼외출산, 저출산 등 제2차 인구변천의 주요 인구학적 특징들이 동아시아 일부 국가와 미국 등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Atoh, Kandiah, & Ivanov, 2004; Lesthaeghe & Neidert, 2006; Raley, 2001; Zaidi & Morgan, 2017).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결혼과 출산의 변화가 공통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출산율 변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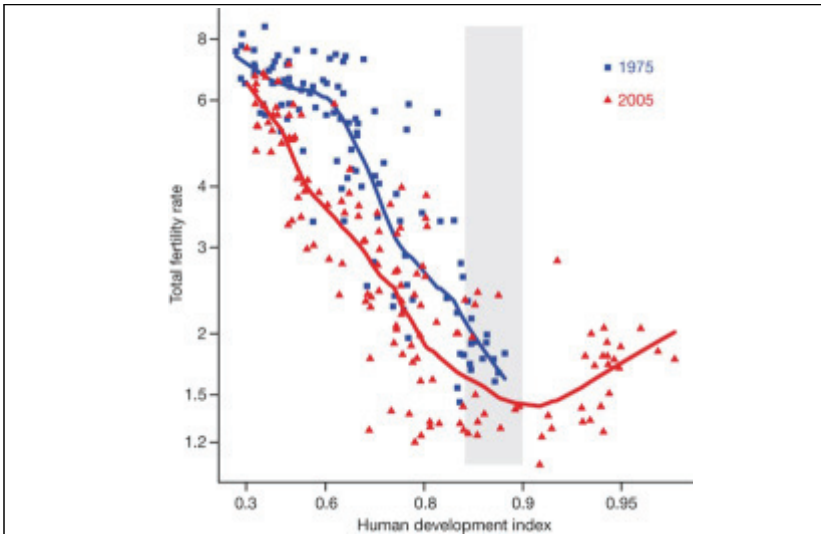
20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그림 2-2] 젠더 혁명에 따른 출산율 변동의 도식화



자료: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p. 9 Figure 1.

[그림 2-3] 인간개발지수(HDI)와 합계출산율의 횡단적 관계, 1975, 2005



자료: Myrskylä, Kohler & Billari. (2009).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은 여성의 지위, 성역할 변화, 이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출산율 변동을 설명한다. 1980년대 이후 유럽과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동아시아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하락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등장하였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등 주로 가족주의 전통을 지닌 국가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과 대비되면서 젠더 관점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맥도날드(McDonald, 2000b)는 교육이나 법률 등 제도적인 측면의 성평등 수준과 기업이나 가정 내의 성역할 등 실질적인 측면의 성평등 수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관찰된다고 설명하였다.

저출산 국가에서의 출산율 변동을 성평등의 개선과 성역할의 변화로 설명할 경우, 크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는 공공 영역에서의 고용과 사적 영역의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갈등이 야기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출산율 감소, 가족해체와 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도의 개선과 남성의 가사 활동 확대로 가족 안정성이 개선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다면 초저출산 국가도 북유럽처럼 출산율의 반등 또는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전이되는 기간과 과정에 따라 일부 사회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경험하거나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불안정성의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부장제나 가족주의 전통이 남아 있거나, 여성의 지위 향상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매우 낮은 출산율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남성이 가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수월해진다면,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Anderson & Kohler, 2015;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dcheider, Bernhardt & Lappegård, 2015).

제2차 인구변천이론과 젠더 관점은 대체 수준 이하의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변동을 거시적 사회변화로 설명한다. 두 관점 모두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적 지위 개선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두 관점은 출산율의 장기적인 변동에 관해 그 전망을 달리한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개인주의와 탈물질주의를 비롯한 관념의 변화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혼외출산의 확대,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을 예상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일관되게 지속적인 저출산 또는 출산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 젠더 관점은 사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안정성이 회복될 것이며, 대체 수준 이내에서 어느 정도의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이론적 관점과 각 사회의 배경에 따라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대한 설명과 전망이 달라지고 있다.

## 2. 합계출산율 변동과 템포 효과

여러 국가 사이에 출산율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널리 사용된다. 1980~1990년대 유럽 다수 국가,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역시 2001년에 합계출산율 1.31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



율 1.3은 매우 낮은 사망률 수준을 가정한 인구모형에서 45년마다 안정인구가 반감하는 출산율 수준으로, 학자들은 초저출산으로 구분하여 부른다(Kohler, Billari & Ortega 2002; Kohler, Billari & Ortega, 2006; Billari & Kohler 2004).

지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의 상승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정 연도에 관찰된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되는 합계출산율은 그 특성상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출산 시기가 지연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과소 추정되는 ‘템포 효과(tempo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Bongaarts & Feeney 1998; Bongaarts & Feeney, 2010). 1980~1990년대 서구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이 확대되고 경제활동 참여 역시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주요 출산연령이 20대 초중반에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미뤄지면서, 이른바 ‘지연 변천(postponement transition)’으로 불리기도 하였다(Kohler et al., 2002). 지연 변천은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quantum)의 변화라기보다, 출산 시기(tempo)의 변화와 연계되어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물론 출산 시기의 지연은 잔여 가임기간의 감소로 이어져 여성이 평생 출산한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의 하락을 초래하지만, 기간 출산율 지표인 합계출산율의 변동 폭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1980~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는 지연 변천에 의한 템포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Kohler et al., 2002). 일부 학자들은 향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이 완만해지면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00년대 이후 주요 유럽 국가에서 실제로 합계출산율 반등이 관찰되었다(Frejka 2011; Kohler et al., 2002;

Neels & De Wachter 2010; Sobotka 2004; Sobotka, Zeman, Lesthaeghe, Frejka & Neels, 2012).

### 3. 2008~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 변동

#### 가. 경제 위기와 출산율 변동

지난 2008~2009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서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주요 연구들은 2000년대 말 발생한 경제 위기가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예컨대, 유럽 28개국을 분석한 한 연구(Matysiak, Sobotka, & Vignoli, 2021)는 실업률 증가와 출산율 하락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노동시장 환경이 더 악화된 국가와 지역일수록 더 강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였다. 출산율 감소에 대한 실업률의 영향은 청년층에서 좀 더 두드러졌으며(Goldstein, Kreyenfeld, Jasilioniene & Örsal, 2013), 실업률 외에도 소비자신뢰지수, 경제정책 불안정성 등 여러 경제 조건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molli, 2017).

하지만 경제 위기가 주로 이미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경제 위기로 인한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한다(Morgan, Cumberworth & Wimer, 2011; Sobotka, Skirbekk & Philipov, 2010; Sobotka, Skirbekk & Philipov, 2011). 예컨대 미국의 경우 출산율이 하락하였지만, 자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출산을 미루는 행태에 가까웠으며, 이민자 유입 감소, 이혼과 별거의 감소,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출산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다(Cherlin, Cumberworth, Morgan &

Wimer, 2013).

한편 경제 위기의 장기적인 영향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실업률의 변화보다도, 제조업의 쇠퇴 등 경제 위기 동안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인종과 종족별 합계출산율 변화와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Seltzer, 2019). 산업구조의 변화는 청년층의 출산 지연과 포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오래 지속시키기 때문에 출산율의 반등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나. 출산율 감소와 반등

경제 위기에 따른 출산율 변동은 사회마다 다양하며 경제 위기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위기 이후의 출산율 변동은 저출산에 관한 기존의 설명들과 얽혀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지와 별개로, 다수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완만한 감소세 또는 그 전조가 관찰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저출산 국가 내 출산율 차이를 성평등 수준의 발전 차이로 설명한 연구들은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출산율 반등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Myrskylä et al., 2009;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성평등 수준과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로 모범사례로 언급된다.

하지만 해당 주장들은 템포 왜곡 등 단기적인 변동에 심하게 영향받는 합계출산율을 사용하고, 국가 간 자료의 횡단분석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35개국의 자료로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에 따르면, 횡단분석에서 관찰되는 성평등과 출산율의 U자형 관계가 종단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Kolk, 2019).

일부 학자들은 템포 효과에 의한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 코호트 출산율을 위주로 출산율 변동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체제 전환을 겪은 동유럽을 제외하고, 스칸디나비아를 포함한 유럽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Frejka, Goldscheider, & Lappegård, 2018; Zeman, Beaujouan, Brzozowska & Sobotka, 2018; Beaujouan, Zeman, & Nathan, 2023). 다만 노르딕의 복지국가에서 출산율 감소가 비교적 완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Frejka et al., 2018). 사실 핀란드 등 노르딕 국가에서는 최근 출산율 감소세가 분명하게 확인된다(Hiilamo, 2020; Hellstrand et al., 2021; Hellstrand, Nisén & Myrskylä, 2022). 노르딕 국가의 높은 성평등 수준이 오랜 기간의 노력과 제도 개선의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젠더 혁명에 따른 출산율 반등(Goldscheider et al., 2015)을 확인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출산율 변동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은 2010년대 이후 출산율 변동을 이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수의 연구는 대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였다고 지적한다(신윤정, 정희선, 계봉오, 김영룡, 최슬기, 2022; Lindberg, VandeVusse, Mueller, & Kirstein, 2020; Luppi, Arpino & Rosina, 2020; Arpino, Pasqualini, Bordone & Solé-Auró, 2021; Malicka, Mynarska & Świdarska, 2021). 코로나19 팬데믹은 질병에 대한 두려

음,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연결되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Aassve, Cavalli, Mencarini, Plach & Livi Bacci, 2020; Settersen et al., 2020; Kearney & Levine, 2020a; Kearney & Levine, 2020b; Berrington, Ellison, Kuang, Vasireddy & Kulu, 2021; Berrington, Ellison, Kuang, Vasireddy & Kulu, 2022). 청년들은 만남의 횟수가 제한되고,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Bellani & Vignoli, 2022; Manning, Guzzo, Longmore & Giordano, 2022),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재택근무, 보육시설 폐쇄, 비대면 수업 등 과거와 다른 양육행태를 경험했다. 전염병과 보건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주저하게 만들기도 한다 (Sobotka et al. 2023).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각국의 출산율 추이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보인다.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초기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국가(Ghaznavi et al., 2022; Kearney and Levine, 2022; Bailey et al., 2022; Gray, Evans & Reimondos, 2022), 또는 스웨덴을 제외한 노르딕 국가는 팬데믹 초기 2021년에 출산율 상승이 관찰되기도 하였다(e.g., Nisén, Jalovaara, Rotkirch & Gissler, 2022). 많은 경우 팬데믹 초기의 충격으로 출산율 하락, 거리두기 완화와 해제로 인한 반등, 그리고 팬데믹 이후 완만한 감소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Sobotka et al., 2023).

요컨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 위기가 출산율 변동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인지 또는 장기적인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젠더 혁명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는지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2010년대 유럽의 인구변동은 활발한 국제 인구이동과 북아프리카

와 증동에서 유입된 난민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사람들의 일상을 제약했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출산에 미친 단기적인 영향 정도만 알려졌을 뿐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 불과 15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너무 많다. 여기에서는 주요 지표의 국제 비교를 통해 출산율 변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도록 하자.

###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 1. 자료

이 연구는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의 경우 여러 국제기구나 기관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코호트 완결출산율, 출산 순위별 출산율 등 세부적인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최근 인구학 분야에서 출산력 변화의 국제 비교에 자주 사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가족통계 DB(OECD family database)와 인류출산 데이터베이스(Human Fertility Database: 이하 HFD)를 활용한다. OECD는 최근 회원국의 가족구조와 관련 정책과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통계 DB를 공개하였다. 해당 DB는 인구구성과 출산력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 선진국들의 출산 및 인구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출산력 관련 지표는 합계출산율, 완결출산율,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의 경우 유럽연합 또는 각 국가의 통계청 또는 통계 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외 세부 자료는 대부분 HFD에서 정리하여 공개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의 인구 연구기관들은 국제 비교를 위해 유럽 내외 지역의 국가별 출산 통계를 수집하려 노력하고 있다. HFD는 세계 각국의 출산력 자료를 모아놓은 온라인 DB로서 독일의 막스플랑크 인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인구연구소(Vienna Institute for Demography)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국가별로 수집된 출생 자료를 인구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가공하고, 기간(period)은 물론 코호트(cohort) 측면에서 합계출산율과 평균 출산연령, 출산표(fertility table)를 출생순위별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가마다 공개된 자료의 기간과 수준, 지표의 종류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하지만 주요 국가의 출산에 관해 상세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확인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원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OECD 가족통계 DB와 HFD 자료를 활용한 다. OECD 가족통계 DB가 합계출산율 등 각국의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출산력 관련 지표는 제한적인 편이며 기본적으로 HFD의 자료와 같다. HFD 자료는 좀 더 상세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2020년 전후 자료들의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세부 지표의 경우 해당 자료를 포함하는 국가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기도 한다. 필요할 경우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DB(Eurostat)는 물론 유엔인구기금(UNFPA)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온라인 DB 등을 함께 활용한다.

## 2. 분석 방법

### 가. 분석 기간과 대상

이 연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전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최근 추세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0~2022년을 주요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국가별로 2009~2010년까지 이어졌다. 반면 HFD 등 주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출산 지표의 최근 자료는 국가별로 2017~2022년까지 다양하다. 국가 단위의 출산율 변동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제한할 경우, 실제 분석이 가능한 기간은 7~10년 내외의 짧은 기간으로 한정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1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여, 2000년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파악한다. 지난 20년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면 주요 국가의 경제 위기 전후의 변동과 최근의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2000년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출산율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출산력 추이도 함께 살펴본다.

국제 비교에 포함되는 국가의 선정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비교 대상이 되는 국제 지역과 국가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내 연구진들이 주목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로 한정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의 국가를 다루어야 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대체 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교 대상을 저출산 국가로 한정할 수도 없다.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를 선정하더라도, 주요 지표마다 자료를 가용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합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대부분 국가가 포함된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그 수는 반 이하로 줄어든다.

출산력에 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은 국가의 수가 달라지더라도 지표마다 가용한 국가들을 모두 사용하거나(Kohler et al., 2002; Frejka et al., 2018; Zeman et al., 2018), 4~10개 내외의 국가를 선택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Beaujouan et al., 2023; Beaujouan & Toulemon, 2021; Hellstrand et al., 2021). 여기에서는 전자처럼 자료가 가용한 국가들을 위주로 지표를 살펴본다. 지표마다 비교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용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주로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미 27개국이며, 미국, 일본 등 다른 지역 국가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 숫자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는 차치하더라도, 도시국가 등 인구의 규모와 크기 등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유럽 국가의 다수가 합계출산율 1.3~1.8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남미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다수 국가도 유사한 합계출산율 수준을 보인다. 출산 수준이나 경험을 토대로 비교 대상을 유럽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출산율 지표의 비교 대상을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38개 OECD 회원국으로 제한한다.<sup>2)</sup> OECD 회원국의 다수가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국가들이 유럽 내 각 지역에서 인구나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높은 곳들이다. 또한 OECD 회원

2) 지난 2021년 5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23년 10월 현재 OECD 회원국은 38개국이다.

국은 유럽뿐 아니라 미주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제성장과 정책연구를 위한 협력 체계가 장점이다. 출산율 변동의 비교는 물론 OECD 보고서와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한다면 정책적 대응과 이슈 발굴이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지표 비교에 사용되는 국가가 지표마다 달라진다. 지표의 단순 비교는 간단한 표나 그림으로 제시되지만, 합계출산율 등 지표의 추세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세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분석에 활용된 세부 지역은 유엔의 세부 지역명을 활용하였다.<sup>3)</sup> 사례가 많지 않은 지역은 함께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대다수 회원국이 포함되는 합계출산율 추세는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북미, 중남미, 동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오세아니아와 그 외 지역은 함께 제시하였다. 그 외 지표가 가용한 국가가 제한적일 때에는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동아시아 등 지역의 수를 줄여서 제시하였다.

## 나. 분석 방법과 지표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율의 수준과 추세, 분포 등을 확인한다. 가용한 지표들을 토대로 국가별 수준과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기술 분석을 시도한다. 주요 지표의 변화를 통해 주요 지역 또는 국가별 추세를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2000년 이후 거시적인 출산율 변동은 물론 2010년 중후반 이후 주요 국가별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 추세를 확인한다.

---

3) 유엔의 세부 지역은 지리적 구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모두 서아시아(Western Asia)로 구분되며, '중부 유럽'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부 작업은 R 소프트웨어의 *countrycode* 패키지를 활용하였다(Arel-Bundock, Enevoldsen, & Yetman 2018; R Core Team 2023).

여기에서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mean age at childbearing), 코호트 출산율(cohort fertility rate),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parity distribution), 혼외출산 비중(share of non-marital births)을 사용한다.

합계출산율은 1세 또는 5세 간격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산출된다. 관찰된 연령별 출산율이 유지되고 인구이동과 사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평균 출산연령을 작성하는 방법 중 많이 알려진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출생 신고한 여성의 나이를 평균하는 것과 연령별 출산율에 나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여성인구의 연령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후자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1세 간격의 연령 구간에서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연령별 출산율에 가중하여 합한 값을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인류출산 DB 자료를 활용한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출생 코호트 여성이 생애 기간 실제 출산한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대개 49세까지의 평균 출생아 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여성의 40대 이후 출산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40세 또는 44세까지 출산한 평균 출생아 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합계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제 출산한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실과 가장 가까운 지표로 인정된다. 하지만 해당 코호트 여성이 모두 가임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측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 코호트의 출산율을 반영하기 위해 40세 코호트 출산율을 사용한다.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의 여성인구로 나눈 값이다.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는 해당 연도에 출생한 아이들의 출생순위별 백분율을 의미한다. 혼외출산 비중도 역시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산한 출생아의 수를 그 해 출생아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사용한다.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 혼외출산 비중 등은 모두 출생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여기에서는 OECD 가족통계 DB에서 제공하는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사용한다.

## 제4절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 1.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대표적인 출산력 지표 중 하나로 인구의 성과 연령 구조가 다른 국가 간에 출산력 수준을 비교할 때 널리 이용된다. 주요 지역별로 OECD 회원국의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수준과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간을 가진 두 개의 [그림 2-4]와 [그림 2-5]를 제시한다. OECD 회원국을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가.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세

[그림 2-4]은 1960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가 가용한 연도까지 60여 년의 출산율 장기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960년 이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장기적인 출산율 감소가 확인된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 정도만 대체 수준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세는 출산율 변동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 변동의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북유럽 지역에서는 1960년대 이후 12개국의 출산율이 202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1960~1980년대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높은 출산율과 1990~2010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두드러진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발트 3국의 출산율 하락은 소련의 붕괴에 이은 독립과 체제 전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서유럽은 유럽 지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1960년대 이후 익히 알려진 서구의 출산율 변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후, 대체 수준 아래에서 완만한 오르내림을 보인다. 2021년 서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룩셈부르크의 1.38과 프랑스의 1.80 사이의 좁은 범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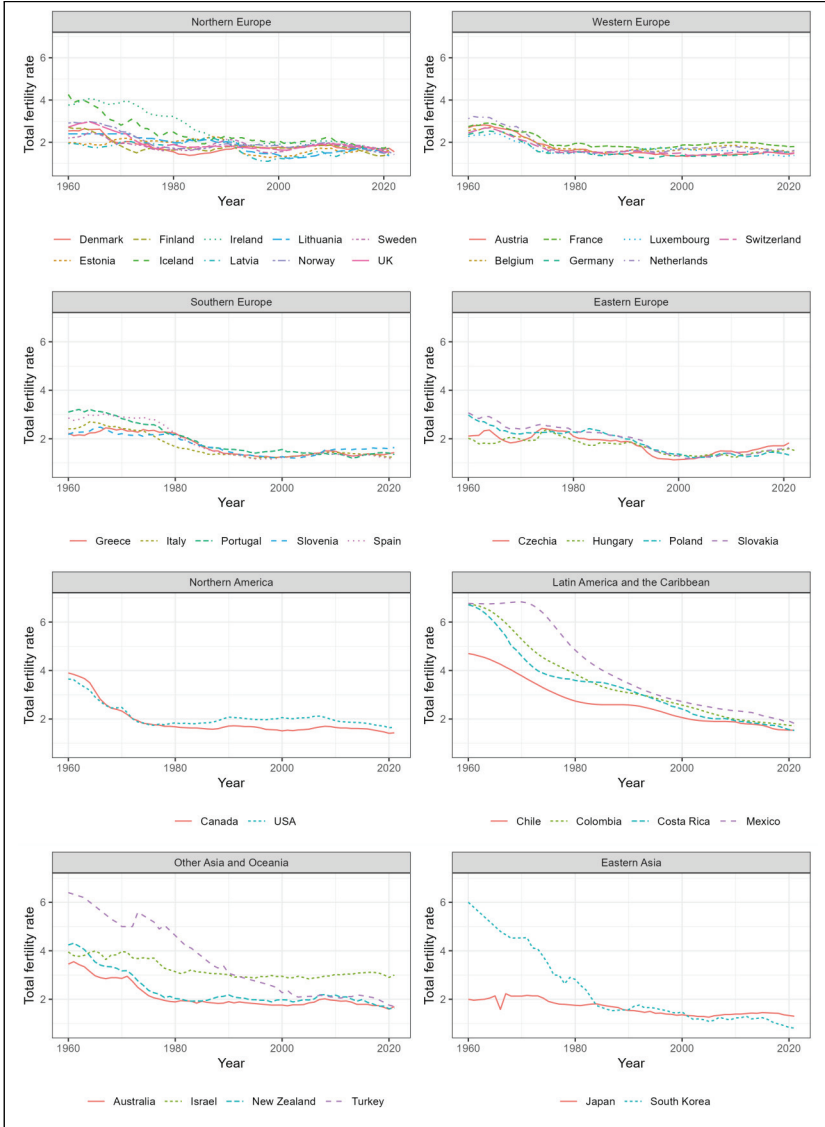
남유럽 국가들은, 1960~1980년의 합계출산율 수준과 추세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하락하여, 1990년대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슬로베니아만 2000년대 이후에 출산율 반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공통으로 관찰된다. 1980년대에 완만하게 감소하던 출산율이 1990년대의 독립과 체제 전환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2000년대 이후 반등하는 형태이다.

### 36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1960년 합계출산율이 각각 3.65와 3.90으로 유럽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 대체 수준 이하로 매우 빠르게 감소하였다. 두 국가는 한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2010년 이후 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중남미 지역의 1960년대 이후 출산율 추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험한 출산율 변동을 잘 보여준다.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여성 1인당 평균 6명 이상 출산에서 2명 이하로 감소하는 출산력 변천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그림 2-4] 지역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960~2021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기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북미와 중미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60~1980년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감소, 1980~2008년 횡보, 2010년 이후 출산율 감소 등,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와 유사한 추세를 갖는다. 반면 터키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합계출산율 6.0 이상에서 2.1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와 비슷한 추세를 갖는다. 이스라엘은 예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3.95에서 2021년 3.00으로 하락하여, 60년 동안 매우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상반되는 출산율 추세를 보인다. 일본은 1960년에 이미 합계출산율 2.00을 기록했다. 1966년의 출산율의 일시적인 급감을 제외하면, 이후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완만하고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1966년의 출산율의 급감은 병오년 당시 적말띠 해에 여아 출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Kaku, 1975). 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는 유난히 두드러진다. 1960년 6.0 수준에서 1983년 2.06을 기록할 때까지 유례없이 가파른 하락을 보여준다. 이후 일본의 추세와 유사하게 나아가나 싶더니, 2001년 이후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추가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21년 0.8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 나. 2010년 이후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추세

지난 2008~2009년 발생한 경제 위기 이후의 출산율 변동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 추세를 [그림 2-5]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과 2021년 합계출산율과 그 차이를 <표 2-1>에 작성하였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헝가리, 한국은 2022년 최신 자료를 적용하였다.

먼저 그림의 경우, 가로축의 중간지점인 2010년 이후 출산율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이 2010년 이후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일부 경험하였지만, 2016년 이후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추세를 쫓아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0년 이후에는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 후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효과는 2021년 출산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북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대비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2020년에 비해 2021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국가가 더 많이 관찰된다. 복지제도가 우수한 노르딕 국가에서 팬데믹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출산율 상승이 관찰되기도 했다(Nisén et al., 2022).

다수의 국가에서 팬데믹 초기 수개월 동안 출산율의 급감을 겪은 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 출산율이 반등하고,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는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Sobotka et al., 2023). 수개월 내 발생하는 급격한 출산율 변동은 연 단위로 집계되는 합계출산율 작성 과정에서 상쇄되어 명백히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팬데믹 이후 발생하는 출산율 반응의 시기와 수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국의 방역 정책은

물론, 가족과 출산 관련 문화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지역마다 일부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세가 2020~2022년 사이에 꺾이는 것이 관찰되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코로나19와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출산율 변동으로 간주하고, 2020년 이후 변동은 되도록 설명하지 않는다.

서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세는 급격한 변동이 없는 모습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지역 내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2010년 이후 완만히 상승하는 반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는 완만히 감소하였다. 지역 전체를 고려하면 2015~2016년 이후 출산율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남유럽과 동유럽은 모두 1990년대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았었다. 2000년대 이후 남유럽의 슬로베니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공통으로 오르내림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반등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경제 위기즈음부터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00년 후반 경제 위기 이후 합계출산율이 분명하게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이 추세는 2021년 팬데믹에 대한 출산율 반응이 있기 전까지 이어졌다. 특히 2015년 즈음 출산율 감소 추세가 좀 더 빨라진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우 빠른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이 더욱 빠르게 감소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서 합계출산율 추세가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감소한 것이 관찰된다. 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우 2000년대에 출산율이 완만한 상승 또는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

향을 덜 받았던 지역이다. 오히려 수년 뒤 2015년부터 두 나라 모두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45에서 2018년 1.42까지 매년 0.1씩 감소하였지만, 2019년 이후 1.36으로 다시 1.3대로 진입하였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2015년 1.24에서 빠르게 하락하여 2022년 0.78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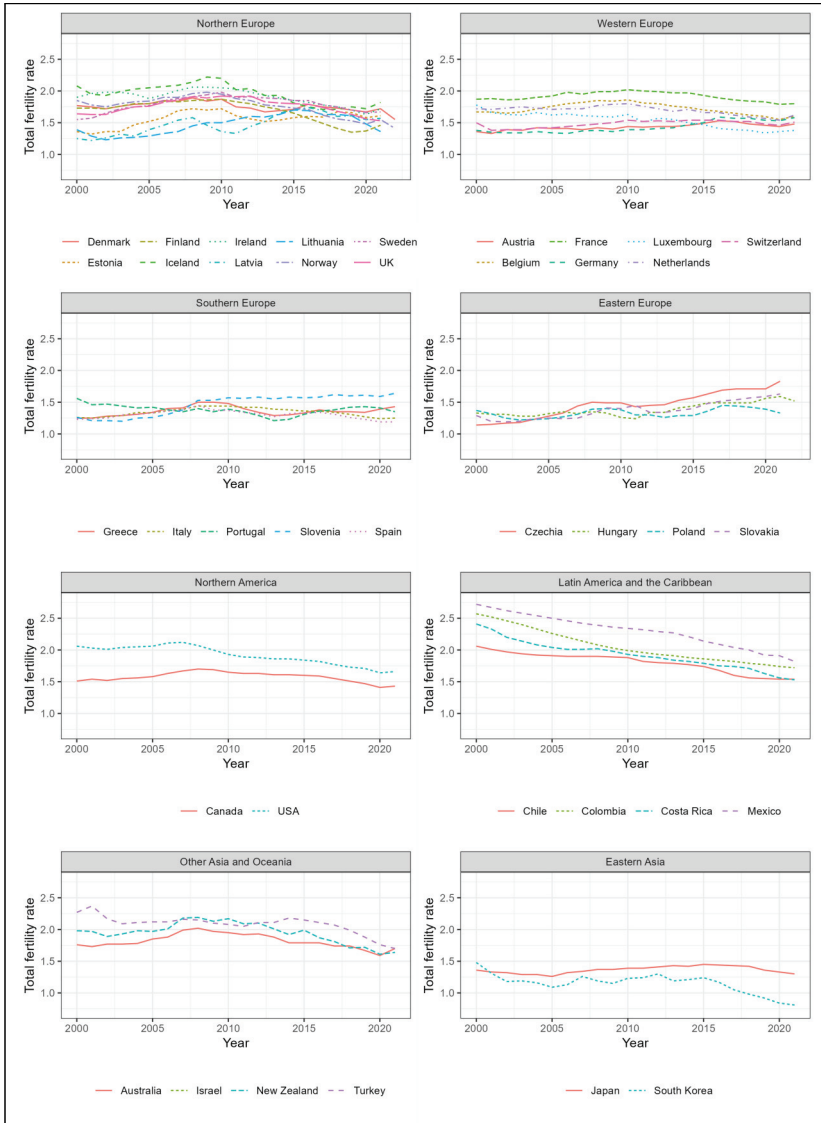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출산율 변동에 관해 요약하자면, 대다수 나라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동유럽을 비롯하여 과거 사회주의 역사를 공유한 나라에서 1990~2000년대에 매우 낮았던 출산율이 반등하여 일부 상승하는 추세를 경험하였다. 그 외 지역은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2021년(또는 2022년)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OECD 38개 회원국 중에 31개국이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출산율 상승을 경험한 국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이상 7개국이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공통점이 있다. 출산율 하락은 노르웨이 0.54, 뉴질랜드 0.53, 멕시코 0.52, 핀란드 0.41, 그리고 한국 0.45 순이었다.<sup>4)</sup> 흥미롭게도 복지제도와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남반구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출산율 감소가 관찰되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수준에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세 나라뿐이었다. 한국은 2021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대비 합계출산율 감소율 역시 가장 높았다.

4) 노르웨이와 한국은 2010년 합계출산율을 2022년 합계출산율과 비교하였다.

## 42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그림 2-5] 2000년 이후 지역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2000~202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표 2-1〉 OECD 주요 회원국의 2010년과 2021년(또는 2022년) 합계출산율

(단위: 명, %)

지역	국가명	2010	2021*	변화	변화율(%)
북유럽	Denmark	1.87	1.55	-0.32	-17.1
	Estonia	1.72	1.61	-0.11	-6.4
	Finland	1.87	1.46	-0.41	-21.9
	Iceland	2.20	1.82	-0.38	-17.3
	Ireland	2.05	1.72	-0.33	-16.1
	Latvia	1.36	1.57	0.21	15.4
	Lithuania	1.50	1.36	-0.14	-9.3
	Norway	1.95	1.41	-0.54	-27.7
	Sweden	1.98	1.67	-0.31	-15.7
	UK	1.92	1.53	-0.39	-20.3
서유럽	Austria	1.44	1.48	0.04	2.8
	Belgium	1.86	1.60	-0.26	-14.0
	France	2.02	1.80	-0.22	-10.9
	Germany	1.39	1.58	0.19	13.7
	Luxembourg	1.63	1.38	-0.25	-15.3
	Netherlands	1.80	1.62	-0.18	-10.0
	Switzerland	1.54	1.51	-0.03	-1.9
남유럽	Greece	1.48	1.43	-0.05	-3.4
	Italy	1.44	1.25	-0.19	-13.2
	Portugal	1.39	1.35	-0.04	-2.9
	Slovenia	1.57	1.64	0.07	4.5
	Spain	1.37	1.19	-0.18	-13.1
동유럽	Czechia	1.49	1.83	0.34	22.8
	Hungary	1.26	1.52	0.26	20.6
	Poland	1.38	1.33	-0.05	-3.6
	Slovakia	1.40	1.63	0.23	16.4
북미	Canada	1.65	1.43	-0.22	-13.3
	USA	1.93	1.66	-0.27	-14.0
중남미	Chile	1.88	1.54	-0.34	-18.1
	Colombia	1.99	1.72	-0.27	-13.6
	Costa Rica	1.93	1.53	-0.40	-20.7
	Mexico	2.34	1.82	-0.52	-22.2
오세아니아	Australia	1.95	1.70	-0.25	-12.8
	New Zealand	2.17	1.64	-0.53	-24.4
서아시아	Israel	3.03	3.00	-0.03	-1.0
	Turkey	2.08	1.70	-0.38	-18.3
동아시아	Japan	1.39	1.30	-0.09	-6.5
	South Korea	1.23	0.78	-0.45	-36.6

주: \* Denmark, Norway, Hungary, South Korea는 2022년 최신 자료.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통계청. (2022). 합계출산율. <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3. 8. 3 인출.

## 2.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등 기간 출산력 지표는 출산 시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Bongaarts & Feeney, 1998).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출산 시기의 변화뿐 아니라, 템포 효과의 수준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류출산 DB(humanfertility.org)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주요 지역별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추세를 살펴본다. 이는 연령별 출산율을 연령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출생아 모의 연령을 단순 평균하는 OECD 가족통계 DB의 평균 출산연령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DB에 OECD 회원국의 자료가 수록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세부 지역과 국가의 수가 감소하였다.

### 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출생아의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주요 국가별 2000년 이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을 비교하였다.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평균 출산연령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평균 출산연령의 수준과 상승하는 추세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북유럽에서는 평균 출산연령의 꾸준한 상승과 함께 국가 간 차이가 줄고 수렴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예컨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2000년에는 리투아니아의 26.6세부터 스웨덴의 29.8세까지 약 3.2세 정도 국가 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리투아니아의 30.4세부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31.0세까지 약 0.6세로 이내로 좁혀졌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 나타난 평균 출산연령의 급격한 상승이 주목할 만하다.

서유럽 역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이 관찰된다. 국

가별 차이도 관찰되는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에 비해 평균 출산연령이 상승하는 추세가 더 가파르다. 다만 2015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출산연령 상승이 미약하게 완만해졌다. 특히 스위스는 유럽 국가에서도 드물게 2017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2.0세를 넘었으며, 2021년은 32.3세로 확인된다.

남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미 2000년도 이전에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0세가 넘었다. 스페인은 2016년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2세를 넘은 국가가 되었으며, 이탈리아도 2018년에 이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에 비슷한 평균 출산연령을 보였던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는 조금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이웃한 스페인의 추세를 빠르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슬로베니아는 동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동유럽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는 2000년에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 출산연령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2008년쯤부터 상승 추세가 완만해졌다. 이 지역의 세 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0.0세 미만이며, 가장 높은 체코도 2021년 30.4세에 불과하여, 유럽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 있다. 사실 슬로베니아 역시 동유럽 국가 중 체코, 헝가리와 인접하고 있으며, 평균 출산연령의 추세도 유사하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1.4~1.7세의 간격이 유지되며 나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5~2006년 미국에서 출산연령의 상승이 잠시 완화되는 듯하였지만,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추세가 대비된다.

2000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한국이 28.9세, 일본이 29.7세로 한국이 0.8년 낮았다. 하지만 2008년 두 나라 모두 29.8세를 기록하더니, 이후 한국의 출산연령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추세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그 상승 추세도 가파른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승 추세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국가 중 가장 가파르며, 2020년 32.9세를 기록하여 일본의 31.6세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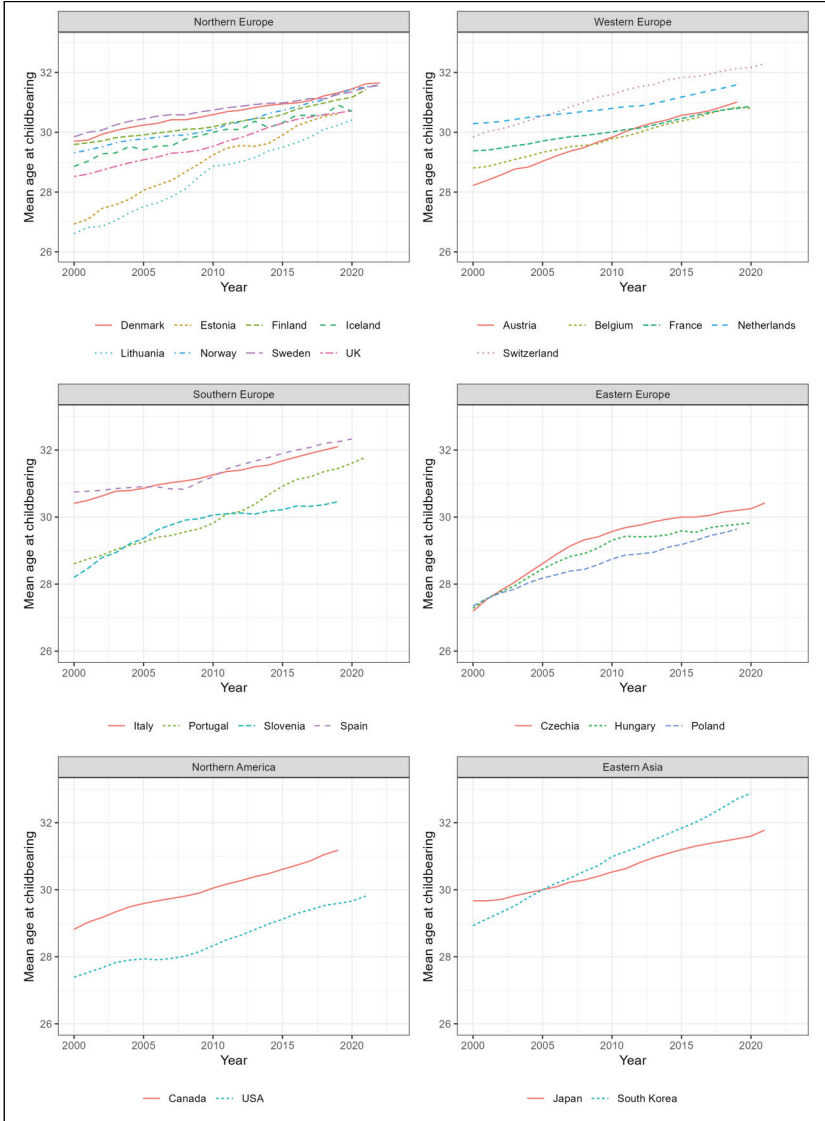
## 나.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어서, 그 추세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 출산의 수준(quantum)과 시기(tempo)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 출산연령의 수준과 기울기, 특히 기울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평균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출산력 수준이 낮게 형성되고, 상승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합계출산율의 상승 추세와 연관된다.

예컨대, 동유럽 국가와 기타 일부 국가들에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의 상승 추세가 완만해지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기간의 추세와 유사하다.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시기는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와 중복된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극심하게 낮은 출산율은 한국과 일본 여성의 높은 평균 출산연령 탓이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높고 상승 추세도 가장 가파른 한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림 2-6] 주요 국가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2000~2022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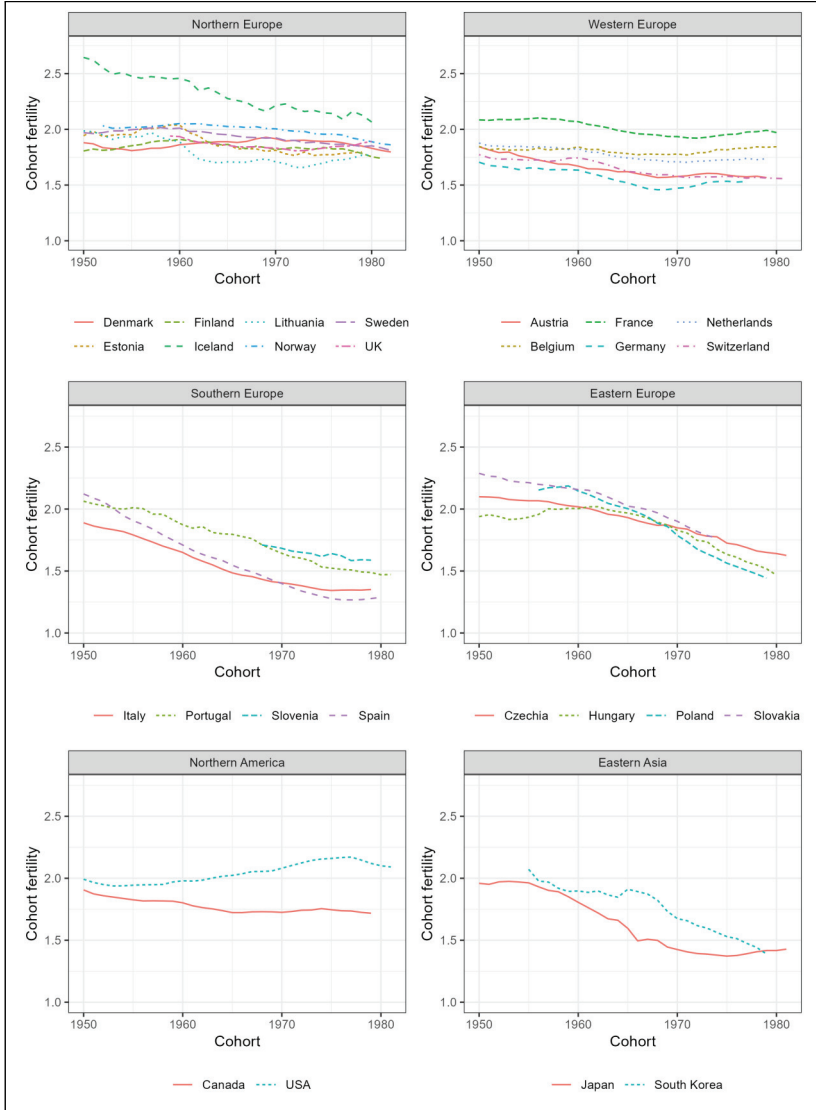
### 3. 코호트 출산율 비교

#### 가. 40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 출산율의 수준과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1950년생 코호트 여성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을 살펴보자. 1980년생 또는 자료가 가용한 최근 출생 코호트까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북유럽의 경우 1950년 코호트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1.7~2.0으로, 아이슬란드(2.65)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이미 대체 수준 이하를 기록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최근 1980년 코호트까지 출산율의 장기적인 감소를 경험하였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는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로 2.0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 중·후반 출생 코호트에서 출산율이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된다. 일부 학자들은 젠더 측면의 사회 발전이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0a; Myrskylä et al., 2009;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이때 많은 경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이 그 근거로 활용되곤 한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세는 최근 수년간 진행된 것으로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다(Frejka et al., 2018; Hellstrand et al. 2021; Hellstrand et al., 2022). 코호트 출산율이 템포 효과에 의한 왜곡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세는 최소한 1970년대 후반에 출생한 여성 코호트에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7] 주요 국가별 40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1950~1981년생



주: 한국은 2000~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자료에서 40~44세 여성의 평균 총출생아수로 작성.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서유럽 국가들의 코호트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50년생 여성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1.7~2.1 범위에 있다. 이후 최근 출생 코호트로 이동하면서 출산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간에 따른 오르내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네덜란드는 두 집단 사이에 있다. 언어, 종교, 지리 등 문화적 요인과 출산력 수준의 유사성은 과거 전통적인 인구변천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하다(Coale, 1973; Casterline, 2001).

남유럽 국가는 북유럽과 서유럽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1990년대부터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율 기록한 국가들로 유명하다. 세 나라 모두 1950년생 여성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 정도였지만, 이후 1970년대 중반 출생 코호트까지 꾸준하고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1975년 출생 코호트를 전후로 코호트 출산율 내림세가 멈추거나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나라는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지난 10~20년간 이를 상쇄할 만큼 많은 청년인구가 국제 인구가동을 통해 유입되었다(Billari & Dalla-Zuanna, 2013; Wilson, Sobotka, Williamson & Boyle, 2013).

동유럽 국가 역시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에 비교할 때,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은 약 10~15년 늦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후 출산율 감소세는 더욱 가팔랐

다. 일례로 헝가리와 폴란드는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서 1.5 이하로 하락하기까지 채 20년이 소요되지 않았다. 북유럽과 서유럽 대다수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이 여전히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동유럽 지역은 1990년대에 체제 전환을 경험하며 매우 급격한 출산력 하락을 경험하였다. 일자리와 교육 등 보다 나은 기회를 위해 많은 청년인구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주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Philipov & Kohler, 2001; Philipov, 2003; Sobotka, 2003).

북미 지역은 유럽 지역과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77년생 이후에서야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 1950년생 여성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은 두 나라 모두 대체 수준 아래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격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97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에서는 평균 0.4명 이상 차이가 난다. 미국의 출산율 추이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 명확히 구별된다.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계층에 따른 차별출산력 차이가 큰 편이다. 비히스패닉 백인 여성의 출산율이 대체 수준보다 낮지만, 히스패닉과 흑인 여성 그리고 이민 여성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esthaeghe & Neidert, 2006).

동아시아 지역은 남부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을 갖는 곳이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여성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1.9~2.0 수준이었다. 하지만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1955년생 이후 감소하여 1975년생 코호트에서 1.37로 저점을 기록한다. 1981년생 코호트에서 1.43으로 일부 반등하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요약하면, 40세 코호트 출산율의 추이는 지역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대체로 북유럽과 서유럽 지역은 횡보 또는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지만, 남유럽과 동유럽, 동아시아 지역은 가파른 내림세를 경험하였다. 미

주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가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코호트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197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부터 출산율 추이가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율 하락이 정체되거나 완만한 반등을 경험한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벨기에, 미국, 일본이다. 이 국가의 공통점은 국제이주의 전통적인 목적지 국가(프랑스, 벨기에, 미국)이거나,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일본에서 코호트 출산율 하락이 정체된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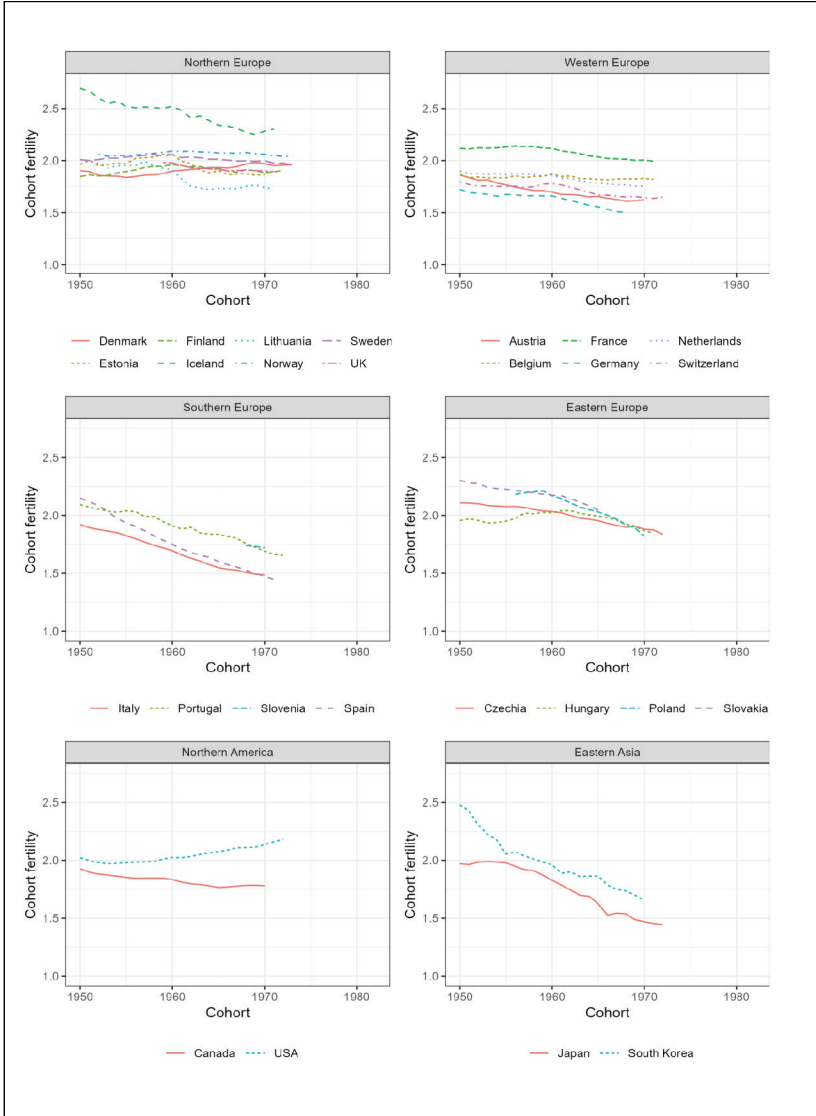
## 나. 완결출산율: 49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완결출산율은 가임기간이 지난 여성의 생애 동안의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해도 상대적인 분석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1950~1971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49세 코호트 출산율 추세를 [그림 2-8]에 작성하였다. 그림에서 가로축을 앞선 40세 코호트 출산율 추세와 함께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완결출산율 추세는 앞에서 살펴본 40세 코호트 출산율 추세와 거의 같다. 국가별 완결출산율의 코호트 출산율의 수준과 변화는 모두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해당 코호트에서 40세 이후 출산한 출생아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49세 코호트 출산율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1971년생까지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

같은 이유로 앞에서 살펴본 40세 코호트 출산율 추세를 통해 향후 완결출산율 추세를 쉽게 전망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동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체코의 출산율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림 2-8] 주요 국가별 여성의 완결출산율: 1950~1971년생 49세 여성



주: 한국은 2000~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자료에서 49~53세 여성의 평균 총출생아수로 작성.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 4.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출산율의 수준과 시기의 변화를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2-9]는 2020년 주요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을 그리고, 이를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의 오름차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인류출산 DB에서 자료가 가용한 OECD 국가들만 고려하였다. 그림 상단 미국의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낮고, 아래로 갈수록 높아지는 국가 순이다. 국가별 음영의 면적은 합계출산율과 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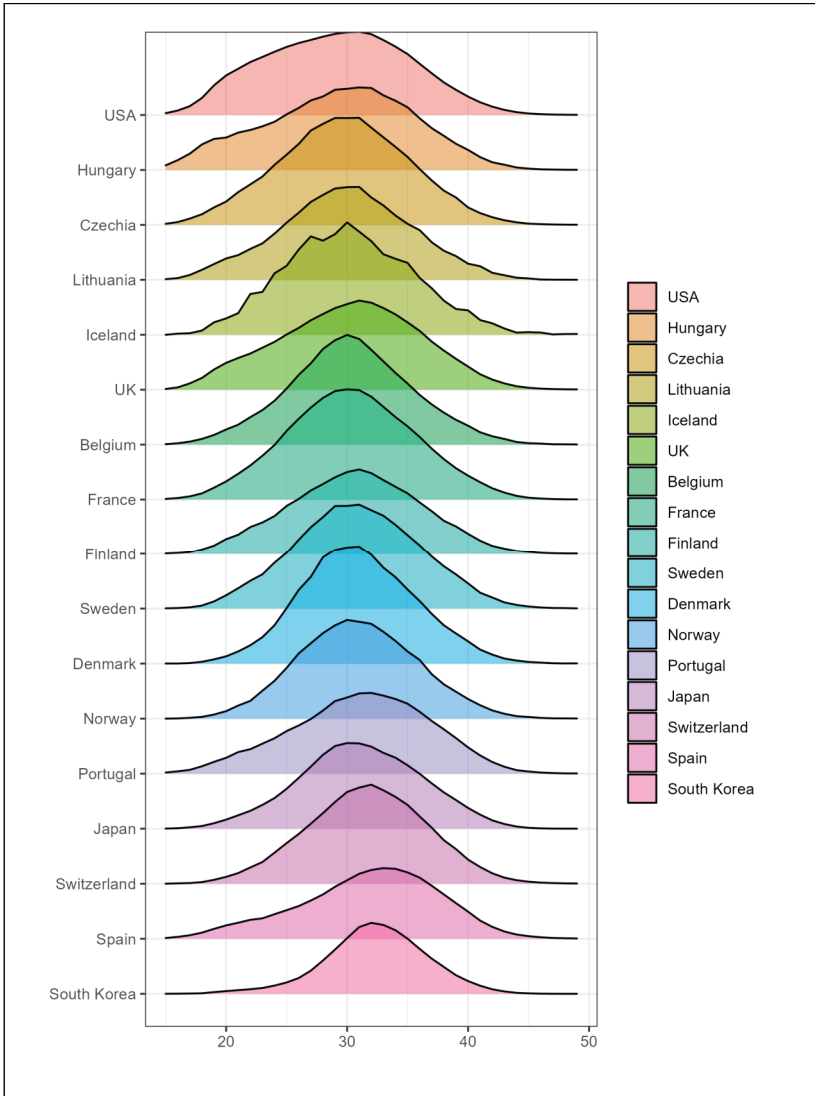
미국과 헝가리의 경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지만, 특히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높은 출산율이 특징이다. 반면 체코와 벨기에, 특히 프랑스의 경우 30세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보이며 정규분포에 가까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높아 제일 아래에 있다. 같은 이유로 연령별 출산율 곡선의 정점이 32세로 우측에 치우쳐 있는 왼꼬리(left-skewed) 분포를 보인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로 연령별 출산율 곡선 아래 면적이 가장 작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10대는 물론 20대 중후반까지 출산율이 낮고 40대 이상의 출산율 역시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은 일본(1.34), 스페인(1.23)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연령별 출산율은 빈약한 것이 확인된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일본은 분포의 정점이 30세에 위치하며, 20대 초중반을 비롯하여 전 연령대에서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스페인 역시 10대부터 20대 초중반까지 출산율이 높고 30대 후반과 40대 출산율이 높아 넓게 퍼진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그림의 가운데쯤에 있는 합계출산율 1.79의 프랑스와 비교하면(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우리나라의 출산율 분포의 편향되고 야윈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2-9] 2020년 주요 국가별 연령별 출산율 분포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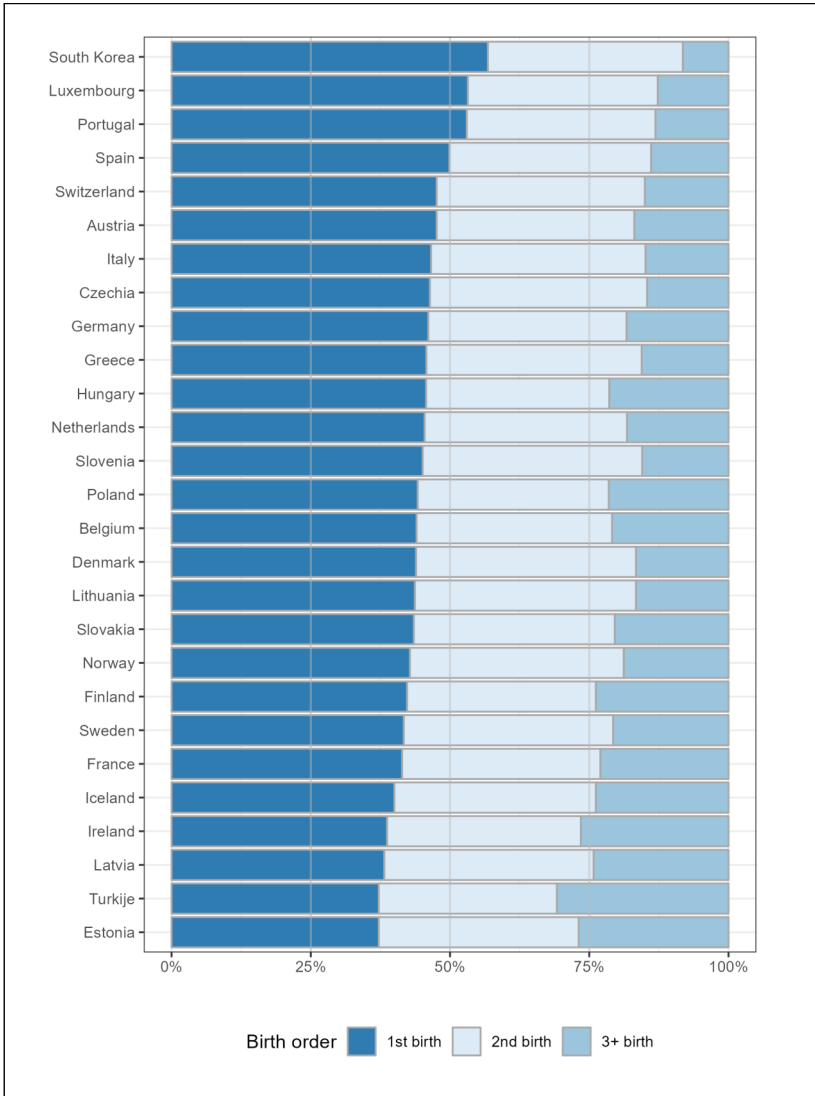
## 5.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는 출산력 수준과 가족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생아 분포는 가족의 크기를 의미하며, 부모 관점에서 양육 부담의 정도, 자녀로서는 형제·자매의 수를 뜻하기도 한다. OECD 가족통계 DB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를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으로 구분한 후, 그 비중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지난 2021년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출생순위별 분포는 첫째아 56.8%, 둘째아 35.0%, 셋째아 이상이 8.2%였다. 전체 출생아의 91.8%가 첫째아 또는 둘째아로 구성된다. 한국의 첫째아 비중 56.8%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첫째아 비중을 토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더니 그림의 제일 위에 위치하였다. 첫째아의 비중이 전체 출생아의 반수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룩셈부르크(53.2%), 포르투갈(53.0%) 세 곳이었다. 흥미롭게도 세 국가의 2021년 합계출산율이 모두 1.4 미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이었다. 반면 첫째아 비중이 가장 낮은 에스토니아(37.2%), 튀르키예(37.2%), 라트비아(38.2%) 등은 모두 합계출산율이 최소 1.5 이상 되는 높은 국가들이었다.

한국의 남다른 출생아 분포는 셋째아 이상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8.2%밖에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낮은 룩셈부르크의 12.7%와도 4.5%p 차이가 나며, 가장 높은 튀르키예의 30.8%와는 22.6%p 차이가 난다. 코호트 측면에서 출생아의 분포는 무자녀 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럽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생애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국가별 코호트마다 4~25% 존재한다(Sobotka, 2017).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무자녀 여성인구를 고려하면, 실제 셋째아 이상 자녀의 비중은 더욱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0] 2021년 OECD 국가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 6. 혼외출산 비중

혼외출산의 증가는 제2차 인구변천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인구학적 특징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혼외출산의 비중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와 사회적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수요를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다.

가족의 다양성과 출산력의 변화에 비해, 혼외출산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혼외출산 비중이 2021년까지 전체 출생아 중 3% 또는 그 미만에 머물러 있다(통계청, 2022). 그나마 2000년 1.2%에서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그림 2-11] 참조).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차치하고, 연도별 변화 자체가 크지 않아 국제 비교를 시도하기 어렵다. 반면 다른 지역의 국가에서 혼외출산의 비중은 너무 다양하여 일관된 유형이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OECD 회원국의 2000년 이후 혼외출산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과 국가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빠르게 상승하거나 매우 느리게 상승하여 인지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만 존재한다. 북유럽은 국가 간 혼외출산 비중이 꽤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2020년 리투아니아의 혼외출산은 27.0%로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편이지만,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는 2019년 69.4%를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국가마다 혼외출산 상승이 관찰되지만, 그 폭은 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서유럽 역시 국가 간 혼외출산 비중의 차이가 작지 않은 편이지만, 국가 내 상승 추세는 유사하다. 가장 높은 프랑스가 2000년 43.6%에서 2020년 62.2%까지 18.6%p 상승하였고, 가장 낮은 스위스 역시 2000년 10.7%에서 2020년 27.7%까지 17.0%p 상승하였다. 지역 내에서는 네덜란드에서 혼외출산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남유럽은 지난 20년간 혼외출산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2000년 22.2%에서 2020년 57.9%로 무려 35.7%p 증가하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혼외출산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스에서도 혼외출산 비중이 2000년 4.0%에서 2020년 13.8%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래 한국의 혼외출산 비중 변화를 전망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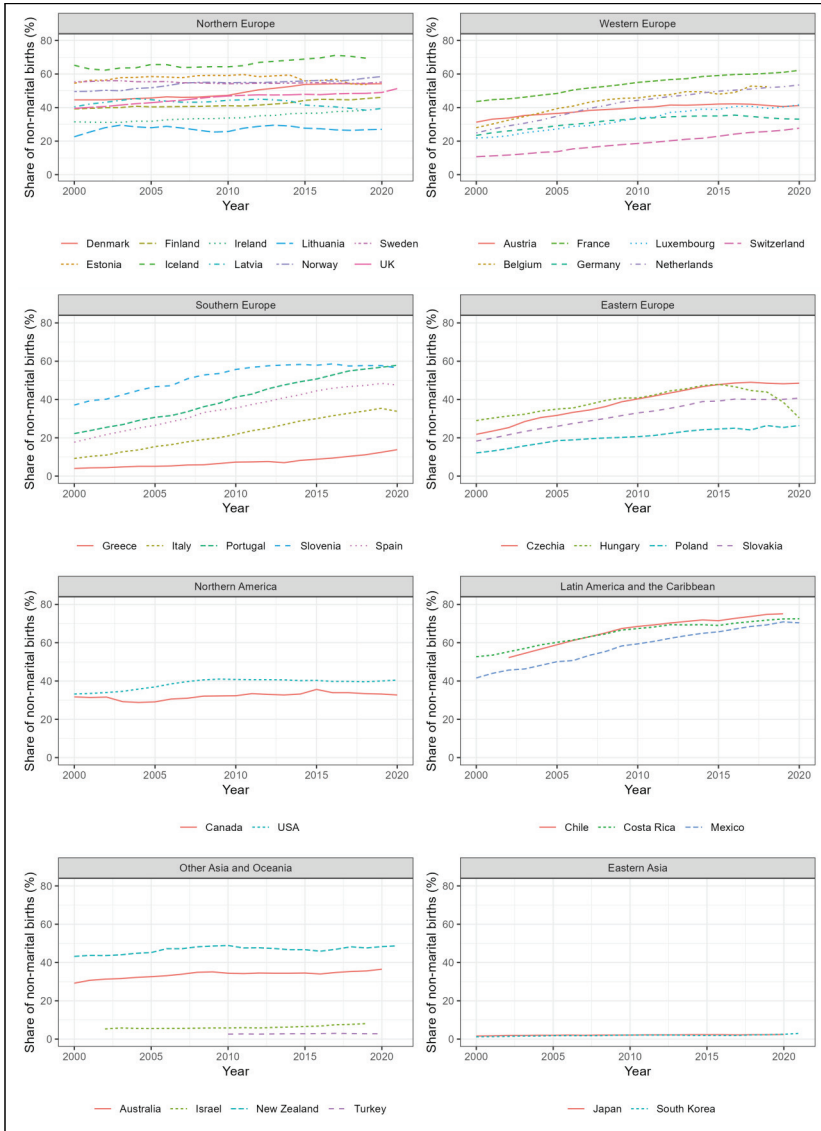
남유럽 수준은 아니지만, 같은 기간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도 혼외출산이 확산하였다. 한편 헝가리의 혼외출산 비중이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헝가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족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남미는 혼외출산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20년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혼외출산 비중은 각각 72.5%와 70.4%로 확인된다. 같은 해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36.5%와 48.3%를 기록하였다. 반면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일본, 한국은 혼외출산 비중이 모두 1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곳들이다. 특히 튀르키예, 일본, 한국은 모두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른 지역들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혼외출산 비중의 연도별 추세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혼외출산 비중이 50~70%로 높은 수준에 이른 일부 국가들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과거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다. 혼외출산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국가 간 횡단 비교에서는 한국과 일본처럼 혼외출산 비중이 낮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관찰되지만, 국가 내 종단 비교에서는 반대로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가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로 연결된다.

60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그림 2-11] OECD 회원국 주요 지역과 국가별 혼외출산 비중, 2000~202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표 2-2〉 OECD 주요 회원국의 2000, 2010, 2020년 혼외출산 비중

(단위: 명, %)

지역	국가명	2000년	2010년	2020년	2020-2000
북유럽	Denmark	44.6	47.3	54.2	9.6
	Estonia	54.5	59.1	-	-
	Finland	39.2	41.1	46.1	6.9
	Iceland	65.2	64.3	-	-
	Ireland	31.5	33.8	-	-
	Latvia	40.4	44.4	39.5	-0.9
	Lithuania	22.6	25.7	27.0	4.4
	Norway	49.6	54.8	58.5	8.9
	Sweden	55.3	54.2	55.2	-0.1
United Kingdom	39.5	46.9	49.0	9.5	
서유럽	Austria	31.3	40.1	41.2	9.9
	Belgium	28.0	45.7	-	-
	France	43.6	55.0	62.2	18.6
	Germany	23.4	33.3	33.1	9.7
	Luxembourg	21.9	34.0	41.6	19.7
	Netherlands	24.9	44.3	53.5	28.6
	Switzerland	10.7	18.6	27.7	17.0
남유럽	Greece	4.0	7.3	13.8	9.8
	Italy	9.2	21.8	33.8	24.6
	Portugal	22.2	41.3	57.9	35.7
	Slovenia	37.1	55.7	56.5	19.4
	Spain	17.7	35.5	47.6	29.9
동유럽	Czech Republic	21.8	40.3	48.5	26.7
	Hungary	29.0	40.8	30.4	1.4
	Poland	12.1	20.6	26.4	14.3
	Slovak Republic	18.3	33.0	40.7	22.4
북미	Canada	31.7	32.3	32.7	0.9
	United States	33.2	40.8	40.5	7.3
중남미	Chile	-	68.5	-	-
	Costa Rica	52.7	67.4	72.5	19.8
	Mexico	41.6	59.4	70.4	28.8
오세아니아	Australia	29.2	34.4	36.5	7.3
	New Zealand	43.2	48.9	48.3	5.1
서아시아	Israel	-	5.8	-	-
	Türkiye	-	2.6	2.8	-
동아시아	Japan	1.6	2.1	2.4	0.8
	Korea	1.2	2.1	2.5	1.3

주: Columbia는 유효한 자료 없어 생략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발생한 출산율 변동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산율 변동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경제 위기 전후의 출산율 추세를 주요 지표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 측면에서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의 설명에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과 젠더 혁명 이론이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두 관점이 제시하는 출산율 전망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이 출산율의 점진적인 감소 또는 최소한 지속적인 저출산을 암시하는 것에 비해 젠더 혁명 이론은 성평등 수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출산율의 반등까지 기대한다. 두 가지 이론적 전망 중 어느 쪽이 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출산 수준과 시기의 변화는 템포 효과 등을 초래하여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경제 위기의 단기적·장기적 효과를 구분하기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출산율 변동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지표나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반적인 출산율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출산율 지표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지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1960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다. 과거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2000년대 일부 합계출산율 반등이 관찰되지만, 2010년대 이후 다시 정체 또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동유럽의 일부 체제전환국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40세 코호트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호트 측면에서 보면, 미국,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간과 코호트 지표 모두 인구 대체 수준 아래



에서 정제하거나 완만한 감소세가 전망되는 곳이 많았다.

출산율 추세의 변동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팬데믹 초기 이후 단기간에 발생한 롤러코스터 같은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면, 출산율의 급격한 반등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각국 정부의 가족과 양육정책 역시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젠더 혁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모른다. 안타깝게도 출산율의 급격한 반등이 조만간 발생하는 곳이, 우리나라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출산 수준과 시기 등 모든 지표가 출산율 하락을 가리키고 있으며, 연령별 출산율과 출생순위별 출생아의 분포 역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이미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에 이른 만큼, 더 이상 서구와 선진국의 경험을 따라 하기도 어렵다. 국제 비교와 꾸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여러 사례들을 접목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 제3장

###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 변화와 특징

제1절 개요

제2절 출산력 결정 모형

제3절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

제4절 초저출산 결정 요인의 특징

제5절 소결



## 제3장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 변화와 특징

### 제1절 개요

제3장은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를 검토한다. 우선 출산력 결정 모형을 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문화적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제2절). 제3절에서는 출산력 결정 요인의 최근 변화를 사회경제적 조건, 가족정책의 효과성,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2~3절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근의 출산력 변화의 특징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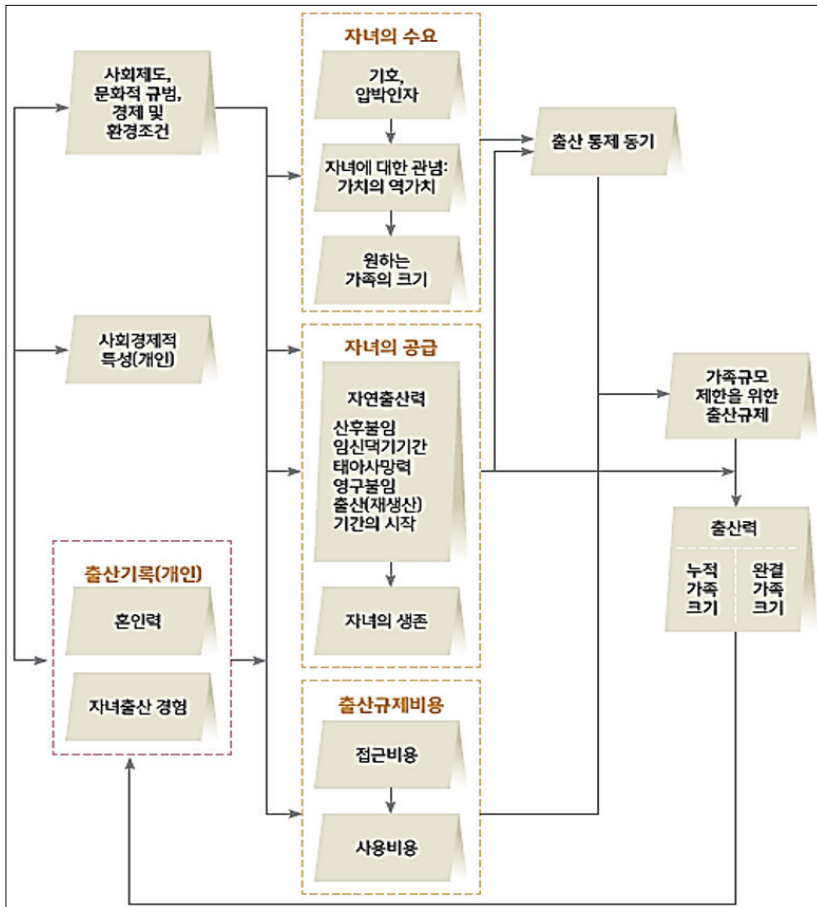
### 제2절 출산력 결정 모형

출산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임과 동시에 사회적 과정이다. 즉, 출산을 위해서는 성교, 임신, 분만 등 일련의 생물학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사회경제적·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뉘스는 출산력 변천 이전에 서유럽에서는 혼인 시기 조절을 통한 출산 조절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조절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해이널의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는데(Hajnal, 1965),<sup>5)</sup> 이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가 출산을 결정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물학

5) 단, 최근의 연구들은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유배우 출산율 조절이 출산율 조절의 주된 메커니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출산 조절이 출산력 변천(fertility transition) 이전에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준다(Lundh et al., 2014; Tsuya, Wang, Alter & Lee, 2010).

적·사회적 요인들의 이해에 바탕을 둔 모형이 필요한데, 1990년대 초반 미국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이 제시한 모형([그림 3-1])은 이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모형은 출산이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사회경제적·생물학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미국국립과학원의 출산력 연구모형



자료: 권태환, 김두섭. (2002).

출산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분석해 왔는데, 크게 인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성평등(gender equity)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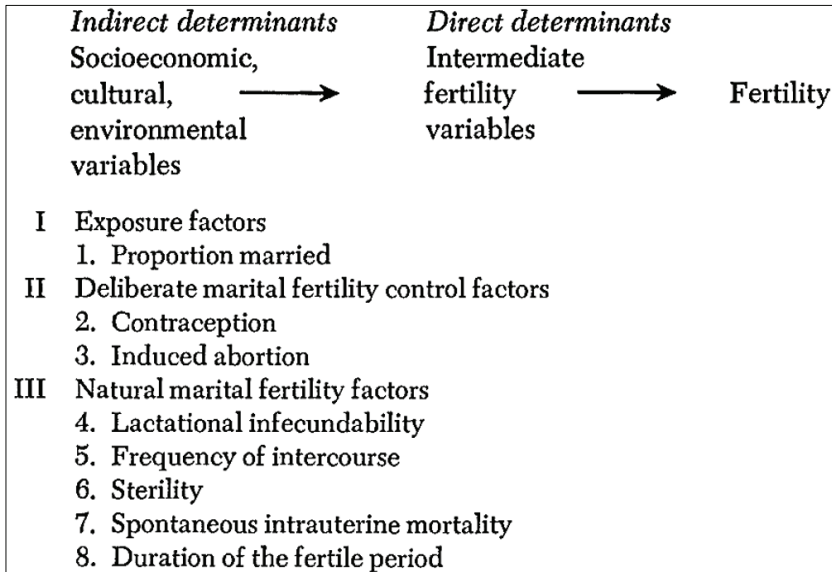
## 1. 인구학적 접근

출산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비스와 블레이크의 고전적인 모형에 따르면(Davis & Blake, 1956), 출산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1) 성관계에 대한 노출(Intercourse), 2) 수정 가능성(Conception), 3) 임신과 분만(Gestation). 전통적으로 노출은 혼인율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고, 수정 가능성은 생물학적인 가임력과 피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임신과 분만 가능성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자연유산(intrauterine mortality)과 인공임신중절(induced abortion)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출산율의 변화를 이와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접근을 근접요인 접근법(proximate determinants approach)이라 부르는데, 이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봉가르트는 데이비스와 블레이크의 모형을 수정·확장하여 출산의 근접요인을 1) 노출요인(Exposure factors), 2) 의도적 유배우 출산통제 요인(Deliberate marital fertility control factors), 3) 자연 유배우 출산 요인(Natural marital fertility factors)으로 구분했다(Bongaarts, 1978). 이 모형은 데이비스와 블레이크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데이비스와 블레이크 모형과 다르게 인공임신중절을 출산통제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생물학적인 가임력과 관련되는 자연 유배우 출산 요인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봉가르트의 모형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그림 3-2]와 같이 제시했다.

[그림 3-2] 봉가르트의 근접요인 접근법



자료: Bongaarts (1978) p.106.

봉가르트의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그림 3-3]에 인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13에서 1970년에 4.05로 34% 하락했는데, 혼인율 하락과 의도적 유배우 출산통제의 증가가 이러한 하락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 유배우 출산율 요인 중 하나인 모유수유 기간 감소는 출산율 하락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Bongaarts, 1978). 근접요인 접근법은 개발도상국들(developing countries)의 가족계획사업을 뒷받침하는 모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는데,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근접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또한 제시되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82).

[그림 3-3] 봉가르트의 근접요인 접근법으로 분석한 한국의 출산율

Measure	1960	1970	1970/1960
Total fertility rate (TFR) <sup>a</sup>	6.13	4.05	0.66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TM)	8.57	7.02	0.82
Current contraceptive use (u)	0.03	0.24	8.00
Contraceptive effectiveness (e)	0.85	0.85	1.00
Total induced abortion rate (TA) <sup>a</sup>	0.52	1.57	3.02
Lactational infecundability (i)	17.4	11.9	0.68
Index			
Index of proportions married ( $C_m$ )	0.72	0.58	0.81
Index of noncontraception ( $C_c$ )	0.97	0.76	0.78
Index of induced abortion ( $C_a$ )	0.97	0.84	0.87
Index of lactational infecundability ( $C_i$ )	0.56	0.66	1.18
Combined indexes ( $C_m \times C_c \times C_a \times C_i$ )	0.38	0.24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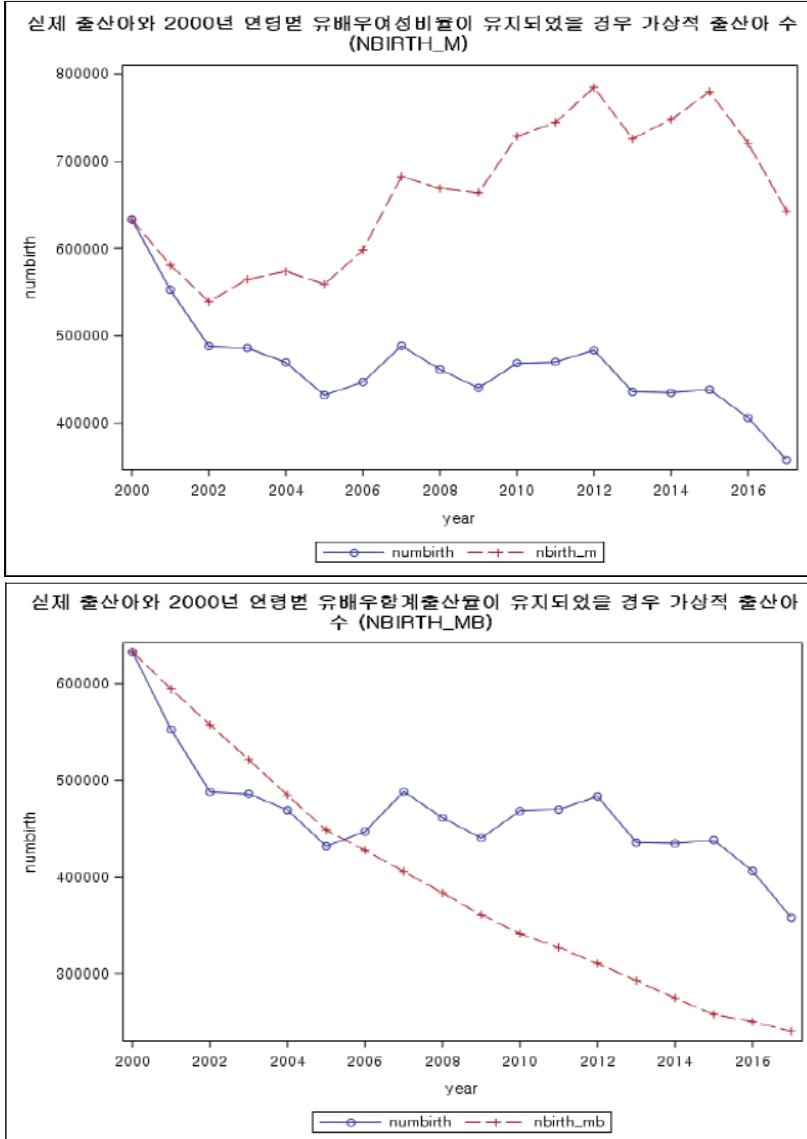
<sup>a</sup> Includes legitimate births and abortions to married women only.

자료: Bongaarts. (1978). p.123.

이러한 인구학적 모형들은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결혼을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약점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동거와 비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경우 근접요인 접근의 유용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노출요인에 결혼뿐만 아니라 동거(union)를 포함하는 확장 모형이 제시되었다(Bongaarts, 2015). 그런데, 비혼출산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근접요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의 출산율 변화를 유배우율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 변화로 분해분석한 이철희 교수의 연구가 있다(이철희, 2012; 이철희, 2019).

72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그림 3-4] 출생아 수 변화 분해 분석(2000~2017)



자료: 이철희. (2019). pp.55-56.

[그림 3-4]는 2000~2017년의 출생아 수 변화를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로 분해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별 유배우율이 2000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관찰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한편 출생아 수는 실제와는 다르게 2000~2017년에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보여주며,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2000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연령별 유배우율이 관찰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면 출생아 수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단, 2015년 이후에는 유배우율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생아 수가 하락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출산율 및 출생아 수 하락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주고, 2015년 이후의 가파른 출산율 하락에는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한국의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근접 요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장래 출산율 추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계봉오, 2016; 계봉오, 2021).

## 2. 경제학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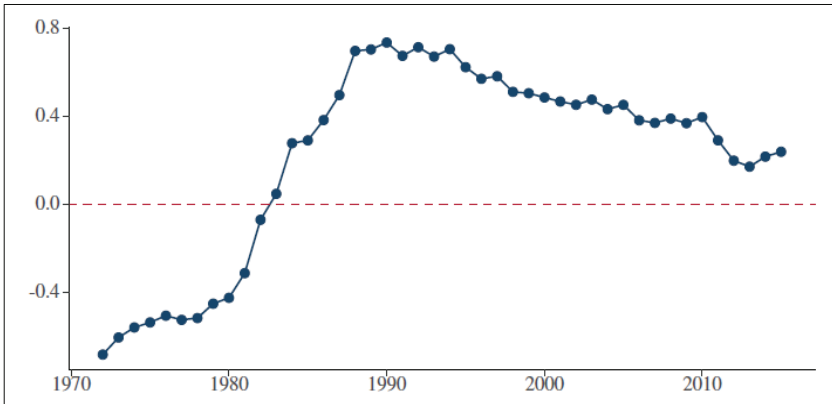
경제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출산을 수요와 공급, 그리고 비용의 함수로 이해한다(Easterline, 1975). 자녀의 수요는 효용(utility)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는 경제적, 심리적 효용을 포함한다. 한편, 자녀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가임력을 의미하며, 비용은 피임 등의 출산 억제 비용과 자녀 양육 비용을 포함한다.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가구원들 간의 노동 분업(division of labor)이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Becker, 1960). 전통적으로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여성은 양육 및 가사노동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역할 전문화가 가구 및 가구원의 효

용 극대화에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전문화의 이점이 약화되고 결혼의 효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성원 간 분업구조의 변화는 결혼 및 출산의 감소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가 결정적인 변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간 분업 구조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의 구조 변화 또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증가했으며, 가족 가치관의 변화 및 복지국가 발전에 따라 자녀에 의한 노년기 소득지원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줄이며,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양질 교환(quantity-quality trade off)이 발생한다(Becker, 1974).

경제학적 접근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여주어 왔다. 첫째, 소득과 출산의 부정적 관계이다. 미시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었으며(Jones & Tertilt, 2008), 국가의 1인당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거시적 증거 또한 존재한다(Doepke, Hannusch, Kindermann & Tertilt, 2023). 둘째, 양질 교환이다. 교육 수준의 향상과 출산율의 하락은 함께 진행되었으며, 출산율 하락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었다는 경험적 증거 또한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다(Delventhal, Fernández-Villaverde & Guner, 2021). 셋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출산의 관계이다. 대부분의 발전된 산업국가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출산율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Aaronson et al., 2021), 거시적인 비교 연구들 역시 198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패턴을 보고했다(Ahn

& Mira, 2002). 넷째, 여성 시간의 기회비용이다. 이는 여성의 임금과 관련이 있는데, 여성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고소득·고학력 여성들의 낮은 출산율로 연결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남성의 소득 증가는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여성의 소득 증가는 오히려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Hotz, Joseph, Klerman & Willis, 1997).

[그림 3-5] OECD 22개 국가의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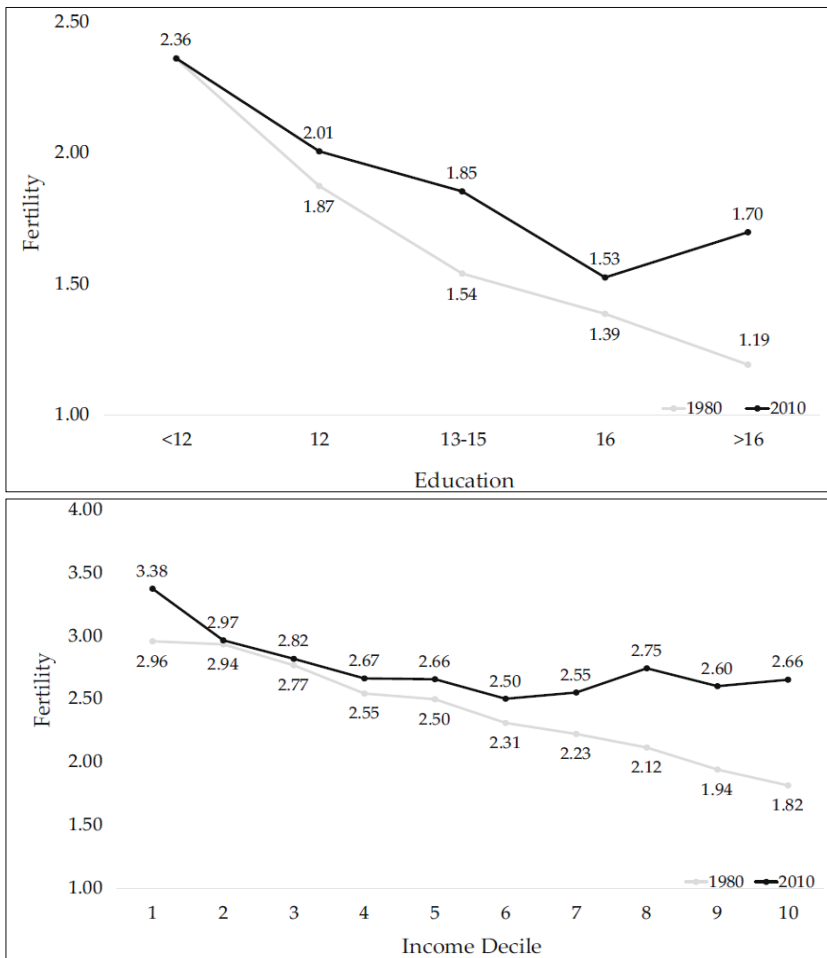


자료: Doepke et al. (2023). p.171.

단,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가 누적되고 있다. 안과 미라의 연구(Ahn & Mira, 2002) 이후 많은 연구들이 198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U-자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는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출산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3-5]는 1970년대 이후

22개 OECD 국가들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사라졌으며 1990년대 말까지 양의 상관관계가 강화되다가 2000년대 이후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되었다.

[그림 3-6] 미국의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1980~2010)



자료: Bar, Hazan, Leukhina, Weiss & Zoabi. (2018). p.431-432.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그림 3-6]은 미국의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에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존재했지만, 2010년에는 이들의 관계가 더 이상 선형적이지 않으며 대졸자 및 고소득층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거시적 비교 분석 또한 소득과 출산의 관계 또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데, 1980년에는 소득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이 높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Doepke et al., 2023). 또한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Bar, Hazan, Leukhina, Weiss & Zoabi, 2018).

둑케 등의 연구는(Doepke et al., 2023) 이러한 변화를 공교육의 확장 및 아동 노동 금지, 자녀 돌봄의 시장화, 전문직 여성들의 출산 시기 조절, 피임과 생식보조 기술의 활용 등의 결과로 해석했다. 공교육의 확장과 아동 노동의 금지로 인해서 출산으로 인한 가구의 편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했으며, 자녀 돌봄이 시장화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및 소득과 출산의 관계가 변화했으며, 생식 보조 기술 활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문직 여성들이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출산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사회문화적 접근: 제도 및 가치관

[그림 3-1]과 [그림 3-2]에 제시한 출산 연구모형들은 모두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출산의 결정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위에서 검토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제도와 가치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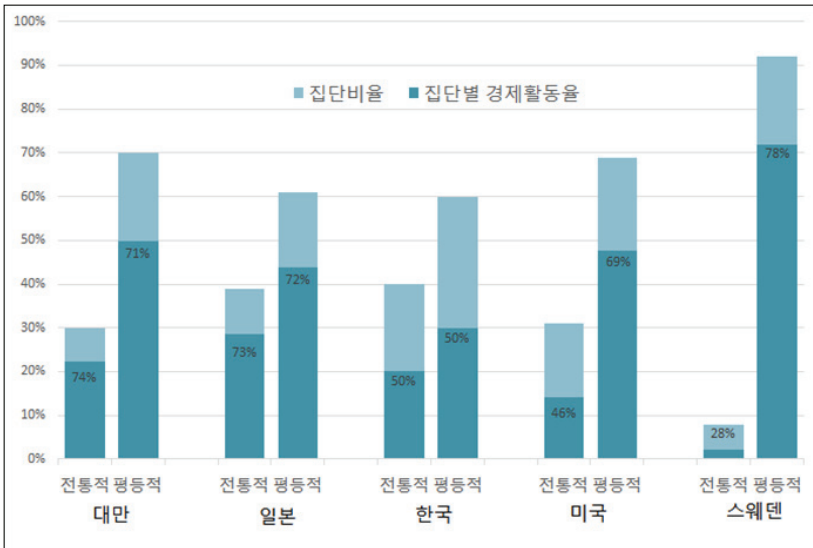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출산(혹은 출산 억제)이 인간의 의식적 행위의 결과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드(Goode, 1970)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conjugal family)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확산은 제1차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핵가족 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이해되어 왔다(Parsons, 1964). 이렇듯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 및 가치관은 전통 사회와 구분되는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제도 및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1차 인구변천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출산력 변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같은 언어권을 통한 출산통제 규범의 확산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만큼 혹은 그보다 출산력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는데(Cleland & Wilson, 1987; Coale & Watkins, 1986; Lesthaeghe, 1977), 이는 출산통제 행위라는 혁신적인 행동의 전파가 문화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Casterline, 2001).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또한 가치관과 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Lesthaeghe, 1995). 제2차 인구변천이론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대체 수준 이하 출산력(below-replacement fertility) 유지의 핵심적인 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가치관의 약화가 저출산 지속의 핵심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성평등주의의 진전에 따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는데(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McDonald, 2000a),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성평등주의적 제도의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서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성평등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동아시아 사회의 초저출산의 지속은 성평등주의적 제도의 발전이 미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영미·계봉오(2015)의 연구는 여성의 젠더의식 집단 구성비와 집단별 경제활동 참여율을 비교했는데(그림 3-7), 이 분석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은 평등적 젠더의식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미국과 스웨덴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젠더의식과 경제활동 참여율의 불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여성의 젠더의식 집단 구성비 및 집단별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김영미, 계봉오. (2015). p.17.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과 스웨덴과 비교할 때 한국 여성의 젠더의식이 전통적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 태도를 가진 여성과 성평등적 태도를 가진 여성 모두 본인의 선호를 실현할 가능성이 작음을 보여준다. 김영미·

계봉오(2015)는 이러한 젠더의식 분포와 선호실현의 불일치가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가치관 및 제도의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 제3절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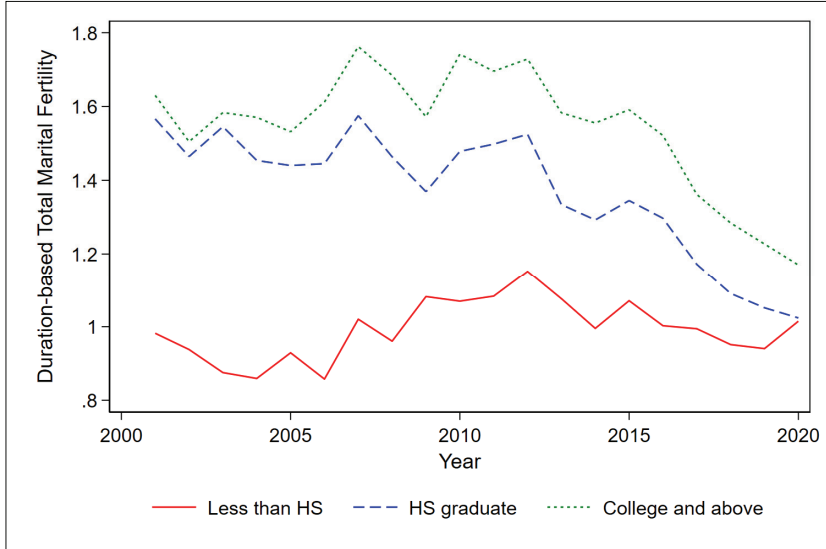
제2절에서는 인구학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문화 및 제도적 조건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검토했다.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발전된 산업국가들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했음은 물론, 많은 국가의 출산율이 초저출산이라 불리는 합계출산율 1.3 미만(Kohler et al., 2002)으로 하락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1.0 아래로 하락했고, 2022년에는 0.78까지 하락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23). 이처럼 전 세계에서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것은 출산력의 결정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제3절에서는 최근의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조건, 가족정책, 태도 및 가치관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 1. 사회경제적 조건과 출산의 관계 변화

### 가. 교육 수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여성의 교육 및 고용과 출산율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Bar et al., 2018; Ciganda, Lorenti & Dommermuth, 2021). 즉, 교육 수준과 출산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약화하거나 역전되었다. [그림 3-6]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바르 등의 연구(Bar et al., 2018)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육 기간과 출산율의 선형적인 관계는 1980년 이후 사라졌는데, 이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집단보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유배우 출산율은 교육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삼현, 최슬기, 계봉오, 2022). [그림 3-8]은 기간-기반 유배우 합계출산율(Duration-based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TMFR<sub>d</sub>*)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2000년 이후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유배우 출산율이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유배우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간-기반 유배우 합계출산율은 혼인기간별 출산율의 합으로 추정하는데, 혼인 시기 지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유배우 출산율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교육 수준과 유배우 출산율의 관계가 전통적인 부정적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양적 관계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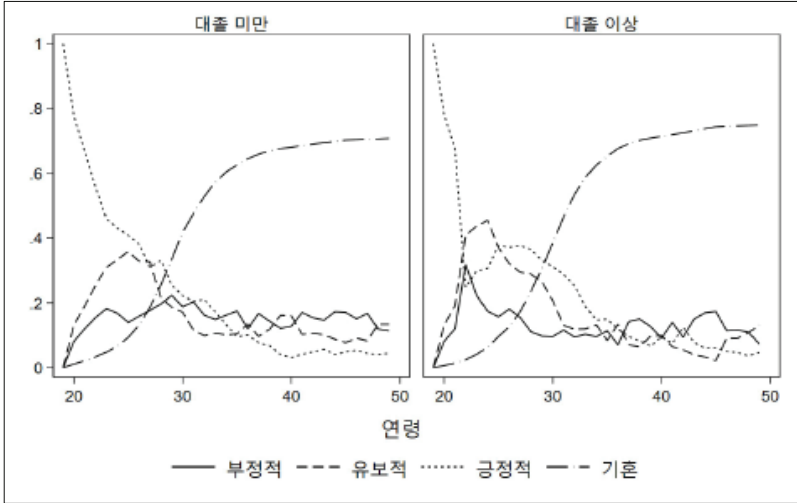
[그림 3-8] 교육 수준과 기간-기반 유배우 합계출산율(2001~2020)



자료: 유삼현 외. (2022). p.31.

한편, 교육 수준에 따른 초혼 이행률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교육 수준별 결혼의향 및 기혼자 비율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데([그림 3-9]), 30대 후반 이후 대졸 이상의 기혼자의 비율이 대졸 미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계봉오, 황인찬, 2023).

[그림 3-9] 교육 수준과 결혼의향 분포



자료: 계봉오, 황인찬. (2023). p.104.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으로의 이행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 출산율이 높으므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출산율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출산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교육과 출산의 관계에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데 (Jalovaara et al., 2019),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 수준과 출산의 관계에서 남녀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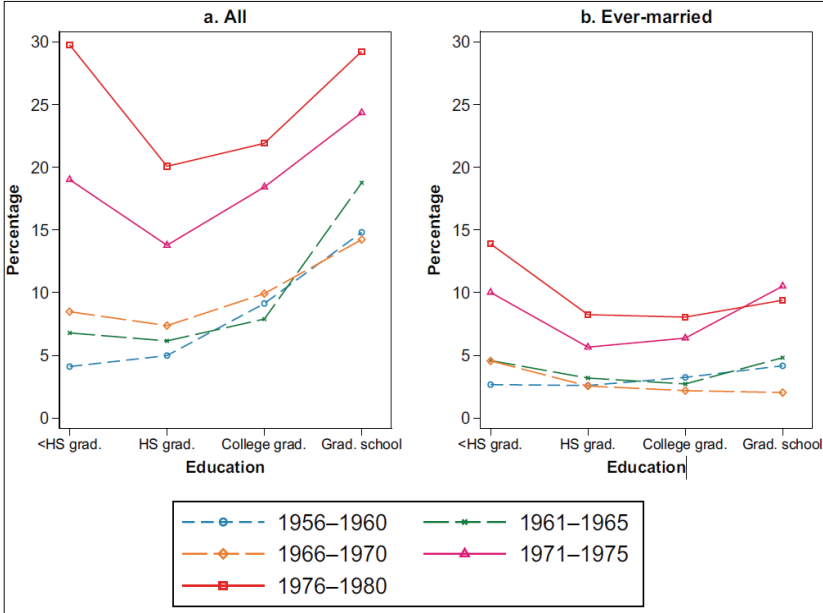
교육 수준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할 때 출산 시기(tempo)와 출산의 양(quantum)을 구분해야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은 학교 재학 기간이 길고 학교 재학 중에는 출산하는 경우가 드물므로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 시기가 늦어진다. 이러한 출산지연은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출산지연이 반드시 완결출산율의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출산 시기

지연과 출산 양의 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Bongaarts & Feeney, 1998).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출산지연으로 인한 템포 왜곡(tempo distortion)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초산 연령이 높아지지만, 둘째 혹은 셋째 출산율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Skirbekk, 2022).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수준에 따른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Jalovaara et al., 2019), 1940년대 출생코호트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높았지만, 197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과 출산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교육 수준과 무자녀 비율의 관계에 변화가 관찰되는데, 그 양상은 다소 다르다. 교육 수준에 따른 40~44세 여성의 무자녀 비율 변화를 분석한 황지수의 최근 연구(Hwang, 2023)에 따르면, 무자녀 비율은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교육 수준과 무자녀 비율의 관계는 비선형적이다([그림 3-10]). 고졸 이하 집단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자들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낮으며 대학원 이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대졸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 대상에서 미혼여성을 제외하면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무자녀의 주된 원인이 결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고졸 미만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과 출산의 부적 상관관계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부적 상관관계는 상당 부분 결혼이행률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0]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무자녀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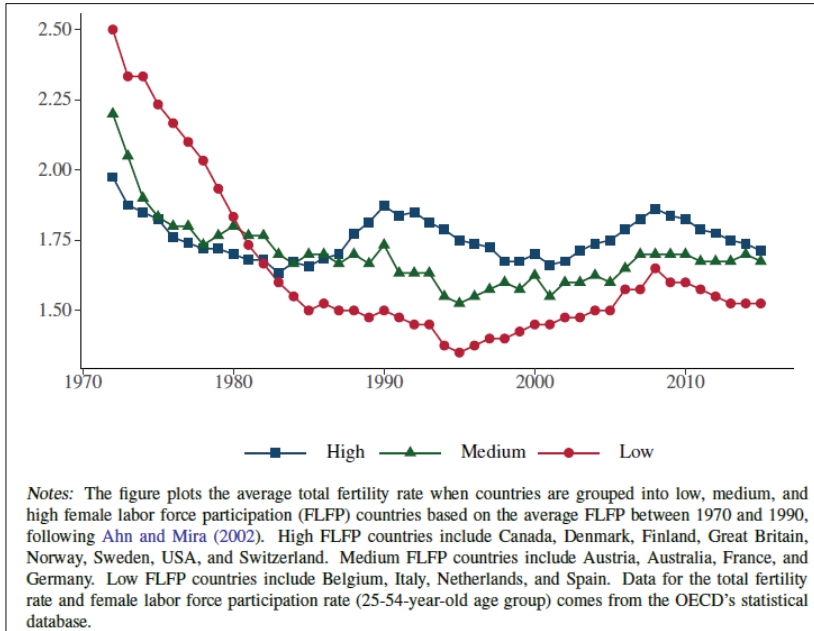


자료: Hwang. (2023). p.576.

이러한 최근의 추세 변화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제학적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의 향상이 전통적인 태도를 약화 시킴으로써 출산을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변화는 성평등의 진전에 따른 출산율 반등을 주장하는 이론들(예: Esping-Andersen & Billari, 2015)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사회제도적 장치들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그림 3-11]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과 합계출산율



자료: Doepke et al. (2023).

[그림 3-11]은 OECD 국가들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수준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Doepke et al., 2023).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았지만, 1980년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들의 출산율은 상승하거나 유지되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단,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노동시간

국가 간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Shreffler & Johnson, 2013). 한편, 남성의 노동시간은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Adema, Fluchtmann & Gustafsson, 2022). 그런데 남성의 노동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함의는 이중적이다. 우선 남성의 긴 노동시간은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 전일제 고용으로 일하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남성의 평균 노동시간은 길다. 따라서 남성의 노동시간과 출산율의 양의 상관관계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높은 평균 노동시간은 강한 성역할 분리와 연결될 수도 있다. 성평등주의 확산 이론들에 따르면(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출산율이 반등한다. 물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남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남성의 노동시간이 하락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으로써 남성들이 장시간 노동할 경제적 이유가 약화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 혹은 육아 노동 분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의 노동시간과 출산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는 1) 성평등주의 확산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경험적 증거이거나 2)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이행의 계곡”(김영미, 계봉오, 2015)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남성의 노동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3-12). 유럽 국가들의 평균 남성 노동시간과

무자녀 비율 및 출생아 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Brini, 2020), 남성의 평균 노동시간과 무자녀 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남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출생아 수가 올라가는 반면, 성평등적인 태도가 지배적인 국가들에서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 노동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이중적 함의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고용상태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출산이 지연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Kreyenfeld, 2010; Seltzer, 2019).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자녀 양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출산이 증가한다고 예상하는 이론도 존재하는데, 이는 자녀 혹은 자녀 양육이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서 대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Friedman, Hechter & Kanazawa, 1994).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고용 불안정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과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Glavin, Young & Scheimen, 2020).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는 명확한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과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사는 여성들은 고용불안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출산을 지연하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적응이 되어 있으므로 고용상태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라. 출산 및 양육 비용과 생애과정 불안정성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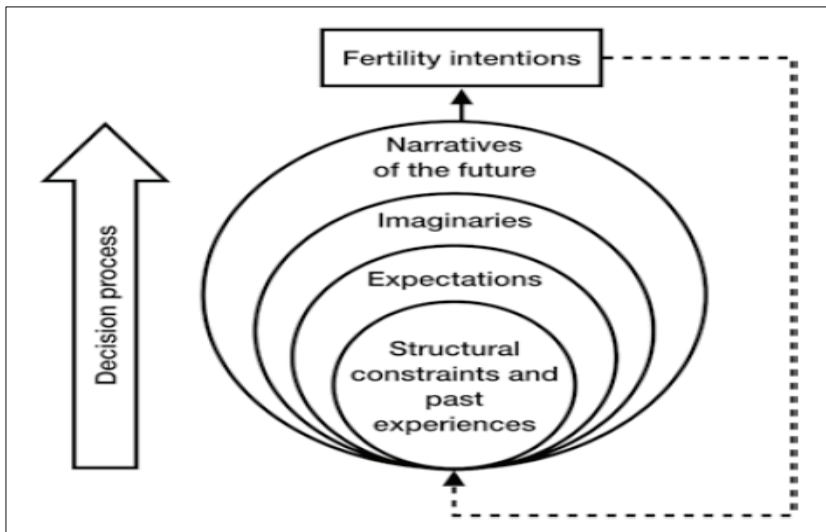
출산과 관련된 비용은 크게 자녀 양육과 주거로 나눌 수 있는데, 비용의 상승은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가 소유자의 출산율이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상환 금액 상승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Tocchioni, Berrington, Vignoli & Vitali, 2021). 이는 주택 구입과 자녀 출산이 서로의 대체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확장 또한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Comolli, 2017). 이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확장이 여성 고용의 확대와 연결되며, 이는 또한 출산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Coskun & Dalgin 2022). 앞에서 살펴본 남성 노동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함의와 마찬가지로 여성 고용 또한 이중적인 함의를 지닌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때 여성 고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 고용의 확장은 출산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한편, 여성 고용률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여성의 높은 고용률은 경제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적 제도의 확산 및 정착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의 관계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모두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실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년간의 경제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ppegård, Kristensen, Dommermuth, Minello & Vignoli, 2022). 향후 3년 동안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으면 출산의도가 하락했고, 경

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에는 출산의도가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커플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출산의도가 남성보다 높지만 이러한 효과는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부정적) 정보 전파

[그림 3-12] 출산의도 결정 과정의 내러티브 프레임워크



자료: Vignoli, Bazzani, Guetto, Minello, & Pirani. (2020). p.33.

최근 들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제적 전망,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또한 저출산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Vignoli, Bazzani, Guetto, Minello, & Pirani,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출산의도의 결정

과정에 주목하는데, [그림 3-12]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출산의도는 기본적으로 장래에 대한 내러티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내러티브의 결정 과정은 구조적·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통한 정보의 교환에 의해서 결정된다.

부정적 정보의 전파가 출산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강력한 경험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Lappegård et al., 2022)을 고려할 때, 소셜 미디어 활용의 증가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 정보의 전파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닌데, 이미 유럽의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피임방법, 소자녀 가치관 등이 같은 언어권을 중심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Lesthaghe, 1977; Casterline, 2001). 단, 최근 진행되는 정보의 전파는 출산력 변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그 파급효과 또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족정책의 효과성

### 가. 출산 및 육아 휴직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의 적극적인 실행은 일반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homas, Rowe, Williamson & Lin, 2022). 흥미롭게도 소득 수준이 높은 커플들이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은 다른 영역에서는 사회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svik, Fauske & Hart, 2021). 여성과 남성의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의 실행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과

스페인인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 휴직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é & González, 2019; Lee, 2022). 한국 사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Lee, 2022), 향후 아버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커플과 비교할 때, 현재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커플들의 출산의도는 아이가 한 명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며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출산의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버지 육아 휴직 사용 경험이 추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이 자녀 양육에 따른 비금전적인(non-monetary) 비용의 증가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육아 휴직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시간을 투자해 본 남성들이 출산에 수반되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기회비용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출산의도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출산 및 육아 휴직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효능감(efficacy)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 나. 공공 보육시설

양질의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은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보육시설 확충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양육 환경 개선이 개인 혹은 커플의 가족을 형성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결정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보육시설 이용 경험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전체적인 양육환경 개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출산 경험이 있는 개인 혹은 커플의 공공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이라는 개인적인 경험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공공 보육시설 확충의 효과가 둘째 이상 출생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Rindfuss, Guilkey, Morgan, Kravdal & Guzzo, 2007; Rindfuss, Guilkey, Morgan & Kravdal, 2010). 린드푸스 외의 연구는 지역의 공공 보육시설 공급 수준에 따라 1957~1962년 출생 노르웨이 여성들의 35세의 평균 출생아 수를 추정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 보육시설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완결출산율이 선형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메타 연구(Bergsvik et al., 2021)는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첫째 출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출산 휴가의 효과와는 대조적인데, 출산 휴가의 효과는 첫째 출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는 시 단위(municipal level)의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leven, Landais, Posch, Steinhauer & Zweimüller, 2019). 또한, 한국의 예는 노동시장에서의 압력 증가(예: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보육시설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상승을 억제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OECD, 2019).

#### 다. 현금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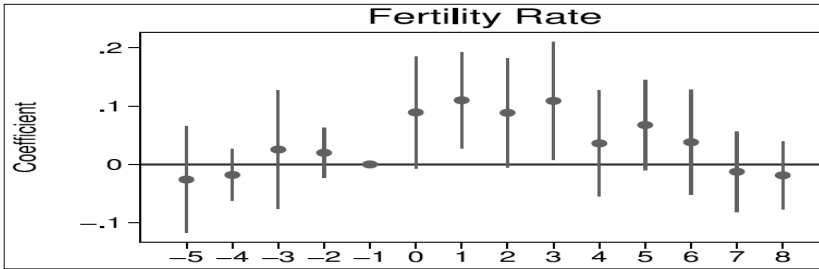
초기 연구들은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Gauthier, 2007), 최근 연구들은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Chuard & Chuard-Keller, 2021). 특히 세금 공제의 효과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욱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rgsvik et al., 2021). 또한, 현금 지원의 효과는 집단에 따라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이민자 집단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Chuard & Chuard-Keller, 2021; Boccuzzo, Caltabiano, Zuanna & Loghi, 2008). [그림 3-13]은 스위스의 출산지원금(baby bonus)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Chuard & Chuard-Keller, 2021). [그림 3-13A]에 제시된 결과는 베이비 보너스 정책의 실행 직후 출산율이 상승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베이비 보너스 정책의 효과는 여성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소득 국가 출신 여성에게서는 정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소득 국가 출신 여성에게서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 저소득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에도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는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정책의 실행은 출산율의 상승으로 연결되지만 현금 지원 정책의 철회 혹은 지원금액의 축소는 출산율 상승을 넘어서는 출산율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González & Trommlerová, 2021; El-Mallakh, 2021).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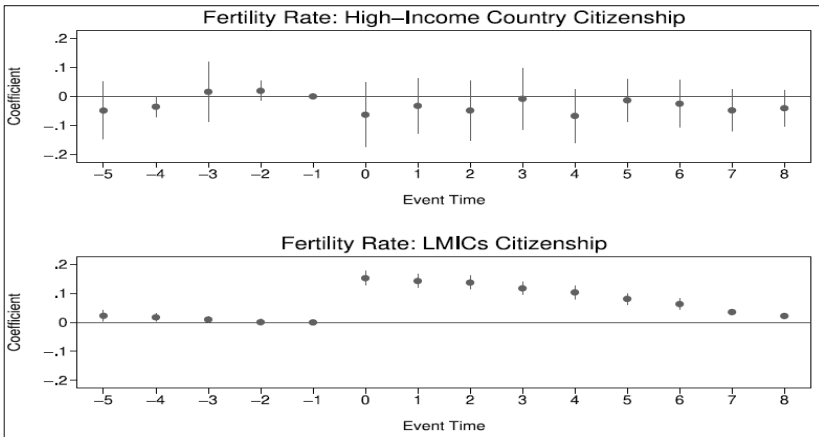
면, 출산지원금 정책을 신중하게 실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3-13] 스위스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A. 전체 인구



B. 이민자 집단별



자료: Chuard & Chuard-Keller. (2021), pp.2103-2104.

### 3.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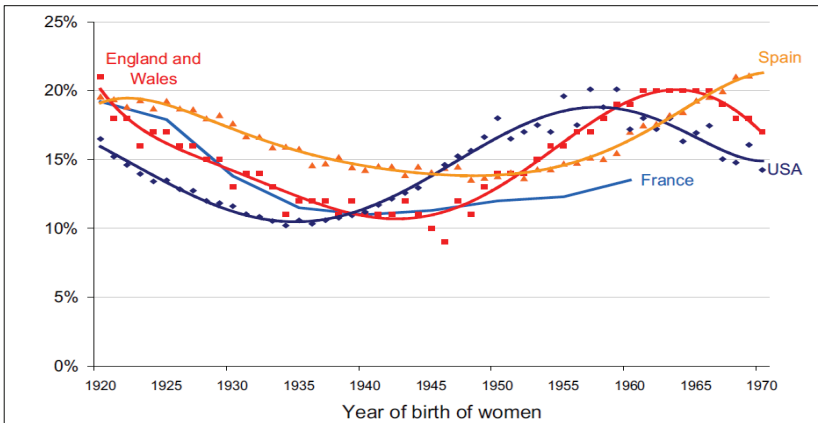
#### 가. 자기실현주의(self-actualization)의 강화

제2차 인구변천이론(Lesthaeghe, 1995; Sobotka, 2008)의 주장처럼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자기실현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기실현주의의 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산과 연결된다. 우선, 출산의 결정이 관습 혹은 관행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고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자기실현주의의 강화는 자녀 양육기준의 강화와 연결된다. 자신의 자기실현을 강조하는 성향을 지닌 개인이나 커플은 자녀의 자기실현의 중요성 또한 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양육기준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녀의 자기실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 축적을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진 자기실현주의와 양육기준은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매우 강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미래의) 자식을 향한 강한 이타주의와 결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출산의 지연과 감소를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없는(child-free) 삶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Rotkirch, 2020), 핀란드의 연구는 이러한 태도가 삶의 불확실성과 생활방식의 선호도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SNS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방식의 선호도가 출산의 지연 및 포기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Savelieva, Jokela, & Rotkirch, 2023).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생애과정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이 약화하고, 자녀의 출산은 충

분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는 무자녀 여성 혹은 커플의 증가로 연결된다.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의 1920~1969년 출생코호트에 대한 분석은 무자녀 비율이 1940년대 출생 코호트들부터 증가하다가 1960년대생들부터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그림 3-14), 스페인에서는 무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her & Requena, 2019). 무자녀 비율의 이러한 상승은 스페인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연결되고 있다. 자기실현주의적 태도와 이에 따른 양육기준의 강화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변화는 자기실현주의 강화라는 태도의 변화가 출산율 변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Jalovaara et al., 2019), 이는 국가적 맥락에 따라 가치관과 출산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4] 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무자녀 여성 비율 변화



자료: Reher & Requena. (2019). p.136.

## 나. (인식된) 양육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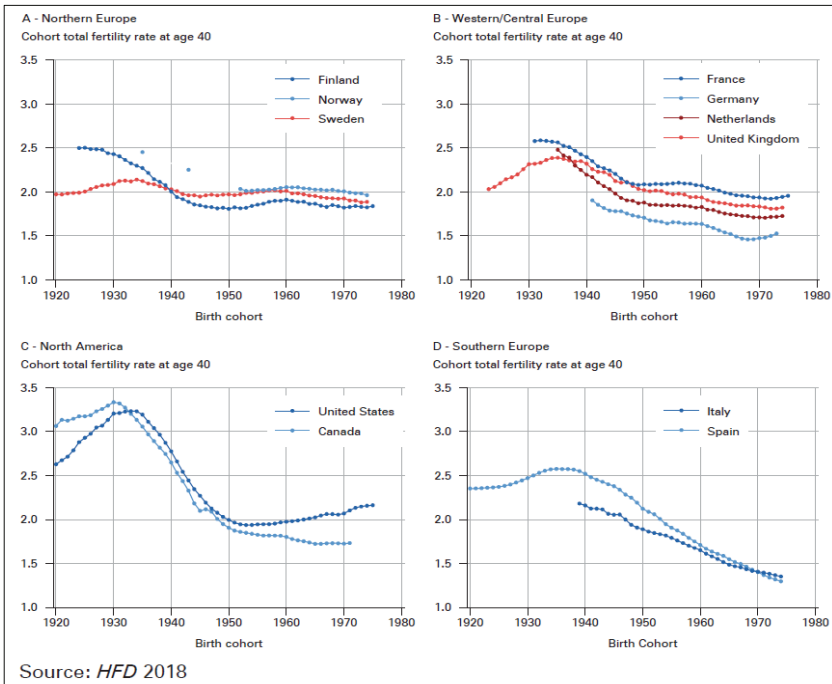
이렇듯 좋은 부모 됨의 기준이 상승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Ellingsæter, Kitterød & Hansen, 2022). 즉, 집중양육(concerted cultivation)에 대한 부담이 출산의 지연 및 회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Guzzo, 2022). 집중양육은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가 그녀의 저서 *Unequal Childhood*(Lareau, 2012)에서 미국의 계층·계급에 따른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인데, 자녀들의 교육 및 양육환경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하며 중간계급 부모들이 주로 실행하는 양육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계급과 빈곤층의 양육방식은 자연성장(natural growth)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방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자녀들의 환경에 부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녀들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집중양육은 자연성장보다 양육 부담이 높은 양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논의한 양육기준의 상향 조정은 집중양육 방식의 확산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들의 인식된 양육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집중양육이 중간계급에서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Lareau, 2012), 양육 부담 인식의 증가는 중간계급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노르웨이 연구는 계층별로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는데, 중상위 계층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Ellingsæter et al., 2022). 이는 양육형태의 계층적 분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 방식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또한 출산 회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Jenkins, 2020). 즉,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자녀가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산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좋은 부모 됨의 기준이 자녀를 위해 충분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제공을 넘어서 기후와 같이 개인이나 가족의 통제범위를 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한 출산의도 감소는 자녀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다. 성평등주의

[그림 3-15]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완결 코호트 출산율 추이



자료: Frejka et al. (2018). p.111.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평등주의 이론에 따르면 성평등의 진전과 출산율은 U-자형 관계를 맺고 있다(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단, 이를 지지하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코호트 출산율의 반등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Frejka et al., 2018). 이는 [그림 3-1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성평등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코호트 출산율이 대부분의 유럽 및 북미 국가들보다 느리게 하락하고 있다. 단, 코호트 출산율의 반등은 오히려 미국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성평등주의와 출산율의 관계가 복잡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성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라 남성이 양육 부담을 공유하고 출산의 기회비용이 남성에게도 발생함에 따라 남성들이 자녀 갖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Vignoli, Mencarini & Alderotti, 2020).

## 제4절 초저출산 결정 요인의 특징

### 1. 출산율 하락과 상승의 비대칭성

지금까지 검토한 최근의 출산율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을 이해하고 출산율의 회복 혹은 반등을 고민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성의 변화와 가치관 및 규범의 변화의 함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분리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확대와 가치관 규범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낮은 수준

에 머물렀으므로 이 둘의 효과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Mills & Blossfeld, 2013). 그렇지만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 및 규범의 확산은 초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의 하락과 상승의 비대칭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율을 하락시켜왔던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출산율의 회복 혹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1.0 미만의 초저출산은 낮은 순위 출산 및 무자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

경제적 안정성과 출산의 관계는 맬서스 이후 인구학적 연구의 매우 오래된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젊은 남성의 경제적 안정성에 특히 주목한다. 리처드 이스털린의 상대적 코호트 크기 이론(relative cohort size theory)은 코호트의 상대적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동한다는 이론인데 이는 코호트의 크기가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안정성이 다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Easterline, 1978). 발레리 오펜하이머의 연구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그는 미국에서 혼인율 감소는 젊은 남성의 경제적 전망의 변동에 주로 기인함을 보여주었는데(Oppenheimer, 1988), 1990년대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Sweeney, 2002).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제적 전망을 고려하는 것이 결혼 및 출산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적 불평등 증가(Forster & D'Ercole, 2005)는 젊은 남성들의 경제적 불안정

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Mills & Blossfeld 2013).

이는 앞에서 살펴본 최근의 출산율 결정 요인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녀의 노동시간은 출산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노동시간은 출산과 양적 상관관계를, 여성의 노동시간은 출산과 부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skun & Dalgin, 2022; Shreffler & Johnson, 2013). 이는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가치관과 규범의 중요성

[그림 3-16]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모형:

미국과 이탈리아의 가상적인 수치들

Component	Description	Country	
		Posttransition Italy	Posttransition United States
IFS	intended family size	2	2.2
$F_u$	unwanted fertility	1.04	1.12
$F_g$	gender preferences	1.02	1.02
$F_r$	replacement effect	1.005	1.005
$F_t$	tempo effect	0.85	0.92
$F_i$	infecundity	0.9	0.95
$F_c$	competition	0.75	0.9
TFR		1.22	1.99

<sup>a</sup>TFR = IFS ×  $F_u$  ×  $F_g$  ×  $F_r$  ×  $F_t$  ×  $F_i$  ×  $F_c$ .

자료: Morgan. (2003). p.598.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하락한 한국 사회의 현실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향상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전후에서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우려가 증가했는데, 2000년대 초반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체 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일시적인 현상이고 개인 혹은 커플들의 출산의도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했다. 이에 따르면 출산의도의 실현을 통해서 출산율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했다.

[그림 3-16]은 필립스 모건의 미국인구학회(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회장 취임 연설문에 제시된 것(Morgan, 2003)인데, 저출산의 원인을 출산의도 실현의 실패로 이해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모건은 가상적인 예를 통해서 미국과 이탈리아의 출산 변천 이후의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국가에서 원하는 자녀 수(intended family size)의 차이는 0.2명이지만 합계출산율 차이는 0.8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competition) 요인이다. 경쟁 요인은 출산의도의 실현을 방해하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출산율의 반등은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즉 이는 봉가르트의 근접요인 접근법(Bongaarts, 1978)을 사회제도적 요인을 포함하여 확장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 1.0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이렇듯 저출산을 출산의도 실현의 실패로 개념화하고 출산의도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는 접근이 타당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출산의도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서베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녀 수, 희망하

는 자녀 수 등의 측정치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가치관과 태도에 발생한 근본적인 변화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5절 소결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출산력은 근접요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학적 요인들, 제도 및 가치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과 출산율의 관계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교육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노동시간과 출산의 관계에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국가마다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관계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또한, 생애과정의 불안정성 증가나 부정적인 전망의 빠른 유통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변화의 기저에는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정책의 효과성은 이질적이지만,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출산지원금 정책 등 가족정책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집단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도 및 가치관의 역할 또한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자기실현주의적 태도가 강화되어 무자녀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양육 부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으로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가치관의 확산은 저출산의 심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1.0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변화의 비대칭성을 이해하고, 경제적 안정성과 가치관 및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초점 집단 토론

- 제1절 개요
- 제2절 설문 내용
- 제3절 분석 결과
- 제4절 소결



## 제4장

#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초점 집단 토론

### 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된 저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가임기 남녀의 인식과 행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혼인의 어려움(결혼 비용 부담, 주거 마련 부담 등), 불안한 일자리,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 비용 부담, 불평등한 가사 노동 부담,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인식 변화, 문화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는 최근(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 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 변화하고 있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감,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빠른 불안감 확산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30·40대가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의향,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신체적·정신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향후 20년 뒤 가족 구성원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전망, 주관적 계층 의식(본인 현재 및 자녀 성장 후), 한국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저출산 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하였다.

본 장의 연구 방법으로는 초점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활용하였다. 전통적인 출산력 결정 요인과 더불어 최근에 대두된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면접보다 내담자들 간의 집단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끌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출산 위험 요인에 노출된 다양한 인구 집단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수행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안배를 고려하여 토론 대상자 16명을 선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30~40대), 혼인 여부(미혼자/기혼자), 성별(남성/여성), 자녀 수(0명/1명) 등이 활용되었고,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는 학력(고졸/대졸/대학원졸), 지역(대도시/중소도시), 직업(정규직/비정규직,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sup>6)</sup> 등을 고려하였다. 대상자 섭외는 조사업체(엠브레인)가 확보한 패널 중에서 섭외하였다(〈표 4-1〉 참조).

〈표 4-1〉 초점 집단 토론 표본 설계

구분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1집단 (8명)	남성 8명	30대 4명 40대 4명	미혼 4명 기혼 4명	자녀有(1) 2명 자녀無 2명
2집단 (8명)	여성 8명	30대 4명 40대 4명	미혼 4명 기혼 4명	자녀有(1) 2명 자녀無 2명

초점 집단 토론은 2023년 8월 28과 29일 양일에 걸쳐 19:00시부터 21:00시까지 조사 업체(엠브레인)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토론 내용은 녹음 및 전사했으며, 전사된 내용을 코딩하여 분석한 후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였다.

6) 그룹별 고졸/대졸/대학원졸 1명 이상 포함, 그룹별 사무직 4명 내외 및 기타 4명 내외 포함됨.



## 제2절 설문 내용

### 1. 도입

Q1. 오늘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1-1. 가능하시다면 귀하의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수(자녀의 성별 포함), 최종 학력, 거주하시는 지역, 하시는 일 등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

Q2.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저출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요인들이 가장 크게 저출산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출산 결정 요인들

1. 혼인의 어려움  
- 결혼 비용 부담, 주거(아파트, 주택 등) 마련 부담
2. 불안정한 일자리
3.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용 부담
4.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5.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인식 변화, 문화의 변화 등)

### 3.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

Q1.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판단을 의미합니다.

1. 본인의 미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인식
2.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우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끝나지 않은 학업 지속의 가능성
4.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Q1-1.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Q1-2.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Q2.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별개로 개인이 거시적 또는 미시적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3.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과거에 비해 부모가 수행하여야만 하는 역할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는지요? 또는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여기에서 **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1. 부모로서의 책임감
2.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3. 개인의 자유 시간 포기
4. 육아와 노동 시간의 밸런스
5. 육아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 투입
6. 부부관계의 제약

Q3-1.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증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Q3-2.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Q4. 변화하고 있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근 성평등 인식이 증대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육아 투입 시간 증대
2. 육아에 대한 정서적인 참여 확대
3. 부모가 되기 전에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기반 마련
4. 부모가 되기 전에 안정적인 혼인 관계 확립

Q4-1.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Q5.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빠른 불안감 확산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여기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불안감 확산**은 과거와 달리 경제 불황이나 전쟁, 재난 등의 뉴스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이로 인하여 한 국가나 지역의 불안감이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Q5-1.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4. 출산에 대한 인식

- Q1. 귀하께서 자녀가 아직 없으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Q1-1. 만일 출산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Q1-2. 만일 출산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Q2. 현재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시고 계신가요?
- Q3. 현재 귀하께서 느끼고 계신 일가정 양립은 어느 정도 어려우신가요?
- Q4. 향후 20년 뒤 한국 사회의 전반적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Q4-1. 향후 20년 뒤 귀하와 귀하의 가족 구성원 전반적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Q5.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하층, 중층, 상층 중 어디에 속하신다고 평가하시나요?  
Q5-1. 귀하의 자녀가 성장하였을 때 한국 사회에서 하층, 중층, 상층 중 어디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 Q6.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6-1. 만일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 제3절 분석 결과)

### 1. 토론자 특성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남성 8명과 여성 8명을 인터뷰하고자 하였으나, 미혼 여성 1명이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총 15명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초점 집단 토론을 실시하였다. 초점 집단 토론(FGD)은 불필요한 젠더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동성의 미혼과 기혼 참여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첫 번째 날에는 남성 집단 토론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날에 여성 집단 토론을 실시하였다. 남녀 초점 집단 토론은 모두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였고, 여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8.6세였다. 남성의 50.0%는 대졸이었고, 대학원 이상 학력의 비율은 25.0%로 나타났다. 고졸과 전문대졸은 각각 1명(12.5%)이었다. 여성 참여자의 경우 71.4%가 대졸이었고, 대학원 이상은 14.3%, 그리고 고졸이 14.3%였다.

남성 참여자는 62.5%가 공무원(사무직)이었고, 영업직이 25.0%, 그리고 자영업이 12.5%였다. 여성 참여자의 직업분포는 남성에 비해 다양했는데, 공무원(사무직)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영업, 전문직, 예술계, 음악 강사가 각각 1명씩이었다.

거주 지역은 남성 참여자의 75.0%와 여성 참여자의 85.7%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남녀 기혼 참여자 중 절반만 자녀가 있었으며, 이 경우 모두 1명의 자녀만을 두고

---

7) 코딩은 온라인 무료 코딩프로그램인 타겟트(<https://www.taguette.org/>)에 업로드하여 시행하였다.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주제별로 1차 코딩을 하였고, 이후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위범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Saldana, 2009).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미혼자의 절반인 2명은 동거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었고, 여성 미혼자 3명 모두 1인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4-2〉 초점 집단 토론 대상자 및 주요 특성

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자녀	동거가족수	부모동거여부	직업	학력
남1	남	38	서울	기혼	1명	3인		공무원/ 사무직	대학원졸
남2	남	41	서울	기혼	1명	3인		공무원/ 사무직	대졸
남3	남	36	경기	기혼	없음	2인		영업/서비스직	대졸
남4	남	41	서울	기혼	없음	2인		공무원/ 사무직	대졸
남5	남	30	서울	미혼	-	3인	예	영업/서비스직	초대졸
남6	남	40	서울	미혼	-	3인	예	자영업/개인사업 (5인 이하 사업장)	대졸
남7	남	46	경기	미혼	-	1인	-	공무원/ 사무직	대학원졸
남8	남	31	서울	미혼	-	1인	-	공무원/ 사무직	고졸
여1	여	41	서울	기혼	1명	3인	-	자영업/개인사업 (6인 이상 사업장)	대졸
여2	여	41	서울	기혼	1명	3인	-	음악강사	대졸
여3	여	37	서울	기혼	없음	2인	-	공무원/ 사무직	고졸
여4	여	34	경기	기혼	없음	2인	-	전문직/ 전문기술직	대졸
여5	여	41	서울	미혼	-	1인	-	연예/예술/스포츠계 종사자	대졸
여6	여	36	서울	미혼	-	1인	-	공무원/ 사무직	대학원졸
여7	여	40	서울	미혼	-	1인	-	공무원/ 사무직	대졸

## 2. 주요 결과

### 가. 불확실한 미래

#### 1) 부족한 소득

남녀 참여자 중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한다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둔 경우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부족한 소득이라고 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타자를 대상으로 고려해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공통적으로 현재 자신의 소득이나 같은 직장 직원들의 수입을 통해 유추해본 미래의 소득은 본인 혼자 또는 배우자가 생활하기에는 적정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신문 기사만 봐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돈. 그것 때문에 다들 결혼을 못하는 거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여성7)*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낳아서 자녀가 20대가 되면 제가 60이 될 건데 그때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그때가 제일 많이 돈이 들 시기일 것 같은데... 그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키울까. 그렇다고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1명 더 낳고 싶지만... 그리고 와이프도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공감은 가요.” (남성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중략) 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애 때문에 뭘 못하고, 애 때문에 뭘 못하고. 그런데 하나 정도 있으면 저랑 와이프랑 그나마 즐길 거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되겠다 싶어요.” (남성3)

## 2) 불안정한 일자리

참가자들은 대체로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미혼인 남성7의 경우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경우 자신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연애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혼인이나 출산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OECD(2019)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설사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고, 직업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노동(precarious work)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여전히 남성이 경제적인 주부양자(breadwinner)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고, 이는 안정된 직장이 없는 미혼 남성들이 가족 형성을 시도할 때 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원하는 대로 일단 잘 되어야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맞물려 들어갈 것 같은데... 제일 선결 조건은 취업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안정된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7)



“저도 예전에... 이제 참 아이러니가 뭐냐하면, 20대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반면에 내가 취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하니까 상대방하고 연애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고... (중략) 아무튼 취업이 청년실업도 있고. 취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면, 그게 연애나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 주는 것 같아요.” (남성7)

“집도 집이지만, 꾸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하겠죠... (중략) 맞벌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이라도 일단 안정적으로 하면,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든 사람은 살게 되어 있으니까.” (남성1)

참가자들은 현재 모두 직장인이고, 30대와 40대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현재의 직장을 그만둘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없어 더욱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발견되었다.

“여기에 제신 분들, 20대 분들은 괜찮겠지만 40대 분들은 슬슬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통계상 49세가 평균 퇴직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기간은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선배들도 많이... 4~5년, 10년 선배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니까. 빠른 사람들은 40대 초반에도 나가고 하니까요.” (남성4)

“지금 제 친구들도 회사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중략) 네. 따로 장사를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든지 하지, 놀지는 않을 거예요. 뭐라도 하겠

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될지는 또 모르겠고요.*" (남성2)

### 3) 주거 마련의 어려움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결혼 및 출산의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거 마련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회자가 토론 도중 남성 8명에게 출산과 주거 마련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물었을 때, 남성 3명(2명 미혼, 1명 기혼)은 주거 마련이라고 답한 반면에, 남성 3명은 출산이 먼저라고 답하였다(2명은 응답을 보류하였다).

또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주거 형태는 20평 정도의 아파트라고 답했다. 주거의 위치는 대부분 서울에 직장이 있는 만큼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서울 안(일명 "인 서울")을 선호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월급으로는 혼인 초부터 "인 서울"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만큼 서울 인근 경기도권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전세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세로 시작하는 것은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결혼을 하려면 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있냐고 하니까 얼마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단칸방 하면 되냐?" 하니까 그건 절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칸방부터 시작할 수는 없고... 서울 중심부에서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이라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경기도권의 아파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20평으로.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남성4)

*"친구들이 원래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하다못해 서울 안에서 전세 아파트는 있어야 된다..."* (여성6)

“자가인 게 제일 좋죠... (중략) 전세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략) 월세는 엄청 비쌀 것 같아서... 원룸 살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곳에 살아야 할 텐데...” (남성8)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신혼집 마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남성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결혼을 하면 집이 필요한데,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혼자 벌어서 나 혼자만 먹고살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와이프, 자식, 이런 부양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성6)

“가치관이 맞는 분을 만나면 부담이 덜한 거고요. 가치관은 안 맞더라도 집안 분위기 형성이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남자 측에서. 하지만 여자가 집을 해오는 일은 거의 없죠.” (남성1)

“아무래도 같이 결혼을 해도 아직은 남자분이 집은 마련해야 되고, 혼수는 여성분이 하거나. 아니면 요새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여성5)

#### 4) 좋은 부모 됨

참가자들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바람이나 의지와 다른 방

향으로 자녀가 성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안감은 좋은 부모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남녀 참가자 대부분은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많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남성3)

“아주 critical한 건 아닌데, ‘금쪽이’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어릴 때 나는 막 큰 것 같은데. 맞으면서 큰 것 같은데...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디어가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저저를 저 정석대로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기도 없어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여성6)

“좋은 부모라는 게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 같아요. 너무 미디어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여성4)

또한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었다. 남성들은 최근 사회 분위기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보다 과보호가 심해진 건 맞고요. 그게 아버지가 그런 걸 반대한다면, 여자들은 “너는 아빠가 되어서 이것도 안 시키고 저것도 안 시키냐”... (중략). 아버지 시대가 맞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오죠... (중략) 뭐 하면, “남자는 같이 도와야 한다. 당연히 육아를 하면 회사에서 와도 자유시간 포기하고 놀아줘야 된다” 하고. 밸런스 맞춰주고, 에너지 투입하고... 그러다 보면 둘 다 떨어져서 관계도 많이 안 가지고. 그런 게 계속 무한 루프가 되다 보니까...” (남성1)

#### 5) 좋은 배우자 만남

남녀 미혼 참여자들은 일부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였고, 일부는 혼인 적령기를 놓쳤지만 여전히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좋은 배우자” 상대를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참여자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더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삼식 외(2015)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요새 사람을 함부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나 보험 사기로 자기 배우자를 죽이는 경우도 너무 많고.” (여성7)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인생을 함께할 동료가 생긴다면 결혼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목을 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6)

“결혼도 사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생각. 그래서 좋은 남자 친구도 있고 했었지만, 그게 저의 삶의 절대적인...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강력한 임팩트까지는 아직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여성5)

#### 6) 빈곤한 노후

출산과 관련해서 참가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아이를 낳거나, 또는 한 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되면 노후생활이 빈곤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후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50%가 노후 빈곤이라고 하는데, 그 주된 사유가 대부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집 팔고, 애 키우고...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집도 넘겨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남성4)

“일단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연금이 있다고 하지만 실수령액을 많이 받기가 어렵고. 지금 세대는. 전 세대들은 좀 더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저희는 늦게 받거나 조금 받게끔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남성4)  
“60까지 일을 하면 다행인데, 그 전에 은퇴를 한다거나 그러면 금전적인 게 영향이 크겠죠.” (남성2)

## 7) 건강한 임신과 출산

여성 참가자들은 본인이 직접 출산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출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매우 큰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 한 참여자(여성2)는 출산 과정에서 생과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였고, 이 때문에 둘째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담들을 주위로 부터 들어 대부분 알고 있었고,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에도 분위기가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관 하는 언니들이 되게 많았고. 맨날 눈물의 피드들... 그걸 보면서 겁먹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웬 걸...? 계획을 하니까 다음 달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뉘야! 괜히 겁먹었네!’ 했는데... 제가 언제 시련을 맞이했냐면, 제가 8개월 때 갑자기 피가 솟구쳐 나오면서, 응급으로 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사의 출산...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제왕절개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다 인사를 왔었어요. 제가 못 깨어나고 있으니까. 애기도 8개월에 나왔으니까 개도 인큐베이터에 한 달. 엄마는 못 깨어나고 있어서 애를 한 달 동안 못 본 거죠... (중략) 저는 ‘출산=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성2)

“저는 결혼 전부터 table death라는, 출산에 대한 게 그게 가장 무서웠었거든요. 주위에서 누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첫 번째는 애를 못 낳겠다... 낳다가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지금은 제가 출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대요.” (여성4)

한편 미혼 여성들의 경우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노화로 인하여 혼인 시장에서 적합한 배우자로서의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다.

*“사실 제가 35살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량이 확 줄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출산을 나중에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올해 봄에 난자도 냉동을 했어요.” (여성7)*

*“2년 전만 해도 제가 37~38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딱 마흔이 되니까 무척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가 줄어들리니까 ‘내가 남자들한테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제일 컸어요.” (여성7)*

## 나. 사회·문화적인 환경

### 1) 비교하는 문화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을 주변 사람들 또는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고, 또 비교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참가자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뒤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상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나 내용은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 남성은 부동산 가격 등과 같은 경제적인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자신의 자산 가치만 그대로 남아 있어



일명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 자녀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또래 무리에 속하지 못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비교를 강요당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청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부터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하고,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저희도 영끌을 해서 집을 샀어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중략) 당장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몇 년 뒤에 누구는 자가를 갖고 있어서 갑자기 10억이 됐는데, 나는 계속 전세로 살면서 2억짜리에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마저 언젠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남성3)

“엄마들이 제안이 많이 와요. 그루핑 해서 같이 하자... 공연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사실 시간도 안 되고, 이번 달엔 지출도 많았지만, 그러면 또 애가 그 그룹에서 약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 때문에 뭔가... 애가 제외되는 느낌이 항상 엄마들은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게 되죠.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제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여성2)

## 2) 미디어를 통한 불안의 빠른 확산

최근에 수행된 OECD(2023)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유럽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주요

한 원인 중 하나가 SNS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 불안감(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의 확산 등)이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청년층 사이에서 글로벌 이슈가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 세계적 불안감의 빠른 확산은 필요 이상으로 젊은층이 이미 겪고 있는 불안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불안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보다는 소셜 미디어에 노출된 연예인이나 주변 지인들의 생활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점차 이러한 과정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미디어에 노출된 연예인들의 집이나 육아 행위는 상당부분 연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주는 비현실적 생활 방식은 부러움의 대상임과 동시에 결혼생활이나 육아와 관련하여 너무나 높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은 동네와 나쁜 동네가 나뉘져 있잖아요. 나는 애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무리해서라도 가는 거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는 신문밖에 없으니까 내 동네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는데… 그때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비교가 되니까, 저기에 쫓아가려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더 무리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성7)

“다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무슨 사고가 나면 그 동네에서 끝나고 말았을 텐데, 요새는 정말 속보라고 해서 30분도 안 되어서 한국에 쪽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불안이 계속 쌓이니까, 이게 저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연애를 못하겠네. 연애를 안 하면 결혼을 못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까지 하지 못한다’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7)

“저는 SNS. 비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내실은 모르고 다들 겉모습만 봤을 때는 다 화려하고, 재미있고, 좋은 모습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 박탈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출산부터 취업, 연애, 모든 것들이 다 남들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지 않나... (중략)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이 화려하고, 아빠가 잘 키우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남성3)

일부 참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남녀 참가자는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알고는 있지만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가 전공 메인 쪽으로 삼던 아이템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 꽤 뜨고 있던 것이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업본부에서 접더라고요... (중략)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화학공학과 전공이 아닌데, 지금은 화학... 진짜 모르

는 화학공학 공부를 하고. 경력직으로 화학공학과 애들을 뽑는데, 저보다 6살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근속 연차는 올라도 모르는 건 팩트이니까.” (남성1)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넓게 보면 와닿을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서.” (남성6)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문화는 소셜 미디어라는 기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이 시작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Edin & Kefalas(2005)가 미국 흑인 사회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하게 이러한 기준들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어 서민층, 특히 이제 막 가족을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젊은층이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너무 높은 기준점으로 인하여 이들이 또 한 번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주변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그 나이대에 그 정도의 재력을 갖출 수가 없는데 되게 다 갖춰 놓고 시작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집도 그럴 듯한 것… 그런데 그 나이대에는 그게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여성6)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여서. 그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제가 사는 걸 저는 아니까 봤을 때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도 많고요.” (남성8)

## 3) 여성의 과도한 가사 및 육아 책임

일단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남녀 참가자들은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성 참가자는 성차별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남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대리, 사원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은데... 70%가 여자인데, 부장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출산 때 그만두거든요.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 또는 양성 평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성4)*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많이 차별받고 그랬지, 요즘은 그닥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중략) 사회적으로는 여자들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요?” (남성6)*

여성들은 한결같이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과중하게 지워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참가자는 남편보다 더 많은 혼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일은 전혀 출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사와 돌봄 책임이 남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OECD, 2019), 성별 가사노동 격차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 주변에 보면, 여자가 더 많이 해간 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더 많이 해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가사, 양육, 시댁에 해야 되는*

것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집에서 꼴리지 말라고 해 주셔서 여자가 더 많이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성6)

“주변에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하고, 아기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알았으면 못 낳았을 거야” 라고… 낳는 게 끝이 아니고 육아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필연적으로 여자가 육아를 거의 전담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고생하고 이런 걸 보니까 굳이…” (여성6)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고… 애는 엄마만 찾아요. 특히 아플 때. 아빠한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엄마, 엄마, 엄마” 이려고. 우리도 아플 때 엄마만 들들 뉘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성1)

이러한 가사와 육아의 책임에 더해 남편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더 좋을 때도 불구하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어떤 친구는 남편보다 원래 소득이 더 좋았어요. 학벌도 훨씬 좋고. 그런데도 여자가 쉬고 아기를 보고, 남편이 나가서 돈 벌거든요. 남자의 커리어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자가…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진짜 예외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성6)

#### 다. 제도적인 미비

##### 1)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의 어려움

남녀 참여자 모두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 자체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

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직장 분위기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은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승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로워서... 임신하면 단축 근무도 바로 쓸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 불이익이 항상 따라다녀요. 평생을 쫓아다녀요.” (여성7)*

*“예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출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우리 회사에 여자 직원들이 왜 승진을 못 하는지 아냐? 다 출산 휴가 가서 고가 다 꺾여서 개네들은 평생 승진 못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 그러고 있어요.” (여성6)*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측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직장 동료들 역시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회사가 출산이나 육아 휴직 대체자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대체자를 공급해 주는 경우에도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직장 동료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남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에 서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왜냐하면 대체 인력을 뽑아줘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안 뽑아주니까 회사가 안 뽑아줘요.” (여성1)*

“민폐이잖아요. 남은 팀원들한테 짐을 주고 가는 거니까.” (여성3)

“제 와이프가 여자인데도 와이프가 같은 팀의 여자가 출산 휴가를 2번 씩 가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둘을 낳으면 2년 동안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뽀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자들 자체도 싫어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지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눈치가 당연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갔다 오는 순간, 다들 한직으로 몰리던가. 사실 커리어적으로 뒤쳐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남성3)

“소속된 곳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니까...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런데 비게 되면 대체 인력을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더라도 단기 계약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 중요한 일을 못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옆의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을 나눠주고, 간단한 일을 계약직에게 주고. 이렇게 되니까 옆에서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남성7)

## 2) 돌봄 시스템 미비

첫째 아이나 둘째 출산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충분하지 못한 돌봄 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낮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부모님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둘째 출산을 계획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목적으로 낮시간에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돌봄 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미혼인 남성 참여자도 알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애가 한 번씩 아프면, 입원하면 4~5일, 일주일씩 입원을 하는데, 그러



면 저 같은 경우는 큰집이 다 대구와 울산 쪽에 있기 때문에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휴가를 5일씩 써야 돼요. 그런데 보통 휴가가 보름... 1년에 보름 정도 남짓 있는데, 애가 두 번 아파버리면 휴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점이 힘들죠. 그런데 또 낳게 된다면 정말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남성2)

“저희가 애를 학원을 정말 많이 돌리거든요. 사교육을 7개를 돌려요.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8시인데, 개는 8시까지 뭐를 하나는 거죠. 학교는 12시 반에 끝났는데. 급식해서 12시 반이지, 급식 안 하면 11시 50분에 끝나요. 그러면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 계속 애는 학원을 도는 거예요.” (여성1)

“엄청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 이런 곳 보면.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중략) 많이 부족한 거죠.” (남성8)

일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일명 “아줌마”라고 불리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고 싶어도 이를 위한 비용과 자신의 월급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에 차라리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전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명은 연년생을 낳았는데 아줌마를 쓰려고 했더니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50달라고. 애가 둘이니까. 그런데 이 250이면 ‘내가 회사 안 다니고, 내가 애를 보면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10년이 된 거예요.” (여성3)

“제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 은행인데 파트별로 샐러리 차이가 나

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아줌마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내가 나와서 월급 받는 비용이나 비슷하다 보니,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다 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퇴사하고 아기를 보더라고요.” (여성7)

### 3) 교육비 부담

남녀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 부담이 상당하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 것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야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수입 내에서 무한정 사교육의 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부모로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기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교육 비용이 점차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이 제일 부담을 많이 느끼는 지출 항목이 사교육비더라고요. 학원비가 제일 부담이니까. 초중고 올라가면 금액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월급쟁이가 버는 소득은 뻔한데, 그 안에서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우리 애들은 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뭔가... 나라에서 대책이 나와야. 그 가 처분 소득을 가지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남성7)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하는 방법은 다들 삼성, 현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교육인데... 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져서 사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돈 얘기가잖아요.” (남성4)

“애가 초등학생인데 벌써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는데, 학원을 7개를 돌리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가 클수록 학원비는 더 올라가요. 돈을 더 받더라고요. 추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1)

“사교육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애가 3학년이라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내가 가르치면 되는데 나는 직장을 다니고,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 전화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영어나 국어는 괜찮은데 수학은 사교육을 권장하시는 거예요. 계단식이기 때문에, 이 계단을 놓치면 5학년부터 수포자가 된다고. “어머니,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면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세요”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자기도 자기 애가 있는데 내 자식을 못 가르쳤다... 울화통이 터져서... 그래서 하는데, 내가 수학은 안 가르쳤는데, 수학을 넣으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여성1)

#### 4) 부족한 정부 지원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정부 지원이 유럽이나 북미권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부족함에도 정부는 “생색”만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인색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출산 및 육아 관련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암울하다고 보고 있었다.

“미국은 애 하나당 80만 원씩 현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조건 없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주는데, 대한민국은 왜 연말정산 30만 원 주고 생색내냐... 그렇게 써 놨다라고요. 심지어 개네는 교육도 무료인데. 사교육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생색내지 않냐...” (남성4)

“저도 곁핥기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유럽 쪽에서는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이 꾸준히 나오고, 대학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대학 등록금도.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이 정도로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여성6)

또한 출산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현상이며, 육아라는 과정은 20~30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책임인데 정부 지원이 출산 장려금과 같이 일회성 지원이나 물품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썼는데... 대한민국 강남 어디, 제일 많이 준다는 곳에선 천만 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첫해에는 대한민국이 더 많이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거나 애가 컸을 때는 외국이 훨씬 낫다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1천만 원 주는 것...? 주면 좋죠. 그런데 애가 낳고 나서 한 달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색 내기용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장려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출산 용품으로 많이 주지 않나요? 나는 기저귀가 별

로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거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남성4)

“일회성인데, 사실 애를 낳아서 키우는 데까지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소액이라고 해도 되는 일회성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성7)

### 라. 불안감/좌절감

전술한 미래 불확실성,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여자들은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러한 불안감과 좌절감은 결혼과 출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감당할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점점 더 사회적인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각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좌절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에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지금의 제 월급과… 저는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국가의 공공기관에 있는데… 지금 이대로 30년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정년 퇴임까지 얼마 버는지. 로또 2등 맞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서… 로또를 맞지 않는 한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중략) 지금 당장 저축을 한 달에 50~60 이상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향후 10

년 이내에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계속 50만 원씩만 모은다고 치면, 1년에 600인데... 이렇게 10년 모아도 6천이거든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암담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남성8)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 자체가 흘러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자연 환경적인 것이든, 어쨌든 점점 힘들어질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은 있죠.” (여성6)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희망이 아예 없잖아요... (중략)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 어렵게 학교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 집을 사고 싶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면, 이게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부모님이 등록금 해줘서 편하게 다니고, 알바도 하지 않고, 공부하고, 집도 다 마련된 상태로 사회에 나오면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뒤떨어져 있는데 이 똑같은 걸 내 자식한테 또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럴 바에는 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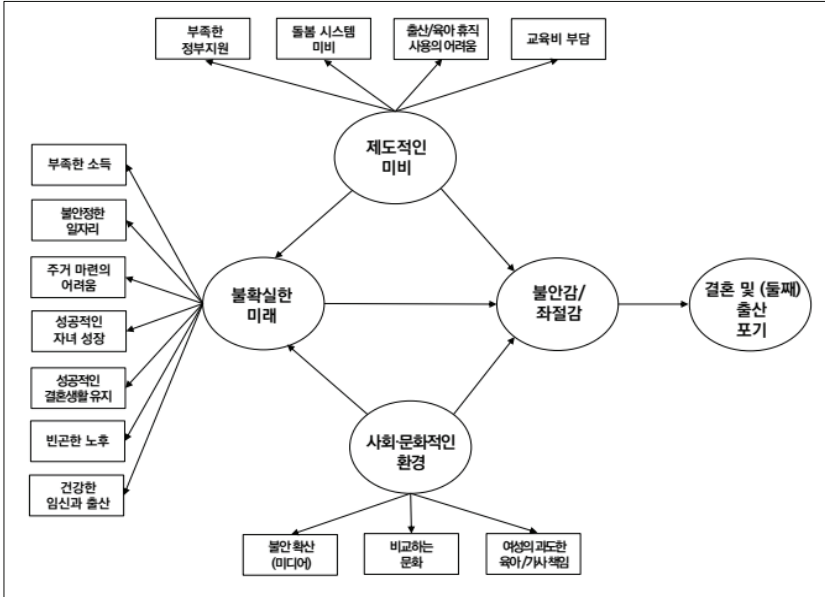
## 제4절 소결

초점 집단 토의 결과에서 도출된 결혼 및 출산(둘째 출산 포함) 결정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낸 결과가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30대와 40대는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부족한 소득이었다. 물가는 매년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돈이 필요한 부분도 빠르게 늘어나는데, 자신의 소득은 이러한 소비 증가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불안감은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젊은층의 미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나라 남성들에 비해 늦게 가족을 형성(family format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강화되고 있어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박지혜(2022)의 연구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로 나타났으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조기퇴직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출생한 첫째 아이의 아버지 연령은 평균 35.1세로 나타났다. 이 두 결과를 결합하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 대략 14년 정도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참가자가 지적한 것과 같이 최근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4년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여도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 명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불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소득보다 많은 양육 비용은 빈곤한 노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림 4-1] 결혼 및 (둘째) 출산 포기 결정 요인 간의 관계



부족한 소득은 다시 주거 마련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인데, 부모의 도움 없이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참가자들의 직장은 모두 서울이고, 서울에서 성장한 만큼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그러나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하여 차선책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권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득이나 주거와 같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성공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최근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자신의 현실에서는 TV 속 연예인들처럼 여유롭게 육아



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가임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노산의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환경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인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경향은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타자와의 비교는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남성들의 경우 주로 부동산 가치 등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을 타자와 비교하고 있었고, 여성들의 경우 자녀들이 또래 집단과 비교당하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소셜 미디어 활용이 보편화된 현재에는 이러한 타자와의 비교가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이들의 화려한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제도적인 미비도 청년층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불안감과 좌절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기업문화가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사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사측의 태도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눈총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도 역시 회사가 대체자를 뽑아주지 않거나, 권한이 없는 비정규직 대체자를 배정하여 남아 있는 팀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청년층은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교육이 매우 중

요하고, 다른 이들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보육의 대체제로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교육 비용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쉽게 줄일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교육 의존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출산 관련 지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의 보육 시스템이 일부는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양질의 보육 서비스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보육 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아 일부 여성들은 커리어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이 모든 요인들이 한국 청년층의 불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타인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장기간의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등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전 세계적인 이슈들(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한국 청년층의 불안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최근 장경섭(2023)은 한국이 이룩해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적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은 국민들이 사회 재생산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경제개발을 앞세워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충실히 따랐으며,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출산을 감소였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왔고,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남녀 참여자들 중 가족이나 지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밝힌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출산에 회의적이었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저출산 관련 논의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제5장

###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

제1절 개요

제2절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제4절 소결



## 제 5 장

#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

### 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최근 현황과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각 국가의 노력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마다 보이는 출산율 수준에 어떠한 함의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출산율 하락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들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정책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젊은 노동 인력이 서유럽 국가로 이주하여 인구 감소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도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선진 서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명백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 혹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암묵적으로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가족 정책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 OECD는 가족 정책을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아동 수당 및 조세 혜택 등), 서비스 지원 정책(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등), 시간 지원 정책(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정책 등)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1). 프랑스는 가족 정책을 “가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사회보장기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프랑스 행정부, 2023b). 프랑스 가족 정책의 목적은 출산 지원을 통해 세대의 교체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목적과 함께, 최근에 변화된 가족 형태 및 가족 생활을 반영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 및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프랑스 행정부, 2023b). 이렇듯 가족 정책은 가족 수당이나 보육 서비스와 같이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정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가족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가족 연금 권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포함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족 정책을 취약한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보는 성격이 강했으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가족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가족 정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천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가족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가족 정책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직면한 상황과 가족 정책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가족 정책의 범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을 체계적인 틀 안에서 살펴보고자, MISSOC에 포함되어 있는 “모성 휴가/부성 휴가” 그리고 “가족 급여”를 중심으로 최근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았다.<sup>8)</sup>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8) EU는 회원국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MISSOC(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을 구축하여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MISSOC에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범주의



MISSOC 내용을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보고서인 국가별 “Your Social Security Rights”<sup>9)</sup>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헝가리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출산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과 싱가포르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유사하게 일본은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 그리고 싱가포르는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각 국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과 최근의 정책 동향이 소개되어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은 이러한 두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공식적인 자료 이외에 최근 각 국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와 최근 정책 동향에 대한 내용은 각 국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취합한 국가별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Financing, Health care, Sickness-cash benefits, Maternity/Paternity, Invalidity, Old-age, Survivors, Accidents at work and occupational disease, Family benefits, Unemployment, Guaranteed minimum resources, Long-term care.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2023. 7. 1 인출)

9) “Your Social Security Rights”의 20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장에서 제시한 정책 내용과 급여액은 2022년도 현황이다.

## 제2절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

### 1. 프랑스<sup>10)</sup>

EU의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France」는 프랑스 가족 수당을 일반적인 수당, 영아 수당, 특별한 수당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당에는 가족 수당(Allocation familiales), 임시 일시불 보조금(Allocation forfaitaire provisoire), 가족 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한부모 수당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e)이 있다. 영아 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에는 출산입양 보너스(Prime à la naissance/ à l'adoption), 기초 수당(Allocation de base), 자녀 교육 분담 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이 있다. 특별한 수당에는 장애 아동 교육 수당(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개학 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자녀 간호 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주거 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이사 수당(Prime de déménagement)이 있다.<sup>11)</sup>

10) 본 절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France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1) 프랑스 행정부 사이트는 프랑스의 가족 수당을 첫째아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 둘째아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그리고 취약한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분류 체계에 포함된 정책들의 내용은 본 고가 정리한 내용과 동일하다.

(프랑스 행정부, 2023a.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56> 에서 2023년 7월 1일 인출).

모성 및 부성 휴가에는 출산 전후 휴가(Le congé de maternité), 육아 휴직(Le congé parental d'éducation), 가족 관련 휴가(Les congés pour événements familiaux et le congé de deuil), 자녀 입양 휴가(Le congé d'adoption), 아버지 돌봄 휴가(Le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자녀 돌봄 휴가(Les congés et absences pour enfant malade)가 있다.

본 절에서는 EU의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France」에서 구분한 분류 체계에 따라 프랑스 가족 수당 제도와 모성 및 부성 휴가 제도의 최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가. 가족 수당

프랑스의 가족 수당은 프랑스에 안정적이고 정규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급된다. 몇몇 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며, 가족 수당은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지급된다.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적·생물학적·입양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있다.

### 1) 일반적인 수당

가족 수당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급여 액수는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된다. 가족 수당은 매년 4월 1일에 책정되는 기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책정된다. 2021~2022년도 기준으로 두 자녀 가족의 최대 급여액은 132.74유로, 세 자녀 가족의 최대 급여액은 302.81유로, 네 자녀 가족의 최대 급여액은 472.88유로이

다. 자녀 연령 14세부터 66.37유로가 추가된다. 이러한 가족 수당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2~4의 숫자로 나누어서 지급된다.

임시 일시불 보조금은 적어도 세 명 이상 자녀가 있고 한 명 이상의 자녀가 20세가 넘어서 가족 수당의 액수가 감소된 가족에게 지급된다. 최대 월 급여액은 83.93유로이다.

가족 보조금은 3세부터 21세까지 세 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월 급여액은 172.77유로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 259.17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편모나 편부 혹은 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편부 혹은 편모는 월 116.69유로, 고아는 월 155.55유로가 지급된다.

## 2) 영아 수당

출산·입양 보너스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사람들에게 자녀 출생 시 혹은 20세 미만 자녀 입양 시 지불하는 수당이다. 일시불로 자녀 출산 시 953.03유로, 자녀 입양 시 1,906.05유로가 지급된다.

기초 수당은 출산·입양 보너스가 지급된 이후에 지원되는 수당으로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며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3세가 되기 전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한 날부터 3년 동안 자녀 연령 20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72.77~86.38유로를 지급한다.

자녀 교육 분담 수당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가 3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자녀 연령이 20세 미만일 때 까지 지원된다. 급여액은 월 400.79유로이며, 근로 시간의 50% 미만을 근

로할 경우 259.09유로, 근로 시간의 50~80% 미만 근로 시 149.46유로를 지원한다.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은 6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소규모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급여액은 자녀 연령,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다.

### 3) 특별한 수당

장애아동교육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특별한 재가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월 132.74유로를 지급하며 한부모, 도움 필요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상향되어 지급될 수 있다.

개학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6~18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 372.17~406.31유로를 지급한다.

자녀 간호 수당은 20세 미만 자녀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인 지지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부부는 일당 44.09유로, 한부모는 일당 52.39유로가 지급되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자녀의 건강 상태가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 112.79유로가 지원될 수 있다.

주거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주거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기 위한 수당이다. 급여액은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주거지 위치, 월세 비용에 근거하여 가족수당금고가 책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정된다.

이사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

육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지에 대하여 주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자녀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995.54유로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이사에 따라 발생한 비용만큼 지원한다. 자녀 1명 추가 당 82.96유로가 추가된다.

## 나. 모성 휴가 및 부성 휴가

프랑스에서 가족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는 출산 전후 휴가(Le congé de maternité), 육아 휴직(Le congé parental d'éducation), 가족 관련 휴가(Les congés pour événements familiaux et le congé de deuil), 자녀 입양 휴가(Le congé d'adoption), 아버지 돌봄 휴가(Le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자녀 돌봄 휴가(Les congés et absences pour enfant malade)가 있다.

### 1) 출산 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자녀 수와 출산 예정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다태아 출산일 경우 휴가 일수가 증가한다. 첫째아 혹은 둘째아를 출산할 때 총 16주, 셋째아 출산 시 총 26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두 쌍둥이 출산 시 34주, 두 쌍둥이 이상 출산 시 46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후 총 8주 동안은 고용될 수 없으며, 출산 후에 반드시 6주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출산 휴가 기간에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휴가 및 그 후 10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통지를 할 수 없다. 출산 휴가가 끝나면 근로자는 이전 직장 또는 최소한 동등한 급여를 받는 유사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표 5-1〉 프랑스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신 전	임신 후	계
일반적인 경우			
첫째아 혹은 둘째아	6주	10주	16주
셋째아	8주	18주	26주
두 쌍둥이 출산	12주	22주	34주
두 쌍둥이 이상 출산	24주	22주	46주

자료: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2023).

<https://travail-emploi.gouv.fr/droit-du-travail/les-absences-pour-maladie-et-conges-pour-evenements-familiaux/article/le-conge-de-maternite> 에서 2023. 7. 1. 인출.

## 2) 육아 휴직

자녀를 출산하거나 만 16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사람은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전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로 일할 수도 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시간제 근무 기간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직업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육아 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처음에는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 연장할 수 있지만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이후에는 연장할 수 없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까지 육아 휴직이 연장될 수 있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다태아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늦어도 자녀의 만 6세 생일 이전까지 종료된다. 휴가 기간에 자녀가 사망하거나 가계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로서 자녀 교육 분담 수당(PreParE)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육아 휴직 제도와 PreParE는 독립적인 제도이다. PreParE는 가족 수당 기금 혹은 농업 사회보장 기금에서 지급되는 혜택이다.

육아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근로 조건이 있다. PreParE를 받기 위해서도 사전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3) 가족 관련 휴가

가족 관련 휴가는 가족의 출산, 결혼, 사망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이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파트너 출산 시 3일, 25세 미만 가족의 사망 시 최소 8일, 자녀 입양 시 3일, 자녀의 장애 진단 시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4) 자녀 입양 휴가

자녀 입양 휴가는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자녀 입양 휴가 일수는 양육하는 자녀 수와 입양하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자녀 입양 휴가 일수는 16주이며, 입양 자녀와 합하여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8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2주의 입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입양 휴가는 근로자 부부 각각에게 부여된다. 부모가 모두 입양 휴가를 사용할 때 한 명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5일(부모당 최대 16주), 두 자녀 이상을 입양하는 경우 32일(부모당 최대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입양 휴가 동안 근로자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 체계가 지급하는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5) 아버지 돌봄 휴가

자녀 출산 후 아버지 근로자 혹은 모의 파트너 근로자는 25일의 아버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아버



지 돌봄 휴가는 32일이다. 모의 출산 후 3일의 출산 휴가 직후에 4일의 아버지 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21일(다태아의 경우 28일)을 최소 5일씩 두 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입원한 경우 출산 휴가 직후에 휴가를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아버지 돌봄 휴가 기간 동안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6) 자녀 돌봄 휴가

16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가 어리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돌봄 휴가 일수는 증가한다. 자녀가 1세보다 어리거나 3명 이상의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5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 다. 2008년 이후 프랑스 가족 정책의 동향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Masson, 2015). 1차 시기에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출을 늘려서 경제 위기의 영향력을 상쇄하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감세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15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2차 시기인 2012년부터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정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가족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2년에 가족 수당 인상률을 동결하였으며, 소득세 감면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영아

보육수당(PAJE)에 포함된 수당들의 급여액을 삭감하였고, 2015년부터 가족 수당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 가족 보조금을 2018년도에 50% 인상하였으며 2018년까지 275,000명의 보육 서비스 정원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제시하고 정원의 10%를 빈곤선 이하 거주 아동들에게 할당하였다.

가족 수당은 전통적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세 가지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액수로 지급하게 되었다. 중간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가족들의 수당 금액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3분위 구간에 해당하는 가족은 수당 금액이 4배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가족 수당의 조정은 가족 수당의 전통적인 특성인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22년 1월 26일 프랑스 상원 사회문제위원회는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채택하였다. 본 절에서는 프랑스 상원 사회문제위원회의 문건을 중심으로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2022).

프랑스에서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원칙은 1946년 8월 22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확대하면서 이루어졌다.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원칙은 프랑스 사회에서 수평적 재분배를 구현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가족 정책의 지향성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가족 수당의 보편성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1975년 7월 4일 법에 의해 확립되어 가족 수당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모든 조건이 폐지되었다.

그런데 가족 수당의 보편성은 2015년 가족 수당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부터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인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들은 여전히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된 가족 수당 정책은 보편적인 특성을 완전하게 버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15년도에 개정된 법안의 제목을 “가족 수당의 보편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법안”이라고 붙였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당 급여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체계하에서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은 외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가족 수당 급여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소된 액수의 수당을 받게 된 가족들은 그들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정책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가족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수용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다른 수당(예를 들면 질병 보험 수당)에 까지 확대된다면 프랑스 사회보장 모델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5년의 가족 수당 개혁은 보편성을 훼손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가족 수당 정책에 부여된 목표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의 가족 수당은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정책의 수평적인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가족 수당에 수직적 재분배 논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수평적인 연대 원칙 구현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정책들은 많은 부분이 소득 조건이 부여되거나 특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가족 보조금, 개학 수당, 출산·입양 보조금, 기초 수당 등) 취약한 가족들을 지원한다는 가족 정책의 중요한 목적을 이미 구현하고 있

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취약한 가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수당의 핵심인 수평적 연대 논리를 포기함으로써 가족 정책을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바꿈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2015년 가족 수당의 개혁으로 수급자의 10% 이상이 되는 사람들(약 50만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을 삭감하여, 가족 수당의 개혁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시적인 목적은 달성하였다. 개혁의 첫해인 2016년까지 7억 6천만 유로가 절약되었다. 여기에 추가로 2014년 개정법에 따라 소득세 부과를 위한 가족 계수의 상한액이 2,000유로에서 1,500유로로 인하여 재정 확보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가족 수당 정책은 2015년도 개혁을 통하여 수직적 형평성의 추구라는 새로운 목표는 강화했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인구 구조를 지원한다는 목적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5~2015년 기간 동안 줄곧 2.0명 수준을 유지하였던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20년에 1.82명을 기록하였다. 2014년도와 비교하여 2020년에 출생아 수가 80,000명 감소하였다. 2021년에 합계출산율이 1.83명으로 안정화되었지만, 학계에서는 향후 프랑스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족 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과 출산율 감소와의 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가족 수당의 조정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지원 수준이 감소된 다른 정책들과 함께 잘못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가족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1월 26일에 프랑스 상원 사회문제위원회가 채택한 법안 제1

조는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 8억 3,000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족 부서는 2022년에 17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 수당의 보편성을 회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모델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지출은 투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 스웨덴<sup>12)</sup>

EU의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Sweden」은 스웨덴의 가족 정책을 아동 수당, 부모를 위한 기타 급여, 학생을 위한 급여, 주거 급여, 부모 급여 및 자녀 출생 관련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았다.<sup>13)</sup> 본고에서는 EU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스웨덴 가족 정책의 내용을 정리한다.

### 가. 아동 수당

스웨덴의 아동 수당에는 아동수당(barnbidrag), 확대된 아동 수당(förlängt barnbidrag), 다자녀 보조금(flerbarnstillägg)이 있다. 스웨

12) 본 절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Sweden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3) 스웨덴 사회보장청(2023)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제공하는 혜택, 직장, 구직 또는 학업 대신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무르는 경우 제공하는 부모 수당, 자녀 출산 후 휴가, 자녀 입양 시 혜택, 아동 수당 및 다자녀에 대한 보조금,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를 때 받는 급여, 장애 자녀 대상 급여,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주거 혜택, 한부모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EU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정책들과 스웨덴 사회보장청의 분류 기준에 따른 정책들은 동일한 내용이다. (<https://www.forsakringskassan.se/english/parents> 에서 2023. 7.1 인출)

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스웨덴 아동 수당은 자녀가 출생한 첫 번째 달부터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모든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아동 수당 이후에는 확대된 아동 수당 혹은 학생 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아동 수당 이외 다자녀 가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 확대된 아동 수당, 다자녀 가정 보조금은 부부가 함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부부간에 공유할 수 있다. 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수당은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아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16세 미만 자녀를 위한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웨덴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웨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자녀가 16세가 되면 확대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스웨덴 학생재정위원회가 학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급여는 자녀가 16세가 되고 난 후 1사분기에 지급되며,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의무교육기관이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달까지 혹은 학생 신분을 마칠 때까지 확대된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아동 수당과 함께 다자녀 가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6세 이상이 되더라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종일제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교육적인 지원 혹은 확대된 아동 수당을 받고 있거나, 자녀가 미혼인 경우 다자녀 가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가 20세 되는 6월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동 수당의 급여액은 월 1,250SEK이다. 양육자가 두 명인 경우 각각

의 부모에게 625SEK를 지불한다. 부모가 되면 아동 수당은 자동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며, 자녀 출생 후 첫 달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시작한 첫째 달부터 지급받는다. 아동 수당은 매달 20일에 지급된다.

확대 아동 수당과 학생 수당은 매달 1,250SEK를 지급한다. 16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다. 학생 수당은 스웨덴 학생재정위원회가 지급한다.

## 나. 부모를 위한 기타 급여

부모를 위한 기타 급여에는 양육 지원금(underhållsstöd)과 입양 보조금(adoptionsbidrag)이 있다. 별거한 상태이고 다른 쪽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일시불의 입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입양하고자 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장애아 자녀를 지원하는 다른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이 부모 중에서 일방하고만 사는 경우, 다른 부모 일방은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른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양육 지원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양육 지원금은 자녀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 자녀 연령이 0~10세인 경우 양육 지원금은 월 최대 자녀당 1,673SEK이다. 자녀 연령 11~14세는 월 1,823SEK, 자녀 연령 15세 이상은 월 2,223SEK이다.

입양 보조금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입양은

가족법 그리고 가족지원위원회, 스웨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양 보조금은 입양 자녀 1인당 75,000SEK이며, 조세 부과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 학생을 위한 급여

스웨덴의 학생들은 수당, 대부금, 할인, 특별 보험의 형태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을 위한 급여에는 학생 수당(studiehjälp),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studiemedel), 장애 학생 수당(Rg-bidrag), 교육 시작 보조금(studiestartsstöd)이 있다.

학생 수당은 나이가 16~20세이며,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 기관, 성인 2차 교육 프로그램, 국립 고등학교에 종일제로 다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학생 수당은 지원금, 보충적인 수당, 숙박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수당의 급여액은 월 1,250SEK이다. 학생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더라도 스웨덴 국민이면서 스웨덴에서 공부할 때 보충적인 수당과 숙박 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급여액은 가족의 재정 상태와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서 상이하다.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은 20세가 된 가을부터 국립 고등학교, 성인 교육 기관, 성인 2차 교육 프로그램, 국립 성인 교육 프로그램, 다른 의무교육기관 혹은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을 다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60세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1세가 될 때 자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은 보조금과 대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금은 종일제 학생의 경우 주당 840SEK이며 대부금은 1,932SEK이다. 25세 이상이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특정한 조건하에



서 25세 미만이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당 보조금은 1,859SEK, 대부금은 913SEK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가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며 공부하기 이전부터 일을 해왔다면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로 공부하고 있고 혹은 단시간 동안만 공부하는 경우 지원금이 낮을 수 있다. 학업 중에 일을 한다면 감소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대부금을 신청할 것인지 보조금만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대부금은 2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64세가 될 때까지 완전히 상환해야 한다. 상환 액수는 대부금 규모, 이자율,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에 달려 있다. 상환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학업이 끝난 후에 대부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 액수의 절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 중등 교육기관 이상을 다니면서 청각장애 혹은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학생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 학생 수당은 음식, 주거, 통학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한다. 급여액은 주거 지출 비용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교육 시작 보조금은 실업 상태에 있고 짧은 교육 경험만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등 혹은 중등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다. 동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25~60세,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동안 실업 상태이어야 하며, 짧은 교육 경험만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등 혹은 중등 교육기관에서 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과거 3년 동안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어야 하고, 최소 3주 동안 풀타임의 최소 50%를 공부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종일제 학생으로 있는 50주 동안 매주 2,294SEK를 받는다. 지자체가 교육 시작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평가하고, 신

청서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학생으로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ID 카드 혹은 Mecenat 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스웨덴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 스웨덴 법·재정·행정 서비스 위원회가 발행하는 “Kammarkollegiet”를 통해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라. 주거 급여

소득이 낮은 경우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 급여에는 청년을 위한 주거 수당(bostadsbidrag till unga),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주거 수당(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 주거 보조금(bostadstillägg)이 있다. 주거 수당은 주거 임대료 혹은 월세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수당이다. 주거 수당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자녀가 있는 가족 그리고 자녀가 없는 18~28세 사람들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다. 두 번째 부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특별한 수당이다. 세 번째 부분은 주거가 여러 번 바뀌는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수당이다. 네 번째 부분은 가끔씩만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수당이다.

질병 혹은 활동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위원회가 관리하는 주거 보조금의 형태로 유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가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경우 모두 주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수당을 받는 조건은 어떤 주거 형태를 찾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며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야 한다.

청년을 위한 주거 수당은 나이가 18~28세이며, 주거 비용이

1,800SEK 이상이고, 최대 60m<sup>2</sup>의 넓이에서 사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주거 수당의 최소액은 1,300SEK이다. 주거 수당을 신청하는 주소에 거주해야만 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연 86,720SEK 이하이어야 한다. 결혼했거나 동거하는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103,720SEK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에는 월급이 포함되며 장학금과 학생 보조금도 포함된다.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주거 수당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주거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수당 액수는 주거 비용, 주거의 크기, 가구 소득,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교육 지원을 받고 있거나 확대된 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연금 생활자는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 혹은 활동 보조금을 받고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0세가 되어서 활동 보조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경우 스웨덴에서 살고 있다면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 지원금, 재활 수당, 근로를 시작하고 있어 활동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 보조금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주거 수당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는 소득과 자산, 주거 비용, 집의 크기,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다. 결혼을 했거나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소득이 모두 고려된다. 주거 수당은 올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예상되는 소득보다 실제로 적게 벌게 되는 경우 차액을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다. 주거 보조금 역시 향후 12개월 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기초하여 받을 수 있다.

## 마. 부모 급여 및 자녀 출생 관련 급여

부모가 근로하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공부하는 대신에 자녀와 함께 집

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수단으로 “부모 보험”이라고 알려진 급여이다. 여기에는 부모 급여(föräldrapenning), 임신 부모 급여(tillfällig föräldrapenning), 임신 현금 급여(gravidi), 자녀 출산 혹은 입양 관련 임신 휴가가 포함된다.

부모 급여는 부모당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합하여 총 48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최소 90일은 부모가 각각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 150일까지 휴가를 이전할 수 있다. 자녀 출생 1년 동안 부모 모두가 동시에 30일 동안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질 수 있다 (“dubbeldagar(더블 데이)”). 더블 데이는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부부의 공동 양육이 강화되고 육아 휴직 사용 방식이 유연해질 수 있으며,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동안 산모가 병원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산후 우울증 위험이 감소될 수 있어 모성 건강에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육아 휴직 480일 중에서 384일은 자녀의 네 번째 생일 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96일은 자녀가 12살 되기 전까지 혹은 5학년일을 마칠 때까지 남겨두어 사용할 수 있다. 주당 7일을 모두 휴가로 보내거나 서로 다른 수준으로 시간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임신한 부부는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시 배우자는 자녀 출산과 관련한 임신 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소득 수준과 휴가를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부모 급여는 조세 부과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스웨덴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부모 급여의 급여 수준은 자녀 출산 전 소득 수준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지만, 얼마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가에도 달려 있다. 처음 390일 동안 부모 급여는 질병 급여율에 따라서 지

급되는데 하루 250~1,027SEK 수준이다. 이후 90일에 대해서는 일당 180SEK가 지급된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최소 연속적인 240일 기간 동안 일당 180SEK 이상이 되는 질병 급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40일 이하로 근로하였고 연간 117,590SEK 이하로 소득을 벌었거나 소득이 없었다면 일당 250SEK를 받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수준의 부모 급여이다. 실업자와 학생은 이전에 충분한 소득이 없었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당 250SEK를 받는다. 나머지 90일은 최소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당 180SEK를 받는다.

부모 급여는 자녀를 입양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를 입양하여 보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2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자녀를 입양할 때에도 임시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0일 휴가를 부모가 나누어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다. 2명 이상 자녀를 동시에 입양하는 경우 아동당 추가 18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은 8개월에서 12세까지이다. 자녀당 1년에 최대 12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녀가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는 제한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시 부모 급여는 기본 액수의 7.5 가격 이하의 소득으로 계산되며, 이것은 소득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시 부모 급여는 일자리로 복귀한 후에 지급된다.

임신 중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임신 현금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일상적인 근로 시간의 최소 4분의 1은 근로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주가 더 쉽거나 덜 위험한 작업을 줄 수 없을 경우에 임신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의 약 80%를 지급받는데, 이것은 기본 금액의 7.5배에 0.97을 곱한 값이다. 최대 급여 액수는 세전

770SEK이다.

자녀 출산 혹은 입양과 관련한 임신 휴가는 자녀가 출생했을 때 배우자는 10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이다. 자녀 출생 후 집에 온 날부터 60일이 되는 기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의 4분의 1, 반나절, 4분의 3, 8분의 1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일 이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 바. 최근 스웨덴 가족 정책 동향

최근 스웨덴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전기·연료·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라 어두운 경제 전망을 예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 제도는 물가 수준액에 따라 상향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2023년도에 연금, 학습 보조금, 질병 및 양육 수당 급여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기보다 고소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우선시하도록 결정이 이루어졌다(Sveriges Riksdag, 2023). 이러한 조치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스웨덴 정부가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경제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자녀 출생 1년 동안 부모가 동시에 30일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더블 데이”를 60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2023년 4월 국회에 제안되었다. 더블 데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자녀 출생 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함께 제안되었다(스웨덴 정부, 2023a). 더블 데이 정책의 확대는 출산율 제고라기보다는 양성 평등 확대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 스웨덴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양성 평등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 국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자녀가 유치원에 취원하도록 연락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아동들의 유치원 취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3세부터 6세가 될 때까지 지자체가 유치원의 목적과 아동이 유치원에 취원할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단기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취원하도록 하였다. 3세가 될 아동은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유치원에 예약된 장소가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들이 스웨덴어를 잘 배우고 유치원 취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 정부, 2023b).

### 3. 독일<sup>14)</sup>

독일의 가족 급여는 아동 급여와 부모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 급여는 아동 수당(Kindergeld)이 기본이 되는 수당이며,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이 있다. 최근에 팬데믹의 영향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 보너스(kinderbonus)와 즉시 지원금(Sofortzuschlag)이 마련되었다. 부모 수당에는 기본부모수당(Basiselterngeld),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가 있다. 이 밖에도 기타 수당으로 한부모 대상 부양 보조금(Unterhaltvorschuss), 아동의 교육과 참여를 위한 현금 지원이 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휴가로서 출산 휴가 및 부성 휴가, 육아 휴직 제도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14) 본 절의 주요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Germany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가. 아동 급여

### 1)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 배우자 혹은 등록된 파트너의 자녀에 대해 자녀 연령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되는 급여이다. 2022년 현재 첫째아와 둘째아에게 월 219유로, 셋째아에게 월 225유로, 넷째아 이상에게 월 250유로를 지급한다. 자녀가 급여를 받는 고용 상태에 있지 않거나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교육 또는 훈련 중이거나(학교 및 대학 포함), 최대 4개월의 교육 기간 과도기에 있거나, 견습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직업 훈련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인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25세 생일까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 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아동 1인당 월 250유로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1996년 이후 가장 많이 인상된 것이다. 아동 수당의 인상 배경으로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최근 식료품, 임대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이 증가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생활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 2) 아동 보조금

아동 보조금은 2005년 하르츠 개혁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급여와 연계된 보조금으로, 아동 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급여이다. 아동 보조금은 소득이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만 가족의 모든 필요를 충당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지원된다. 2022년 7월 1일에 아동 1인당 229유로로 인상되었으며, 인플레이션으



로 인한 가정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50유로로 인상되었다. 여기에는 자녀당 월 20유로의 즉시 지원금이 포함된다. 즉시 지원금은 자녀에 대해 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같은 가구에 거주하며 25세 미만이고 미혼 혹은 파트너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 한도는 부부의 경우 총 900유로, 한부모는 총 600유로이다.

### 3) 아동 보너스

2022년 7월에 1개월 이상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100유로를 일회성으로 지급하였다. 이 아동 보너스는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가족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아동 보너스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가족지원사무소에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 4) 즉시 지원금

2022년 7월부터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은 매월 20유로의 즉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아동기본보장의 맥락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실업 부조를 받는 가정의 아동,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의 급여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약 290만 명의 빈곤 아동과 그 가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 지원금과 사회 최저 소득 제도의 성인 수혜자에 대한 일회성 지급 법안」을 도입하였다. 즉시 지원금은 기본 아동 수당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며, 제20대 입법 기간에 연방정부의 핵

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즉시 지원금은 기본 아동 수당이 시행될 때까지 빈곤한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독일의 어린이 다섯 명 중 한 명은 빈곤층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더 많은 사회정의를 단호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아동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 기본 수당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 나. 부모 수당

부모 수당은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하여 고용 상태에 있지 않거나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 지급된다. 부모 수당은 기본 부모 수당과 부모 수당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부모 수당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본 부모 수당을 공유할 수 있다. 한부모는 14개월의 기본 부모 수당을 지원받는다. 자녀를 직접 낳지 않은 배우자나 파트너도 자녀를 돌보는 경우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 친인척이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수당은 입양 자녀 혹은 입양을 목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입양 자녀가 집에 온 첫날부터 18세 생일에 이를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부모 수당의 급여액은 순 소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기본 부모 수당은 최소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최근 순소득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형제자매 수당으로 10%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기본 부모 수당의 경우 월 75유로이다. 다태아의 경우 기본 부모 수당은 월 300유로로 증가하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부모 수당을 받는다.

부모 수당 플러스는 기본 부모 수당과는 별도로 부모 모두 연속적으로 2~4개월 동안 주당 평균 24~32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부모 수당 플러스는 최대 부모 수당 급여액의 절반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소 150유로에서 최대 9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형제자매 수당으로 월 37.50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부모 수당 플러스는 150유로 증가한다.

#### 다. 기타 수당

##### 1) 한부모 대상 부양 보조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다른 쪽의 양육자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부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의 소득 제한은 없다. 상대방 부모가 양육비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 정부로부터 선지급 양육비를 받게 된다. 만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부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연령이 12~18세인 경우 사회법 제2권(SGB II)에 따른 급여에 의존하지 않거나, SGB II를 받는 경우 한부모의 총소득이 600유로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양 보조금은 자녀 나이에 따라서 다르며, 급여 수준은 최소 생계비와 아동 수당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0~5세 아동은 최대 월 187유로, 6~11세 최대 월 252유로, 12~17세 최대 월 338유로를 받을 수 있다.

##### 2) 아동의 교육과 참여를 위한 현금 지원

교육 패키지라고도 하는 교육 및 참여를 위한 현금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되는 혜택으로 유치원 및 학교 여행 비용과 교통비 실비 지급, 학교 준비물 비용(학령

기 아동 1인당 매년 174유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과외 등 학습 지원, 급식비 보조(점심식사당 1유로 보조), 아동 및 학생 할인 외에도 아동이 18세 될 때까지 매달 총액 15유로에 상당하는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여 수영, 마사지, 음악 교육, 체육활동 참가, 박물관 방문을 지원한다.

## 라.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간 지원

### 1) 산전 후 휴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여성은 자녀 출산 전 6주 그리고 자녀 출산 후 8주의 총 14주 동안 산전후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산, 다태아 출산, 자녀 출산 후 8주 이내에 의사로부터 출산한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진단 받은 경우, 여성이 장기간 보호를 신청한 경우 자녀 출산 후 휴가 기간은 12주로 늘어난다.

산전 후 휴가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며 급여액은 휴가가 시작되기 이전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대 급여 액수는 일당 13유로이다. 여성이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 휴가 기간 중에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의료보험 기금은 병가 급여 금액까지만 지급한다. 고용주가 병가 급여 금액과 급여 간의 차액을 지불한다.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 휴가 중에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연방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수당을 받는다. 민간 일일 상병수당 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모성보호 기간 동안 약정된 일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전 후 수당 외에 여성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후 의사의 보호와 산파 지원, 의약품·치료제·장비 지원, 병원 입원 및 출산 비용 지원, 가정 내 돌봄 및 가사 지원, 성인교육센터 등 기관으로부터의 교육 등 현물 지원을 받는다.

## 2) 육아 휴직

자녀를 직접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 부모는 직장에 육아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자녀의 만 8세 생일 전날까지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반드시 자녀 출생과 함께 시작하거나 산전후 휴가 이후에 시작할 필요는 없다. 육아 휴직 기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3년 전체 또는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중에는 해고로부터 보호되며, 육아 휴직 후에는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중에는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주당 최대 30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2021년 1월 9일 이후에 자녀가 출생한 부모는 주당 최대 3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친자녀, 아내 또는 남편의 친자녀 또는 동거인의 친자녀, 위탁 아동, 입양 자녀에 대해서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손자녀의 경우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18세 생일 이전에 시작한 교육 또는 훈련 중인 경우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심각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자매 또는 형제, 조카, 손자 또는 증손자가 대신하여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 근무, 기간제 계약, “미니 잡” 또는 재택 근무 등 모든 고용 관계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거나 추가 직업 훈련을 위해 고용된 경우에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자영업자, 주부, 학생, 실업자 및 자원봉사자 등은 육아 휴직을 받을 자격이 없다.

## 마.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연금 혜택

모성 연금(Mütterrente)은 2013년 연방의회 선거 캠페인에서 기독교민

주당과 기독교사회당이 자녀를 둔 부모를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하였다. 모성 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한 번에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1992년 이전에 태어난 각 자녀에 대해 부모는 최대 2.5년의 육아 기간이 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1992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최대 3년의 양육 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3점의 적립 포인트를 받는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출생 시점에 관계없이 자녀 양육 기간이 연장되는데,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쌍둥이를 키운 경우 최대 5년까지 적립된다.

한편, 2002년도에 노후자산법에 근거하며 마련된 리스터 연금은 매년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는 개인 노령연금 제도이다. 리스터 보조금은 수당과 세금 혜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당의 경우 기본 수당과 아동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기본 수당으로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으며, 가구에 아동 수당을 받는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2007년 말 이전에 태어난 각 아동에 대해 주 정부는 185유로의 리스터 수당을 지급하며,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자녀당 연간 300유로를 지급한다. 서로 결혼하고 별거하지 않은 부모 부부의 경우 아동 수당은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 4. 이탈리아<sup>15)</sup>

MISSOC는 이탈리아의 가족 정책을 크게 가족 급여와 산전후 및 부성 휴가로 구분하였다. 가족 급여에는 단일 보편 수당(Assegno unico e

15) 본 절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Italy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universale), 유치원 바우처(Bonus asilo nido)가 포함된다. 산전후 및 부성 휴가에는 의무 출산 휴가(Congedo maternità), 대체적 부성휴가(Congedo di paternità alternativo), 육아 휴직(Congedo parental facoltativo)이 있다. MISSOC 체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마련된 정책으로 국가 출산 수당(Assegno di maternità dello stato), 가족 카드(Carta Famiglia),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및 육아 수당도 포함하여 이탈리아 가족 정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 가. 가족 급여

### 1) 단일 보편 수당

단일 보편 수당은 임신 7개월부터 자녀 연령이 21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2022년 3월, 단일 보편적 수당이 발표 되면서 출산 또는 입양 보너스,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 가족에 대한 수당, 고아가 있는 가족에 관한 수당, 출산 수당("보너스 베베"), 21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가 단일 보편 수당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단일 보편 수당은 부양 자녀에 대한 많은 혜택을 간소화하고 기존의 수당 정책들을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용 상태(취업자 및 실업자)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최대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수당의 급여액은 소득 기준(ISEE)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ISEE는 부양 자녀 수와 연령, 장애아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다. ISEE가 없거나 43,24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양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최소한의 범위로 수당은 지급된다. 18세 이상 성인 자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급된다. 학

교 또는 직업 훈련 과정 또는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견습생 또는 취업 중이며 연간 총소득이 8,000유로 미만인 경우, 실직자로 등록되어 공공 고용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보편적인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부양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이다.

급여액은 가구의 경제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소득이 없거나 ISEE가 43,24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최소 금액이 지급된다. 다자녀 가구, 만 1세 이하의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만 1~3세 자녀, 21세 미만의 어머니,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급여액이 증가한다. 급여 액수는 최대 월 175유로에서 최소 월 50유로 사이에서 다양하게 지급된다. 1자녀 가구의 경우 50유로에서 175유로, 2자녀 가구의 경우 100유로에서 350유로, 3자녀 가구의 경우 165유로에서 610유로, 4자녀 가구의 경우 430유로에서 970유로이다. 장애 자녀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서 85유로에서 105유로까지 다양하다. 18세부터 21세 장애 자녀에 대해서 50유로가 추가되며, 21세가 넘으면 추가액은 제공되지 않는다. 모의 연령이 21세 이하의 경우 급여액은 20유로 상승한다. 부모 모두 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 ISEE가 15,000유로 이하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유로 추가 수당이 적용되며, ISEE가 15,000유로에서 40,000유로 사이인 경우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 100유로가 추가 지급된다. ISEE가 2022년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25,000유로 미만 가구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월별 인상분이 적용된다.

## 2) 유치원 바우처

가구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2016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립 혹은 민간 보육시



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간 1,000유로를 지원하였으나, 최근에 지원 금액이 3,000유로로 확대되었다. ISEE 25,000유로인 경우 연간 3,000유로, ISEE 25,000~4,000유로인 경우 연간 2,500유로, ISEE 4,000유로 이상인 경우 연간 1,500유로를 지원한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지 못할 때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이며 ISEE가 2,500유로인 경우 연간 3,000유로의 가정 양육 지원금이 대체적인 형태로 지원된다.

### 3) 국가 출산 수당(Assegno di maternità dello stato)

국가 출산 수당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비정형 혹은 불연속 근로자일 때 자녀의 출산, 입양, 양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다. 일반 출산 수당을 받기에 충분한 ISEE가 없거나 비정형 혹은 불연속 근로자를 위해 2001년 3월 26일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자는 특정 고용 및 기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도 급여액은 2,360.66유로이다.

### 4) 가족 카드(Carta famiglia)

2020년 3월 18일부터 가족정책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26세 미만 동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가족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점에서 참여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인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족의 구매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 나.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 제도

### 1) 의무 출산 휴가(Congedo maternità obbligatoria)

취업한 산모가 출산(입양 또는 위탁) 전후 최소 5개월 동안 직장을 쉬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되어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후에 최소 5

개월 동안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2022년 6월 20일 법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들도 의무 출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인, 가사 노동자, 돌봄 노동자, 재택 근무자, 고용 계약이 중단된 실업자의 경우 특정한 조건하에서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모성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모든 근로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받는다. 이러한 근로 금지 의무 사항은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에 가입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간제 고용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의무와 급여 간의 연관성이 없다. 모성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여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에 가입한 농업인, 가사 노동자, 독립적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예외이다.

산모는 휴가 시작 전 마지막 급여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수당을 5개월 동안 받게 된다. 2개월 출산 전 기간과 3개월 출산 후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되거나, 자녀 출생 전 1개월과 자녀 출생 후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모성 휴가 기간은 조산인 경우 늘어날 수 있으며, 신생아가 병원에 있는 경우 줄어들 수 있다. 임신 3개월 이후 유산인 경우 급여는 30일 동안 지급된다. 임신 180일 이후 유산은 '출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 2) 대체적 부성 휴가(Congedo di paternita alternatovo)

자녀 출산 5개월 이내 의무적인 출산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는 10일간의 의무적인 부성 휴가를 가져야 한다. 어머니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병, 자녀의 유기 또는 어머니가 신생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독립적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부여하는 경우 등 어머니가 의무 휴가를 가질 수 없는 특정 조건에서는 아버지가 대신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성 휴가 기간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부성 휴가 급여가 10일 동안 급여의 100%로 지급된다. 10일 동안의 부성 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부는 모가 모성 휴가 급여를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하루 더 부성 휴가를 가질 수 있다.

### 3) 육아 휴직(Congedo parentale facoltativo)

의무적인 출산 휴가가 끝나고 나서 자녀 연령이 3세가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절감된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 휴직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주어질 수 있다. 자녀 출산 첫 3년 동안 부모들 사이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급여의 30%가 지급된다. 공무원인 경우 휴가 처음 30일 동안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6개월 육아 휴직 후에 자녀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5개월 동안 추가적인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다. 동 기간 동안 휴직 급여는 법에 의해 정해진 최소 연금 수준의 2.5배를 넘을 수 없다. 독립적인 근로자의 경우 자녀 출생 1년 이내 3개월 동안 선택적인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의무적인 출산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선택적인 육아 휴직을 갖지 않는 경우 대체로서 최대 6개월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인가된 민간 보육 서비스, 공공 보육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 5. 헝가리<sup>16)</sup>

2000년대 초 이래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헝가리는 특히 출생 순위가 높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헝가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17)</sup> 본 절에서는 헝가리의 대표적인 가족 지원 정책과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헝가리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헝가리의 가족 지원 정책으로 가족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인 아동 수당(családi pótlék), 자녀 기대 지원금(babaváró hitel), 출산 축하금(anysági támogatás), 육아 휴직 수당에 해당하는 영아 돌봄 비용(csecsemőgondozási díj: CSED), 자녀 양육비(gyermekgondozási díj: GYED), 다자녀 양육 지원금(gyermeknevelési támogatás), 추가적인 아동 급여,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정책인 가족 주택 건설 수당에 대해서 알아본다.

### 가. 가족 대상 현금 지원

#### 1) 아동 수당

헝가리에서 아동 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하여 1938년에 도입되었고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헝가리의

16) 본 절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Hungary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7) 헝가리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3.0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1번째로 높다(OECD Family Database, 2023).

아동 수당 제도는 1999년부터 보편적인 지원이 되었다. 아동 수당은 월 단위로 아동 1인당 급여로 지급된다. 아동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960년 평균 임금의 5.2%였으며, 1975년에 평균 임금의 10.4%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 평균 임금의 21.2%까지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 평균 임금의 7.8%로 감소하였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동 수당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 체제 전환을 경험하면서 아동 수당은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9년에 가족 대상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동 수당이 전체 가족 정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되었다. 최근 아동 수당이 전체 가족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9%이다.

아동 수당은 자녀 출생부터 의무교육기관을 다닐 때까지(0~16세) 지원되며, 자녀가 고등학교 혹은 직업학교에 다니는 경우 20세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특별한 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3세까지,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된다. 학업을 위하여 집을 떠나 국내 혹은 국외에 사는 경우, 의료적인 치료를 위하여 집을 떠나 있는 경우에도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나 유치원에 나오지 않으면 급여 지급은 정지된다.

아동 수당의 급여 액수는 가족 유형(부부 혹은 한부모) 및 자녀 수, 만성질환 및 장애 유무 등 아동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2022년도 아동 1인당 월 아동 수당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1자녀 가족 12,200HUF, 1자녀 한부모 13,700HUF, 2자녀 가족 13,300HUF, 2자녀 한부모 14,800HUF, 3자녀 이상 가족 16,000HUF, 3자녀 이상 한부모 17,000HUF, 만성질환 혹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가족 23,300HUF, 만성 질환 혹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한부모 25,900HUF.

## 2) 자녀 기대 지원금

자녀 기대 지원금은 2019년에 출산율 증가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부인 연령이 가임기인 18세부터 40세에 해당되는 혼인한 부부는 부부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해 온 경우 10백만HUF를 이자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대부금은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은행을 통해서 대출 업무가 이루어진다.

자녀 출산 5년 이내에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상환할 필요가 없고, 총대부기간 동안 이자 없이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자녀를 낳는 경우 원금의 30%를 감면받으며, 셋째아 출산 시 전체 원금 상환을 면제받는다.

## 나. 육아 휴직 수당

### 1) 영아 돌봄 비용

자녀 출산 후에 최대 168일(24주)의 산전후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4주의 휴가는 출산 전에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 2년 동안 최소 365일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영아 돌봄 비용이 지원된다. 오랜 기간 동안 영아 돌봄 비용은 소득의 70%를 지원했으나, 2021년 7월부터 소득의 100%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출산 전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액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평균 소득보다 훨씬 낮은 액수이다.

## 2) 자녀 양육비

근로 여성들이 자녀 연령 7~24개월 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남아 있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 양육비 제도는 198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상한다. 급여액은 소득의 7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최저 소득의 2배 수준이다. 2022년 현재 최대 급여액은 234,360HUF이다. 자녀 연령 1세 이후에 모 대신에 부가 집에 남아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월령 25~36개월 동안 모 혹은 부가 집에 남아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이 시기 동안에는 정액의 급여가 지급된다. 과거에 고용되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자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액의 자녀 양육비가 자녀 출생부터 자녀 연령 3세까지 지급된다. 정액의 자녀 양육비 급여액은 월 28,500HUF이다.

## 3) 다자녀 양육 지원금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막내 자녀 연령이 3세가 되는 날부터 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다자녀 양육 지원금을 받는 부모는 주당 30시간까지 유급 노동을 할 수 있으며, 집에서 일하는 경우 더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지원금의 급여액은 최소 고령연금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2022년 현재 월 28,500HUF이다.

## 4) 추가적인 양육 급여

2014년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활동을 멈추고 집에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원했으며, 자녀 양육비를 받는 동안에는 근로 활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 즉, 자녀 양육비 제도는 근로하는 대신에 집에서 자녀를 돌

보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

2014년부터 여성과 남성은 자녀 출산 이전부터 고용되어 있다면 아동 연령 7~24개월 동안 동시에 부모가 종일제로 근로하더라도 ‘추가적인’ 양육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가 시간제 혹은 종일제로 일하는 경우 모두 추가적인 양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도입은 일과 가정 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혹은 자녀 양육을 부모가 할 것인지 혹은 친인척이나 보육시설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부모가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가족에 대한 기타 지원

가족 주택 건설 수당은 2015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동 정책은 과거의 주거 보조금 제도를 상당 수준 확대한 정책이다. 가족 주택 건설 수당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함께 지원받을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주택 구매를 위한 국가 지원, 주택 구매를 위한 대부금 지원, 새로운 주택 건설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자산 구매에 대한 4% 재산세 감면.

가족 주택 건설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재산의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며, 새롭게 짓는 주택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액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지원 금액은 600,000HUF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0백만 HUF에 이른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은 절감된 이자율로 추가적인 대부금을 받을 수 있다.



## 라. 헝가리 가족 정책의 최근 동향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헝가리가 가족 정책을 현격하게 확대한 이후 헝가리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확대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초래하였고, 헝가리의 출산율이 더 이상 감소하는 것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인구 감소 자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OECD, 2023).

1990년대 초반 동유럽 국가의 체제 변환에 따라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자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헝가리는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가족 대상 조세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동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 제고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양육 지원금은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만 세 자녀 이상 출산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감면 정책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부모에게서만 매우 작은 효과가 나타났을 뿐이었다(Spéder, Murinkó & Oláh, 2020).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1985~1996년 기간 동안 헝가리의 주된 가족 정책이었다. 동 시기에 자녀 출산 후 24개월 동안 과거 소득의 약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명백히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이 도입되기 전과 도입되고 난 후 출산율의 변화를 계량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자녀 출산 시기뿐만 아니라, 완결출산율 수준 자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시기는 약 8~10% 증가하였으며, 완결출산율 수준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Kapitány, 2008).

2019년도에 도입된 자녀 기대 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미친 효과는 2020년 3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 도입 이후 출생아 수는 8~10% 정도 증가하였고, 2020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9개월 이후부터 헝가리의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 추세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 1. 일본<sup>18)</sup>

본 절에서는 2021년도 일본의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살펴본다. 일본은 2021년도 저출산 사회대책의 중점 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표 5-2〉). 이러한 다섯 가지 주제는 출산율 저하를 둘러싼 최근의 쟁점 이슈들을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출산력 결정 요인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중점 과제를 “육아 세대가 장래 전망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에 대응하여 희망적인 장래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신세대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육아 가정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두 번째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역에서의 육아 지원이 급격하게 열악

---

18) 본 절의 주요 내용은 일본 내각부. (2023). 소자화사회대책백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index.html>에서 2023.7.1 인출

해지고 있고 지방 소멸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세 번째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중점 과제로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지지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따뜻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연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 및 난임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 지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결혼 및 육아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학기술 성과 등 새로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점 과제에 대한 세부 과제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육아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일가정 양립, 남성의 육아 참여, 임신부터 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지원)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력 결정 요인(청년들의 미래 전망, 근로 유형의 다양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전, 임신 및 출산, 육아의 생애 주기별 단계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여 결혼 전부터 육아 단계까지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5-3〉). 앞의 다섯 가지 중점 과제가 특히 육아 단계에 집중되어 각 해당되는 생애 주기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표 5-2〉 2021년 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의 중점 과제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I. 육아 세대가 장래 전망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1. 젊은 세대가 장래에 전망을 가질 고용 환경 등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졸자·기졸자 취업 지원</li> <li>- 취업 경로의 복선화에 대응한 다양한 취직 시스템 정비</li> <li>- 청년들의 기술 계발 지원</li> <li>- 비정규 고용 대책 추진</li> <li>- 결혼·육아·교육 자금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li> </ul>
	2.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공공 단체가 실시하는 종합적인 결혼 지원 대책 지원</li> <li>- AI를 비롯한 매칭 시스템 고도화</li> <li>- 결혼에 따른 새로운 생활 비용(집세, 이사 비용 등) 지원(“결혼 신생활지원사업”)</li> <li>- 결혼 지원 담당자 전국 연계 회의 개최</li> <li>- 결혼 지원 자원봉사 등 육성 프로그램</li> </ul>
	3. 남녀 모두 일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부터 “신육아 안심플랜”에 따른 보육 정원 확대 및 대기 아동 해소</li> <li>- 보육 교사 확보 대책</li> <li>- “신방과후 아이종합플랜” 실시</li> <li>-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 촉진</li> <li>- 고등학교 등에서 임신한 학생에 대한 배려</li> <li>- 육아 휴직 및 육아 단시간 근무 제도 정착</li> </ul>
	4. 육아 등에 의해 이직한 여성의 재취업 및 지역 활동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더스 헬로워크 사업”을 통한 재취업 종합 지원</li> <li>- e러닝 코스 혹은 탁아 서비스를 포함한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li> <li>- “여성의 다양한 쉼터를 위한 배움과 사회 참여 지원” 사업</li> </ul>
	5. 남성의 가사·육아 참가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휴업 등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li> <li>- 남성의 가사 육아에 관한 의식 개혁을 위한 학교 교육</li> </ul>
	6. 일하는 방법과 생활 방식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연차 유급 휴가 취득 촉진</li> <li>- 다양한 정규직 제도 도입 및 보급 (“다양한 정사원 제도”, “단시간 정사원 제도” 등)</li> <li>- 텔레워크 추진</li> <li>- 비정규 고용 대책 추진</li> <li>- 고용에 근거하지 않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li> </ul>
II. 육아 가정의 다양한 요구에 응한다	1. 육아에 관한 지원(경제적 지원, 심리적·육체적 부담의 경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li> <li>- 유아 보육교육의 무상화</li> <li>- 고등학교 학비 지원</li> <li>- 미취학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2022년 4월)</li> <li>- “어린이 육아 지원 신제도” 실시</li> <li>- “이용자 지원 사업,” “일시 보육 사업,” “지역형 보육 사업” 실시</li> </ul>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2. 다자녀 가정 지원	- 유치원 등의 식재료비 및 부식비 면제 - 세 자녀 이상에게 월 최대 6천 엔 추가 지급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 입주 지원 - 다태아 산모에 대한 지원
	3.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는 끊임 없는 지원	-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운영 - “산후 케어” 사업 - “양육 지원 방문 사업”
	4. 양육자의 다양화와 세대 간 양육 지원	- 지역 주민 참여 촉진에 의한 양육자의 다양화 - 지역의 퇴직자 혹은 고령자 등 인력 활용 - 3세대 동거 및 근거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 육아를 지원하는 친족이 근거지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 우선 부여 혹은 집세 할인
	III.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세심한 정책을 추진한다	1. 결혼·육아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에 대한 지원 -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육아 지원  2. 지역 창생과 연계한 정책 추진 - 지역 창생과 연계한 저출산 정책 추진 - “지역 접근법”에 의한 저출산 대책 추진 - 육아 세대에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 여성·젊은이 등의 이주 정착 추진
IV.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만든다	1.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을 응원해 육아 가구를 부드럽게 감싸는 사회적 기운 양성	-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육아 친화적인 사회적 기운 양성 - “육아지원여권” 사업을 통한 육아 가정에 대한 할인 서비스 지원 - “가족의 날”, “가족의 주간” 등을 통한 이해 촉진 - 출산 마크, 유모차 마크의 보급 개발
	2. 임신 중이거나 어린이 동반 친화적인 시설과 외출하기 쉬운 환경 정비	- 대중 교통 기관에서의 어린이 동반 가족에 대한 배려 - 육아 배리어 프리의 추진(건축물, 대중교통기관, 도시 공원 및 하천 공간 등) -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3.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효과적인 정보 발신	- “어린이와 가족, 젊은이 응원단 활동 소개 사업” - “아이 시선 만들기(키즈 디자인)” 추진
V. 과학기술 성과 등 새로운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1. 결혼 지원·육아 분야의 ICT, AI 등의 과학기술의 성과 활용 촉진	- 결혼 지원에서 AI 등의 적절한 활용 - 보육 행정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 시스템 활용 (AI에 의한 보육시설 입소 전형 매칭 등) - 육아 원스톱 서비스 추진 - ICT를 활용한 육아지원서비스

자료: 일본 내각부. (2023). 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index.html> 에서 2023. 7.1에서 인출.

196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표 5-3〉 2021년 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의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I. 결혼 전	1. 라이프 플래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 플래닝을 위한 지식 정보 제공</li> <li>-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 보급</li> <li>- 임신 및 가정·가족의 역할에 관한 교육 및 계발</li> <li>- 유아와 접촉할 기회 제공</li> <li>- 라이프 이벤트를 근거로 한 커리어 교육 추진</li> </ul>
	2. 젊은 세대의 라이프 이벤트를 응원하는 환경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세대의 라이프 이벤트를 응원하는 환경의 정비</li> <li>- 다양한 롤모델 제시</li> <li>- 경영자·관리직의 의식 행동 개혁</li> <li>- “쿠루민 인정 마크”의 다양화</li> <li>- 기업 등에 의한 사업소 내 보육시설 설치 촉진</li> <li>- 기업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li> </ul>
II. 임신 출산	1. 임신 전부터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인공 임신·낙태 등의 상담 지도(여성 건강 지원센터)</li> <li>- 불임 전문 상담 센터의 정비</li> <li>- 불임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li> <li>- 불임 치료와 일과의 양립을 위한 직장 환경 정비</li> </ul>
	2.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는 끊임 없는 지원	<p>※ 중점 세부 과제 “II-3.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는 끊임 없는 지원”과 동일한 내용</p>
	3. 안전하고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건강 진단이나 출산·산전산후 휴업 기간 중의 경제적 부담 경감</li> <li>- 산과의료보상제도의 정비</li> <li>- 재정지원을 통한 산과의 확보 도모</li> <li>- 조산사의 활용(「조산사 활용추진사업」)</li> <li>- 주산기 의료 체제의 정비, 구급 반송 수령 체제의 확보</li> <li>- 모자보건, 모자감염예방 대책 추진</li> <li>- 출산 괴롭힘 등의 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지침</li> <li>- 여성 노동자의 임신 중 및 출산 후 모성건강관리 추진</li> </ul>
III. 육아	1. 아이 육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육아 지원 신제도의 착실한 실시</li> <li>- 보호자의 취업 형태나 취업의 유무 등에 관계되지 않는 다양한 보육·육아 지원의 확충</li> </ul> <p>※ 중점 세부 과제 「II-1. 육아에 관한 지원(경제적 지원, 심리적·육체적 부담의 경감 등)」과 동일한 내용</p>
	2. 육아에 관한 경제적 지원·교육비 부담의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li> <li>- 고등학생 등에의 수학 지원</li> <li>- 고등교육 수학 지원</li> <li>-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 경감을 실시하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지원</li> </ul> <p>※ 중점 세부 과제 「II-1. 육아에 관한 지원(경제적 지원, 심리적·육체적 부담의 경감 등)」과 동일한 내용</p>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3.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위한 일 방식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시간 노동 시정 및 연차 유급 휴가의 취득 촉진</li> <li>- “일과 생활의 조화” 등에 근거하는 대책의 추진</li> <li>- 다양한 정규직 제도 도입·보급</li> <li>- 텔레워크의 추진</li> <li>- 전근 등에 관한 일과 생활의 조화</li> <li>-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도입 및 촉진</li> <li>-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공정한 대우 확보를 향한 대처 (비정규 고용 대책의 추진)</li> </ul> <p>※ 중점 세부 과제 「I-6. 일하는 방법과 생활 방식 개혁」 및 「I-1. 젊은 세대가 장래에 전망을 가질 고용 환경 등의 정비」와 동일한 내용</p>
	4.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여성 활약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안심 플랜」 등에 근거한 보육 정의 정비</li> <li>- 지역의 실적에 대응한 보육 실시</li> <li>- 보육 인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li> <li>- 방과후 아동 클럽 및 방과후 어린이 교실 정비 및 일체적인 실시</li> <li>- 기업 등에 의한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 촉진</li> <li>- 고등학교 등에서의 임신한 학생에 대한 배려</li> <li>- 육아 휴업이나 육아 단시간 근무 등의 양립 지원 제도의 정착 촉진 및 충실화</li> <li>- 육아 등에 의해 이직한 여성의 재취업 지원, 지역 활동 참가 지원</li> <li>- 여성의 직업 생활과 지역에서의 활약 추진</li> </ul> <p>※ 중점 세부 과제 「I-3. 남녀 모두 일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환경 정비」와 동일한 내용</p>
	5.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휴업 등 남성의 육아 참가의 촉진</li> <li>- 남성 국가 공무원의 육아에 수반하는 휴가·휴업의 취득 촉진</li> <li>- 남성의 가사·육아에 관한 계발 보급, 의식 개혁</li> </ul> <p>※ 중점 세부 과제 「I-5. 남성의 가사·육아 참가의 촉진」과 동일한 내용</p>
	6. 육아 담당자의 다양화와 세대 간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의 참가 촉진에 의한 육아 담당자의 다양화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책)</li> <li>- 지역의 퇴직자나 고령자 등의 인재 활용 및 세대 간 교류</li> <li>- 3세대 동거·근거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li> </ul> <p>※ 중점 세부 과제 「II-4. 양육자의 다양화와 세대 간 양육 지원」과 동일한 내용</p>
	7. 다자녀 및 다태아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세대를 배려한 육아,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면에서의 부담 경감책 추진</li> <li>- 아동 수당 지급 방식의 검토</li> <li>- 고등교육 수학 지원</li> </ul>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혹은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등 우선 이용</li> <li>- 주택 정책에서의 다자녀 가구 배려 및 임대 조치</li> <li>- 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li> <li>※ 중점 세부 과제 「II-1 육아에 관한 지원(경제적 지원, 심리적·육체적 부담의 경감 등)」, 「II-2. 다자녀 가정 지원」과 동일한 내용</li> </ul>
8. 주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 세제를 통한 주택 취득 등 지원</li> <li>- 양질의 패밀리어용 임대 주택 공급 촉진</li> <li>- “세이프티 넷 주택 등록 제도”: 민간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육아 세대 등 주택 확보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한 가족의 입주를 거절하지 않는 제도</li> <li>-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육아 세대 혹은 육아 세대와 근거를 희망하는 양육 지원 세대에 대해 신축 임대 주택 모집 시 당첨 배율 우대 혹은 임대료 할인</li> <li>- 보육시설 도입 등 육아 세대의 거주 안정 확보에 이바지하는 선도적인 대처에 대한 국가 지원</li> <li>- “시가지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보육시설을 도입한 경우 보조 실시</li> <li>- 도심 거주 육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부 혹은 중심 시가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나 양호한 주택 시가지 등 환경 정비</li> <li>- 육아 친화적 안전한 도시 실현</li> <li>- 육아지원시설을 포함한 우량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li> <li>- 초중학교의 여유 교실, 유치원 등의 활용에 의한 지역 육아 거점 만들기</li> </ul>
9.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아 의료의 충실, 소아 만성 특정 질병 대책, 예방 접종 추진, 마음의 건강 만들기</li> <li>- 학교의 교육 환경 정비, 지역과 학교의 제휴·협동 추진, 가정 교육 지원, 괴롭힘 방지 대책, 건강한 식생활 보급 촉진, 지역이나 학교에서의 체험활동 추진, 문화 예술 활동 추진, 자연과의 만남, 농업 어업 및 도시와 농산 어촌과의 교류 체험, 어린이 놀이터 확보</li> <li>- 재해 시의 유아 지원, 어린이 사고 방지, 놀이터 및 건축물 등의 안전 대책, 유치원 어린이집의 사고 발생 재발 방지, 교통 안전 교육, 범죄 등 피해 방지, 인터넷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대책, 어린이 청소년 성폭력 근절 대책,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추진</li> </ul>
10. 장애아, 빈곤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li> <li>- 한부모 가정 지원</li> <li>- 아동 학대 방지, 사회적 양육 지원</li> </ul>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li> <li>- 청년 무직자, 히키코모리 등에 대한 지원</li> <li>- 정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li> </ul>
	11. 사회 전체에서 육아를 응원하는 기운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육아 친화적인 사회적 기운의 양성(“육아 지원 여권 사업”의 보급 촉진, “가족의 날”, “가족의 주간” 등을 통한 이해 촉진, 출산 마크, 유모차 마크 보급 개발)</li> <li>- 임신부 및 어린이 동반 친화적인 설치나 외출하기 쉬운 환경 정비(대중교통 기관에서의 어린이 동반 가족에 대한 배려 등 환경 정비, 육아 배리어 프리 추진,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li> </ul> <p>※ 중점 세부 과제 「IV-2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을 응원해 육아 가구를 부드럽게 감싸는 사회적 기운 양성」과 동일한 내용</p>
	12. 육아 분야의 ICT 및 AI 등의 적절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서의 AI, IoT 등의 활용 추진</li> <li>- 육아 원스톱 혹은 논스톱 서비스의 추진</li> <li>- ICT를 활용한 육아지원서비스(Baby tech)의 보급 촉진</li> </ul> <p>※ 중점 세부 과제 「V-1 결혼 지원·육아 분야의 ICT, AI 등의 과학기술의 성과 활용 촉진」과 동일한 내용</p>

자료: 일본 내각부. (2023). 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index.html> 에서 2023. 7.1에서 인출.

## 2. 싱가포르<sup>19)</sup>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은 「Marriage & Parenthood Package」(이하 “M&P”)이다. M&P는 총리실 산하 국가인구인재부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국세청,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가족 생애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001년부터 시행되어 5차례의 개혁을 통해 현재까

19) 본 절의 주요 내용은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of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지 진행되고 있다. 탄포린(2023)은 M&P의 발달 과정을 3기로 구분하여 제1기(2001~2004)는 기혼 부부가 둘째와 셋째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2기(2008~2013)는 지원 폭을 확대하고 취업모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였으며, 제3기(2015~2023)는 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제고한 시기라고 보았다. 특히 제3기는 그동안 확대한 M&P 정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자 기존 정책들에 대한 평가 작업과 함께 대국민 온라인 대화(약 300명 시민 참여)를 통해 재정적 지원과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와 지원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한 시기이다. ‘일과 삶의 조화 촉진’, ‘출산 건강 증진’, ‘자녀 발달 촉진’, ‘가정 생계비 문제 해결’의 4개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최상의 환경과 생애 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여건다면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싶어 할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2021년도 M&P의 주요 내용을 통해 최근 싱가포르가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주거 지원

### 1) 내 집 마련을 위한 시간 단축

2018년 11월 이래로 주문 제작 아파트(BTO) 3,600호 건설을 시작하여 BTO를 얻는 대기 시간을 약 2~3년으로 단축하고, 침실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SBF(Sale of Balance flats)의 최소 95%를 생애 최초 주거 구매자에게 할당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더 일찍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우선정책(Prenthood Priority Scheme: PPS)을 통해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초혼 부부가 주거 구매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임시주거정책(Parenthood Provisional Housing Scheme: PPHS)은 건설 중인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시장 이자율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주거개발위원회(HDB)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가족들이 더 가깝게 살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접 거주 지원금(Proximity Housing Grant: PHG)은 부모 혹은 자녀들과 함께 혹은 가까이(4km 이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재판매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30,000싱가포르 달러까지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3세대 아파트, 혼인한 자녀 우선 정책 (MCPS), 다세대우선정책(MGPS)를 통해 부모 혹은 결혼한 자녀들과 함께 혹은 가까이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지원한다.

### 3) 주거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새로운 HDB의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CPF 주거지원금을 가지고 재판매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HDB 주거 대부금을 받는 경우, 월 가구 소득 상한액이 2019년도에 12,000싱가포르 달러에서 14,0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되었다. 고가의 콘도미니엄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월 가구 소득 상한액이 14,000싱가포르 달러에서 16,0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되었다.

2019년 9월부터 자격 요건이 되는 생애 최초 주거 구매자들은 재판매 혹은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 유형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증가된 CPF 주거 지원금(EHG)을 80,000싱가포르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들과 함께 공공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두 번째로 다

시 집을 사려고 할 때 새로운 출발 지원금(Fresh Start Housing Scheme)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가족이 침실 두 개 혹은 세 개의 오래되지 않은 집을 두 번째로 구매하려고 할 때 증대된 주거 지원금(Step-Up Housing Grant)으로부터 15,000싱가포르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BCA 접근성 재원은 1990년 이전에 건설되어 기본적인 배리어 프리 접근성 증진을 필요로 하는 민간 건물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방 등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건설 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 나. 지역사회·직장에서의 지원

##### 1)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 휴가

싱가포르는 여성의 출산 전후에 16주의 유급 산전후 휴가와 2주의 유급 부성 휴가를 제공한다. 부모 간에 공유하는 유급 부모 휴가를 통해 근로하는 아버지들은 배우자의 산전후 휴가 혹은 입양 휴가에서 4주까지 공유할 수 있다.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하는 여성이 자녀를 입양할 때 12주의 유급 입양 휴가를 가질 수 있다. 2021년 12월부터 근로 조건 때문에 산전후 휴가, 부성 휴가, 입양 휴가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산전후 휴가, 부성 휴가, 입양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막내 자녀 연령이 7세 미만인 근로하는 부모들은 1년에 6일 유급의 자녀 양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막내 자녀 연령이 7~12세인 근로자 부모들은 1년에 2일의 유급 자녀 양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공무원들은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4주의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하는 부모들은 1년에 6일의 무급 영아 양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 2) 가족 친화 작업장에 대한 지원

유연한 근로 관행을 위한 세 가지 기준(FWAs)을 마련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FWA를 제공하고 근로자와 구직자가 FWA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WA는 싱가포르에서 공정하고 진보적인 작업 관행 이행을 증가시키려는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이다. FWA를 채택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는 유연한 시간(근로 시간 및 근로 지속 시간), 유연한 장소(작업 장소), 유연한 업무(작업 범위)에 대한 다양한 근로 관행에 동의하도록 한다.

예상치 못한 돌봄 필요에 대응하는 무급 휴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용주들이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조산·다태아 출산·인지적 혹은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근로자들이 1년에 4주의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중 혹은 입원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1년에 2주까지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3) 가족 유대감 강화

국민위원회의 주창하에 “가족 끌어 안기” 운동을 실시하여 새로운 출산을 축하하고 젊은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액티브 SG 스포츠 프로그램” 공원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유로운 증거 기반 부모 프로그램을 300개 이상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도록 지원한다.

## 다. 취학 전 영유아 돌봄 및 교육

### 1) 영유아 보육 정원 확대

2025년까지 취학 전 아동의 80%가 정부가 지원하는 취학 전 교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보육 정원을 마련한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50% 정도만을 취원할 수 있는 보육 정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몇 년 이내에 종일제 정원 20,000개를 확충하여 200,000개가 넘는 보육 정원을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 2) 양질의 조기 유아 개발

국립유아개발소를 설립하여 국가 유아 전문가를 훈련한다. 유아개발센터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더 수준 높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 3) 영유아 돌봄 비용 지원

기본 지원금으로 근로하는 어머니들에게 2~18개월 영아 자녀가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00싱가포르 달러, 18개월~7세 미만 유아 자녀가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한다. 근로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150싱가포르 달러의 기본 지원금을 지원한다.

근로하는 모가 있는 가족의 월 가구 소득이 12,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일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지원금을 받는다.

〈표 5-4〉 싱가포르의 종일제 영아(2~18개월)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월 기본지원금

(단위: 싱가포르 달러)

월 가구소득	가구원당 가구 소득	기본 지원금 (a)	최대 추가 지원금 (b)	최대 지원금 (a+b)
3,000 이하	750 이하	600	710	1,310
3,001~4,500	751~1,125		640	1,240
4,501~6,000	1,126~1,500		500	1,100
6,001~7,500	1,501~1,875		380	980
7,501~9,000	1,876~2,250		240	840
9,001~10,500	2,251~2,625		100	700
10,501~12,000	2,626~3,000		40	640
12,000 이상	3,000 이상		-	600

주: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자녀(2~18개월)를 가진 근로하는 여성 대상  
 자료: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표 5-5〉 싱가포르의 종일제 유아(18개월~7세)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월 기본지원금

(단위: 싱가포르 달러)

월 가구소득	가구원당 가구 소득	기본 지원금 (a)	최대 추가 지원금 (b)	최대 지원금 (a+b)
3,000 이하	750 이하	300	467	767
3,001~4,500	751~1,125		440	740
4,501~6,000	1,126~1,500		340	640
6,001~7,500	1,501~1,875		260	560
7,501~9,000	1,876~2,250		190	490
9,001~10,500	2,251~2,625		130	430
10,501~12,000	2,626~3,000		80	380
12,000 이상	3,000 이상		-	300

주: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자녀(18개월~7세)를 가진 근로하는 여성 대상  
 자료: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가구소득이 월 12,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이면서 Anchor Operator 조기 교육의 유치원 프로그램 혹은 MOE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유치원 무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부모들이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교육,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동등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중간 단계의 노력으로 정부 지원 시설의 종일제 보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감면해주고자 하고 있다.

#### 4)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교육 단계에 대하여 교육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대된 MOE 재정 지원 정책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 교실을 갖도록 확대하였다. 학생 돌봄 비용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이 학생 돌봄 비용 지원금의 98%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이 지원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폴리테크, 자율적인 대학, ITEs, NAFA, LA SALLE 에서 공부하는 저소득 및 중위 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한다.

### 라. 보건의료 지원

#### 1) 부모와 어린이 지원

2020년 11월 1일부터 싱가포르 어린이들은 국가 예방접종과 아동발달검사에 대해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어린이 예방접종 체계하에서 권고되는 영유아기 예방접종을 지역보건지원소(CHAS), 일반 의원, 종합진료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진료소에서만 지원받던 아동발달검사를 일반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신생아에 대해 정부는 4,000싱가포르 달러를 아동의 Medisave 계좌에 이체하여 아동 의료 비용, Medishield Life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진료, 국가 어린이 예방접종, 입원 비용, 승인된 외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부는 Medisave를 이용하여 산전 돌봄 및 출산 관련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900싱가포르 달러까지 산전 의료 비용에 지출



할 수 있다. 진료 유형에 따라 출산 비용을 위해 750~2,150싱가포르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입원 비용으로 하루당 450싱가포르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Medishield Life는 출산부터 지원되며 임신 혹은 출산 관련 심각한 합병증 치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인공임신시술 지원

인공임신시술에 대해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40세 미만의 부부가 자궁 내 수정 혹은 보조생식시술 등 인공임신시술을 KK 여성과 어린이병원, 국립대학병원, 싱가포르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경우 총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인공임신시술은 최대 3개 신선 주기와 3개 냉동 주기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표 5-6〉 싱가포르의 인공임신시술 지원

(단위: 싱가포르 달러)

구분	싱가포르 국민 부부	영주권 부부	외국인 부부
신선 인공임신시술 (총 3주기까지)	총비용의 75% (7,700까지 지원)	총비용의 55% (5,700까지 지원)	총비용의 35% (3,600까지 지원)
냉동 인공임신시술 (총 3주기까지)	총비용의 75% (2,200까지 지원)	총비용의 55% (1,600까지 지원)	총비용의 35% (1,000까지 지원)
자궁 내 수정	총비용의 75% (1,000까지 지원)	총비용의 55% (700까지 지원)	총비용의 35% (500까지 지원)

자료: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2020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6주기 인공임신시술 공동 지원(six co-funded ART cycles)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총 2회까지 확대되었다. 40세 이상 여성들이 40세가 되기 전에 보조생식시술 혹은 자궁 내 수정 시술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자격 대상이 된다. 자격 대상이 되는 부부들은 인공임신시술의 첫 번째 주기에 6,000싱가포르 달러, 두 번째 주기에 5,000싱가포르 달러, 세 번째 및 그 이상 주기에 4,000달러의 총

15,000싱가포르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공임신기술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생애 전반에 걸쳐 여성들은 최대한의 보조생식기술을 받을 수 있다.

## 마. 자녀 돌봄 지원

### 1) 아기 지원 보조금

부모가 자녀 출산에 대한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아기 지원 보조금(BSG)을 신설하였다. 신생아 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 3,000싱가포르 달러의 일시불 아기 지원금이 제공된다. BSG는 아기 보너스 현금 선물을 받는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2021년 4월 21일부터 아동이 아기 보너스 현금 선물 정책에 등록된 지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 2) 아기 보너스 정책

싱가포르의 아기 보너스 정책은 아기 보너스 현금 선물과 아동발달계좌(CDA)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 보너스 현금 선물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첫째아와 둘째아는 월 8,000싱가포르 달러, 셋째아 이상은 월 10,000싱가포르 달러가 지급된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총 5회 지급된다.

아동발달계좌는 부모가 적립하는 특별 저축 계좌로서 정부는 일정 한도 내에서 부모가 적립한 금액을 매칭 적립해 준다. 부모가 CDA에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최초 적립금으로 3,000싱가포르 달러를 적립해 준다.

〈표 5-7〉 싱가포르의 아동 발달 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

(단위: 싱가포르 달러)

출생 순위	최초 적립금 (a)	최대 정부 매칭 금액 (b)	총 정부 지원금
첫째아	3,000	3,000	6,000
둘째아		6,000 (2021년부터 인상)	9,000 (2021년부터 인상)
셋째아		9,000	12,000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15,000	18,000

주: 1) 최초 적립금은 부모가 입금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정부가 CDA 계좌가 청설될 때 자동적으로 입금해 준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싱가포르 국적 아동 대상

자료: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 3) 가족 대상 조세 감면 정책

부모는 첫째아 5,000 싱가포르 달러, 둘째아 10,000 싱가포르 달러, 셋째아 이상 20,000 싱가포르 달러의 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장 여성은 첫째아에 대해 소득의 15%, 둘째아에 대해 소득의 20%, 셋째아 이상에 대해 소득의 2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있는 아동 소득공제 혜택으로 아동당 4,000 싱가포르 달러, 장애 자녀 조세 감면 혜택으로 아동당 7,500 싱가포르 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하는 여성의 부모, 시부모, 조부모, 시조부모가 12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경우 3,000 싱가포르 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2020년부터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결혼 전인 경우 연령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다.

### 4) 외국인 돌보미 고용을 위한 지원

싱가포르 국적의 16세 미만 자녀를 외국인 돌보미가 돌보는 가정에 대해 월 60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한다. 근로 여성들은 전년도에 외국인 돌보미 1명에 대해 지불한 금액의 두 배 되는 액수를 조세 감면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 바. 교통 지원

### 1) 여권 신청 비용 면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싱가포르 국민 어린이가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2) 포용적이며 가족 친화적인 공공 교통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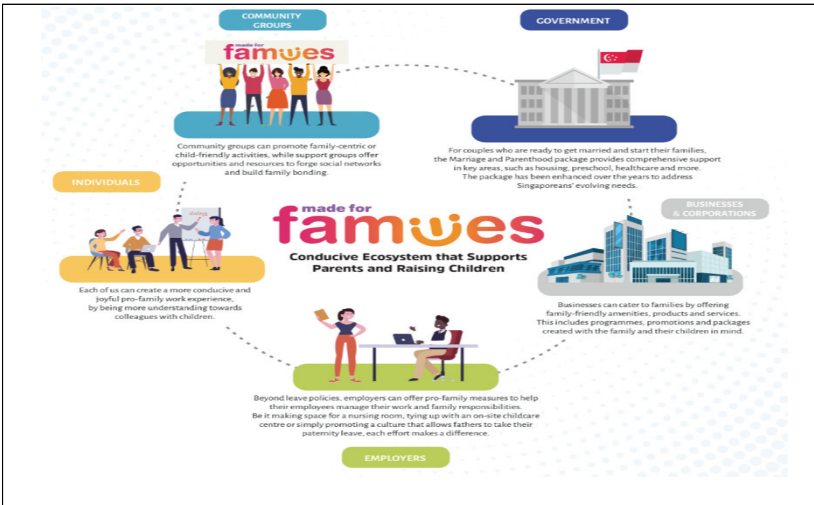
모든 공공 버스에 유모차가 탑승할 수 있고 유모차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모든 버스 환승 구역, 교통 교차 허브, 새로운 MRT 환승역에 자녀를 돌보는 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차 내에 기저귀 교환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20년 5월 5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신장이 1.35m 이하의 4세 이상 어린이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공공 교통수단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공공 교통 수단내에 임산부 그리고 자녀 동반 부모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2020년부터 마련하고 있다.

## 사. “Made for Families” 이니셔티브

싱가포르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M&P와 같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산업 분야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족에게 우호적인 생태 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Made for Families”는 이러한 인식하에 마련된 이니셔티브이다. 정부는 결혼하고 가족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커플에게 M&P 정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주는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 휴직 정책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장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장소 제공,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아버지들이 부성 휴가를 갈 수 있는 직장 내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들은 가족 중심적인 아동 친화적 환경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사회 그룹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족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지지할 수 있으며, 가족과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홍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녀가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를 증진하면서 더 고무적이고, 즐겁고 가족 친화적인 경험을 창조해 낼 수 있다.

[그림 5-1] 싱가포르의 “Made for Families” 이니셔티브



자료: 싱가포르 정부. (2023). Made for Families. <https://www.madeforfamilies.gov.sg/about-us/made-for-families>에서 2023. 7. 1 인출.

## 제4절 소결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약 1.8명 수준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Pison, 2020). 이러한 이유를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은 인구 감소를 우려했던 193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업데이트된 형식으로 강하게 남아 있다. 가족 수당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족 지원 정책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급여액과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설계에 따라 자녀가 많을수록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가족 정책에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이라는 가족 정책의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담겨 있다. 현금 지원으로 가족 수당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당 정책들, 서비스 지원으로 보육사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시간 지원으로서 근로를 그만두고 집에서 자녀를 돌볼 때 지원하는 자녀 교육 분담 수당을 들 수 있다. OECD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될 때 가장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OECD, 2011). 가족 정책 체계에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이 모두 포함되어 가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채택된 법

안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정책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수평적인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수준을 달리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는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가족 정책이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역할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최근의 정책 동향으로서 영아 대상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3세 이상 유아의 대부분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유아의 돌봄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영아 자녀 돌봄과 부모의 일과 가정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여 프랑스 가족 정책은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합하면, 프랑스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한 체계적인 가족 정책의 틀 안에서 다자녀 가정과 일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노력을 통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2010년까지 1.98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21년 현재 1.67명이다. 다른 유럽 저출산 국가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프랑스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인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소위 “롤러 코스트형”으로 경제 상황이 좋으면 출산율이 상승하다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경제 상황이 좋으면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경

제 상황이 안좋아지면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이 위축되면 자녀 출산을 미루게 되어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의 스웨덴 가족 정책 현황이 스웨덴의 출산율에 갖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암울한 경제 상황하에서 스웨덴 정부는 경제 정책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기보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지출이 경제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하에서 스웨덴의 출산율 성과가 프랑스와 비교하여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암울한 경제 상황하에서도 양성평등을 강화하려는 기조는 “더블 데이”의 확대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블 데이의 확대는 가정 내 자녀 양육을 부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과거보다 하락하였지만 스웨덴이 다른 유럽의 저출산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양성 평등 달성이란 국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셋째, 스웨덴은 가족 정책 내에 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가족 정책에도 개학 수당이 있어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학생을 위한 급여와 대부금, 쿠폰 등 다양한 지원을 가족 정책으로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지원은 아동 수당과 유사하게 부모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2008). 따라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도 스웨덴의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최근 스웨덴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여 유치원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증가된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스웨덴의 출산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라고 본다.

경제적인 지원 정책, 양성 평등 정책 기조의 유지, 학생에 대한 지원,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최근 스웨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새로운 저출산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스웨덴의 출산율을 유럽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주요한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2008년 이후 하락한 반면에,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33명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2021년 현재 1.58명 수준을 보인다. 프랑스와 스웨덴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독일의 가족 정책은 프랑스와 스웨덴이 가족 혹은 아동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해지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2022년에 아동 보너스와 즉시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부터 아동 수당 및 아동 보조금의 급여액이 인상되었다. 특히, 즉시 지원금은 기본 아동 수당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향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 아동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 것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연구 결과는 찾기 힘들지만,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반등하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를 멈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모 수당을 부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면 친인척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제 근무 혹은 기간제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관계에서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근로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을 본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다른 서유럽 국가와 차별적으로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일하는 부모에 대한 정책의 확대가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위험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기본 수당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정부가 아동 양육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 확신을 독일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과 불안을 감소시켜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44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1.25명 수준을 보인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EU가 부여한 재정 건전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긴축재정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가족 정책을 크게 확대하지 못했다. 이는 2022년 3월에 출산 보너스, 다자녀 수당, 고아 수당 등 다양한 아동 대상 지원을 철폐하고 단일보편수당으로 간소화하여 아동에 대한 정책이 크게 축소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정책의 축소가 이탈리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배경일 수 있다.

이탈리아는 남성 생계 부양자, 그리고 여성 돌봄자라는 가정 내 전통적인 역할이 강한 국가이다. 산전 후 출산 휴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고, 휴직 급여도 소득의 30%로 매우 낮은 수

준이다. 짧은 육아 휴직 기간과 낮은 휴직 급여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렵고, 남성이 육아 휴직을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공공 보육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아서 전일제로 일하는 부부의 일과 가정 생활 양립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족 정책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점, 아동에 대한 정책이 통합되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여전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가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결정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여 이탈리아가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1년 1.24명의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현재 1.52명이다. 헝가리의 출산율이 반등한 배경에는 과거부터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들을 들 수 있다. 헝가리는 전형적인 유형의 아동 수당을 193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도 1985년에 도입하여 급여를 소득의 70%까지 지급하는 등 지원 수준도 높았다. 따라서 헝가리 출산율의 반등은 체계적이고도 지원 수준이 높은 가족 정책이 과거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획기적으로 도입하거나 확대된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하게 지출한 공공 재정 수준과 비교하여 출산율의 반등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헝가리 내부에서도 가족 정책의 확대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헝가리가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들이 사회정책으로서 당위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육 급여 정책은 일하는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인데, “추가적”이라는 명목하에 종일제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부모에게도 지급한다는 것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녀 기대 지원금도 자녀 양육 혹은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도덕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금 지원의 확대나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결정 요인에 지속 가능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산 장려적인 성격이 다분한 정책이 아닌 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을 더 건실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헝가리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싱가포르를 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육아 휴직 제도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금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부족한 보육 서비스에 대응하여 보육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국가와는 차별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적인 전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경직적이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의 가족 문화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3세대 가족이 자녀 혹은 가족 돌봄을 위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근거리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집세를 인하해 주고, 주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는 청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과 싱가포르의 대부분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기술 계발을 위한 정책을 저출산 대응 정책에 포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만혼화 그리고 이에 따른 만산화 현상은 출산율을 낮게 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두 국가 모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와 달리 일본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역 상생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의료시설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 베리어 프리 정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주요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 변동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 장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출산율 대응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가별 출산율 변동을 주요한 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80~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지연 변천에 의한 템포 효과로 설명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는 출산율 변동은 경제 위기, 젠더 혁명, 코로나19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2장에서 분석한 다양한 출산 관련 지표들(합계출산율,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코호트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 혼외출산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고 (동유럽 국가) 전반적으로 출산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상승하는 국가나 지역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노력이나 젠더 혁명을 통하여 출산율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다른 지표들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일 내 의미 있는 출산율 반등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 문헌 고찰을 통해 최근의 출산율 변동이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과 더불어, 이러한 요인에서 변화가 나타나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출산력과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고, 출산 및 양육 부담과 생애 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파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출산 및 육아 휴직, 공공 보육 서비스, 현금 지원 등 정책적인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자기실현주의는 부모 본인의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기실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해서 양육 부담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성평등주의는 남성의 육아 부담이나 남성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초저출산의 주요한 결정 요인은 출산율 하락과 상승의 비대칭성, 경제적 불안정성,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출산율의 회복 혹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은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남아 있는 남성 생계 부양 역할과 결부되어 출산을 주저하게 하고 있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인해 정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초점 집단 토론을 통해 제3장에서 확인된 전통적인 출산력 결정 요인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된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과

관련해 가임기 남녀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토론 결과,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의 키워드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감·좌절감이었다. 소득, 일자리, 주거, 자녀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은 과거와는 달리 한층 심화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감 및 좌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결부되어 가임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다. 남녀 모두 오랜 학업 기간과 높은 입직 연령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늦게 하게 되고, 여기서 남성은 조기 은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 직면하여 소득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여성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이 강해져 특히 둘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SNS와 미디어에서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한국 특유의 체면 문화와 경쟁심과 결부되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 욕구와 부담을 더욱 키워서 결국 자신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임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좌절감을 상쇄해 주기에는 역부족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적인 정책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프랑스, 스웨덴,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

정책의 보편적인 특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고, 독일은 아동복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국가가 정책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결정 요인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 출산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을 확대할 때에도 그것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저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출산율 반등의 정도가 미비할 경우 비효율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 정책 추진을 위한 탄력을 잃게 할 수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경직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 값비싼 주거 비용, 다양해진 양육 욕구, 만혼화 및 만산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대응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기본 전략에 포함하여 정책 방향을 재편하고 있었다.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최근의 글로벌 출산율 하락은 상승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까운 시일에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심화된 인구 고령화 및 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어떠한 당위성하에서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가져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초점 집단 토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비혼과 무자녀를 결심했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마음을 변경한 대부분의 이유는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과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두 명에 가깝다는 것이 이것을 대변한다. 결혼과 자녀 출산을 희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정부의 결혼과 출산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하게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출산율 성과를 보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선동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가족 정책, 양성평등 정책, 아동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가족, 성평등,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좌절감을 극복하는 데 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일시적이고 대증적인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본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더욱이 최근에 출산 결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셋째,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자녀 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등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응한 정책 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출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적인 방향성도 이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소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자중과 각성의 노력이 요청된다. 현실적이지 않고 경쟁을 부추기는 비현실적인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모습을 부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중요성과 자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최근 출산율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전면적인 변화가 초저출산의 기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가치관은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초저출산의 지속은 정책적 개입을 통한 출산율 반등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경제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부모 됨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강한 자기실현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청년세대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가족 형성을 피하는 현상이 초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 생애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정책적 개입은 초저출산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육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서 부모 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 계봉오. (2016). 혼인율과 혼인출산율 추이를 활용한 출산율 추계 방법. 통계청 연구용역.
- 계봉오. (2021).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분해분석을 활용한 출산율 추계. 통계청 연구용역.
- 계봉오, 황인찬. (2023). 결혼의향 변화에 대한 다상태 생명표 분석. 조사연구, 24(1), 81-111.
-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 김영미, 계봉오. (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 한국여성학, 31(3), 1-30.
- 스웨덴 사회보장청. (2023). *Parents*. <https://www.forsakringskassan.se/english/parents> 에서 2023. 7. 1. 인출.
- 스웨덴 사회보험청. (2008). *Barn och foraldrar i socialforsakringen: Rapport fran forskarseminarium i Umea 17-18 januari 2018*.
- 스웨덴 정부. (2023a).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4/forslag-om-okad-flexibilitet-i-foraldrapenningen-pa-remiss/> 에서 2023. 8. 1. 인출.
- 스웨덴 정부. (2023b).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betankande/forskola-for-fler-barn\\_H901UbU24/#step](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betankande/forskola-for-fler-barn_H901UbU24/#step) Beslut 에서 2023. 8. 1. 인출.
- 싱가포르 정부. (2023). *Made for Families*. <https://www.madeforfamilies.gov.sg/about-us/made-for-families>에서 2023. 7. 1 인출.
- 신윤정, 정희선, 계봉오, 김영룡, 최슬기. (2022).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진전 시대의 한국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지혜. (2022).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미래에셋투자자와 연금리포트 No. 54.
- 유삼현, 최슬기, 계봉오. (2022). 출생통계 신규 지표 개발 방안 연구. 통계청 연구용역.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 35(3), 117-144.
- 이철희. (2019).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 분석, 25(1), 37-77.
- 인구주택총조사. (2020). [https://www.census.go.kr/dat/ysr/ysrList.do?q\\_menu=5&q\\_sub=3](https://www.census.go.kr/dat/ysr/ysrList.do?q_menu=5&q_sub=3)에서 2023. 8. 5 인출.
- 일본 내각부. (2023). 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index.html> 에서 2023. 7.1에서 인출.
- 장경섭. (2023).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2025).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7&listLen=5&searchKeyword=&position=S> 에서 2023. 7. 1 인출.
- 탄포린. (2023). 싱가포르의 출산장려정책 개관(2001~2023년).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 Vol.26(가을호), 46-61.
- 통계청. (2022). 합계출산율. <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3. 8. 3 인출.
- 통계청. (2023).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정보포털 <https://kosis.kr>에서 2023. 12. 21 인출.
-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2023). <https://travail-emploi.gouv.fr/droit-du-travail/les-absences-pour-maladie-et-conges-pour-evenements-familiaux/article/le-conge-de-maternite> 에서 2023. 7. 1. 인출.
- 프랑스 행정부.(2023a). 가족수당.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56> 에서 2023. 7. 1. 인출.
- 프랑스 행정부. (2023b). *Qu'est-ce qu'une politique familiale?*. <https://www.vie-publique.fr/fiches/262492-politique-familiale-definition>



에서 2023. 7. 1. 인출.

- Aaronson, D, Dehejia, R., Jordan, A., Pop-Eleches, C., Samii, C. & Schulze, K. (2021). The Effect of Fertility on Mothers' Labor Supply over the Last Two Centuries. *The Economic Journal*, 131(633), 1-32.
- Aassve, A., Cavalli, N., Mencarini, L., Plach, S., & Livi Bacci, M. (2020). The COVID-19 pandemic and human fertility. *Science*, 369(6502), 370-371.
- Adema, W., Fluchtmann, J., & Gustafsson. (2022). *The Recent Decline in Fertility Rate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The role of policy*. Unpublished working paper.
- Ahn, N, & Mira, P.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 Anderson, T., & Kohler, H. P. (2015). Low fert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3), 381-407.
- Arel-Bundock, V., Enevoldsen, N., & Yetman. CJ. (2018). countrycode: An R package to convert country names and country codes. *Journal of Open Source Software*, 3 (28), 848.
- Arpino, B., Pasqualini, M., Bordone, V., & Solé-Auró, A. (2021). Older people's nonphysical contacts and depression during the COVID-19 lockdown. *The Gerontologist*, 61(2), 176-186.
- Atoh, M., Kandiah, V., & Ivanov, S. (200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Asi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w fertility situ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2(1), 42-75.
- Bailey, M. J., Bart, L., & Lang, V. W. (2022). The missing baby bust: th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for contraceptive use,

-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low-income wome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1(4),
- Bar, M, Hazan, M., Leukhina, O., Weiss, D., & Zoabi, H. (2018). Why Did Rich Families Increase their Fertility? Inequality and Marketization of Child Care. *Journal of Economic Growth*, 23(4), 427-463.
- Beaujouan, É., & Toulemon, L. (2021). European countries with delayed childbearing are not those with lower fertility. *Genus*, 77(1), 2.
- Beaujouan, É., Zeman, K., & Nathan, M. (2023). Delayed first births and completed fertility across the 1940-1969 birth cohorts. *Demographic Research*, 48, 387-420.
- Becker, G. 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marriage. In T. W. Schultz (Eds.),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pp. 299-34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llani, D., & Vignoli, D. (2022). COVID-19 and relationship quality: Emotional, paid work and organizational spheres. *Vienna Year 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1), TBA-OLF.
- Bergsvik, J., Fauske, A., & Hart, R. K. (2021). Can policies stall the fertility fall? A systematic review of the (quasi-) experimental literatur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7(4), 913-964.
- Berrington, A., Ellison, J., Kuang, B., Vasireddy, S., & Kulu, H. (2021). *Recent trends in UK fertility and potential impacts of COVID-19*. ESRC Centre for Population Change.
- Berrington, A., Ellison, J., Kuang, B., Vasireddy, S., & Kulu, H. (2022). Scenario-based fertility projections incorporating impacts of COVID-19. *Population, Space and Place*, 28(2), e2546.

- Billari, F. C., & Dalla-Zuanna, G. (2013). Cohort replacement and homeostasis in world population, 1950-2100.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9(4), 563-585.
- Billari, F., & Kohler, H. P.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 Boccuzzo, G., Caltabiano, M., Zuanna, G. D., & Loghi, M. (2008). The impact of the bonus at birth on reproductive behaviour in a lowest-low fertility context: Friuli-Venezia Giulia (Italy), 1989-2005.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25-147.
- Bongaarts, J. (1978).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 105-132.
- Bongaarts, J. (2015). Modeling the fertility impact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Time for a tune-up. *Demographic Research*, 33(19), 535-560.
- Bongaarts, J. & Feeney, G.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8.
- Bongaarts, J., & Feeney, G. (2010). When is a tempo effect a tempo distortion?. *Genus*, 66(2), 1-15.
- Brini, E. (2020). Childlessness and low fertility in context: evidence from a multilevel analysis on 20 European countries. *Genus*, 76, 1-38.
- Casterline, J. (2001). *Diffusion Processes and Fertility Transition: Selected Perspectives*. National Academies Press.
- Cherlin, A., Cumberworth, E., Morgan, S. P., & Wimer, C. (2013). The effects of the Great Recession on family structure and fertil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0(1), 214-231.
- Chuard, C., & Chuard-Keller, P. (2021). Baby bonus in Switzerland:

- Effects on fertility, newborn health, and birth-scheduling. *Health Economics (United Kingdom)*, 30(9), 2092-2123.
- Ciganda, D., A. Lorenti & L. Dommermuth. (2021). Changes in the educational gradient of fertility not driven by changes in preferences. *MPIDR Working Paper*, 2021(16).
- Cleland, J., & Wilson, C. (1987). Demand theorie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An iconoclastic view. *Population Studies*, 41, 5-30.
- Coale, A. J. (1973). The demographic transition reconsidered.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 Coale, A. J., & Watkins, S. C. (Eds.). (1986). The decline of fertility in Europe. *The revised proceedings of a conference on the Princeton European fertility projec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2022). *Proposition de Loi: Universalité des Allocations Familiales, L'ESSENTIEL*. <https://www.senat.fr/lessentiel/ppl21-181.pdf>. 2023. 8. 1.
- Comolli, C. (2017). The fertility response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ructural economic conditions and perceived economic uncertainty. *Demographic Research*, 36, 1549-1600.
- Coskun, S. & Dalgic, H. (2022), The Emergence of Procyclical Fertility: The Role of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Risk. *CEPR Discussion Paper*, Vol. DP17316.
- Davis, K. & Blake, J. (1956).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3), 211-235.
- Delventhal, M., Fernández-Villaverde, J., & Guner, N. (2021). Demographic Transitions Across Time and Space. *NBER Working Paper* 29480.

- Doepke, M., Hannusch, A., Kindermann, F., & Tertilt, M. (2023).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In Lundberg, S. & Voena A. (Eds.), *Handbook of the Economic of the Family, 1*(pp. 151-154).
- Easterline, R. (1975). An Economic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6*(3), 54-63.
- Easterline, R. (1978). What will 1984 be lik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recent twists in age structure. *Demography, 15*(4), 397-432.
- Edin, K., & Kefalas, M. (2005). *Promises I Can Keep: Why Poor Women Put Motherhood Before Marri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llingsæter, A. L., Kitterød, R. H., & Hansen, M. N. (2022). How does parental time relate to social class in a Nordic welfare state?. *Acta Sociologica, 65*(2), 150-165.
- El-Mallakh, N. (2021). Fertility, Family Policy, and Labor Supply: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France. *SSRN Electronic Journal*.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France*.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Germany*.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Hungary*.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Italy*.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Sweden*.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arré, L. and L. González. (2019). Does paternity leave reduce fert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72, 52-66.
- Forster, M. & D'Ercole, M.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Unpublished working paper.
- Frejka, T. (2011). The role of contemporary childbearing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shaping period fertility trends.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36(4).
- Frejka, T., Goldscheider, F. & Lappegård, T. (2018). The Two-Part Gender Revolution, Women's Second Shift and Changing Cohort Fertility.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3, 99-133.
- Friedman, D., Hechter, M., & Kanazawa, S. (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31, 375-401.
- Gauthier, A.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 323-346.
- Ghaznavi, C., Kawashima, T., Tanoue, Y., Yoneoka, D., Makiyama, K., Sakamoto, H., ... & Nomura, S. (2022). Changes in marriage, divorce and birth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Japan. *BMJ global health*, 7(5), e007866.
- Glavin, P., Young, M. & Schieman, S. (2020). Labor market influences on Women's fertility decisions: Longitudinal evidence from Canada. *Social Science Research*, 88-89, 102417.
-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 Goldstein, J. R., Kreyenfeld, M., Jasilioniene, A., & Örsal, D. K. (2013). Fertility Reactions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Recent Evidence from Order-Specific Data. *Demographic Research*, 29(4), 85-104.
- González L. & S. Trommlerová. (2021). Cash Transfers and Fertility: How the Introduction and Cancellation of a Child Benefit Affected Births and Abor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58(3), 783-818.
- Goode, W. J. (1970).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The Free Press.
- Gray, E., Evans, A., & Reimondos, A. (2022). Having babies in times of uncertainty: first results of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number of babies born in Australia. *Australian Population Studies*, 6(1), 15-30.
- Guzzo, K. (2022). The Formation and Realization of Fertility Goals Among a US Cohort in the Post-Recession Year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8(4), 991-1026.
- Hajnal, J. (1965). European Marriage Patterns in Perspective. In Glass, D. and Eversley, D.(Eds.), *Population in History*(pp. 101-143). Chicago: Aldine.
- Hellstrand, J., Nisén, J., & Myrskylä, M. (2022). Less Partnering, Less Children, or Both? Analysis of the Drivers of First Birth Decline in Finland Since 2010.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8(2), 191-221.
- Hellstrand, J., Nisén, J., Miranda, V., Fallesen, P., Dommermuth, L., & Myrskylä, M. (2021). Not Just Later, but Fewer: Novel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Demography*, 58(4), 1373-1399.

- Hiilamo, H. (2020). Why fertility has been declining in Finland after the Global Recession? : A theoretical approach . *Fin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54, 29-51.
- Hotz, V. Joseph, Klerman, J., & Willis, R. (1997).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In M.R. Rosenzweig & O. Stark(Ed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Volume 1A*(pp. 275-347). Elsevier.
-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Germany) and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 Available at [www.humanfertility.org](http://www.humanfertility.org) (data downloaded on [date]). Accessed on 2023. 8. 5.
- Hwang, J. (2023). Later, Fewer, None?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 *Demography*, 60(2), 563-582.
- Jalovaara, M., Neyer, G., Andersson, G., Dahlberg, J., Dommermuth, L., Fallesen, P., & Lappegård, T. (2019). Education, Gender, and Cohort Fert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5(3), 563-586.
- Jenkins, L. (2020). 1 in 4 Childless Adults Say Climate Change Has Factored into Their Reproductive Decisions. *Morning Consult. September, 28*.
- Jones, Larry E., & Tertilt, M. (2008). An Economic History of Fertility in the U.S.: 1826-1960. In Peter Rupert(Eds.), *Frontiers of Family Economics, Volume 1*. Emerald Press.
- Kaku, K. (1975). Increased induced abortion rate in 1966, an aspect of a Japanese folk superstition. *Annals of Human Biology*, 2(2), 111.
- Kapitány. (2008). A “gyed-hatás”: Az 1985 és 1996 közötti családátogatási rendszer termékenységre gyakorolt hatása [The “gyed-effect”: The fertility effect of the family support system between 1985-



- 1996]. *Demográfia*, 5(11), 51-78.
- Kearney, M. S., & Levine, P. B. (2020a). Half a million fewer children? The coming COVID baby bust. *Brookings Institution Report*.
- Kearney, M. S., & Levine, P. B. (2020b). Role models, mentors, and media influences. *The Future of Children*, 30(1), 83-106.
- Kearney, M. S., & Levine, P. B. (2022). The US COVID-19 Baby Bust and Rebound (No. w3000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leven, H., Landais, C., Posch, J., Steinhauer, A., & Zweimüller, J. (2019). Child Penalties across Countries: Evidence and Explanations. *AEA Papers and Proceedings*, 109, 122-126.
- Kohler, H. P., Billari, F. C., &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Kohler, H. P., Billari, F. C., & Ortega, J. A. (2006). Low fertility in Europe: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The baby bust: Who will do the work*, 48-109.
- Kolk, M. (2019). Weak support for a U-shaped pattern between societal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en comparing societies across time. *Demographic Research*, 40, 27-48.
- Kreyenfeld, M. (2010). Uncertainties in female employment careers and the postponement of parenthood in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 351-366.
- Lappegård, T., Kristensen, A. P., Dommermuth, L., Minello, A., & Vignoli, D. (2022). The impact of narratives of the future on fertility intentions in Norwa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4(2), 476-493.
- Lareau, A. (2012). *Unequal Childhood*. 2n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Y. (2022). Is Leave for Fathers Pronatalist? A Mixed-Methods Study

- of the Impact of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uples' Childbearing Intentions in South Kore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1(4), 1471-1500.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sthaeghe, R. (1977). *The Decline of Belgian Sterility, 1800-197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In K.O. Mason & A.M. Jensen (Eds.),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p. 17-62). Oxford: Clarendon Press.
- Lesthaeghe, R. J., & Neidert, L. (2006).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Exception or Textbook Exampl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4), 669-698.
- Lesthaeghe, R., & Van de Kaa, D. J. (1986). Twee demografische transitities. *Bevolking: groei en krimp*, 1986, 9-24.
- Lindberg, L. D., VandeVusse, A., Mueller, J., & Kirstein, M. (2020). Early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findings from the 2020 Guttmacher survey of reproductive health experiences.
- Luc Masson. (2015). *La fécondité en France résiste à la crise, Situation sociale des pays européens depuis le début de la crise, Éclairage*. file:///C:/Users/kihasa/Downloads/FPORSOC15a\_EC1\_fecondite%20(2).pdf. 2023. 8. 1.
- Lundh, C., Kurosu, S., Dribe, M., Manfredini, M., Oris, M., Bengtsson, T., ... Lee, J. (2014). *Similarity in difference*. Cambridge, MA: MIT Press.
- Luppi, F., Arpino, B., & Rosina, A.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fertility plans in Italy, Germany, France, Spain, and the United

- Kingdom. *Demographic Research*, 43, 1399-1412.
-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 Malicka, I., Mynarska, M., & Świdarska, J. (2021). Perceived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childbearing intentions in Poland. *Journal of Family Research*, 33(3), 674-702.
- Manning, W. D., Guzzo, K. B., Longmore, M. A., & Giordano, P. C. (2022). Cognitive schemas and fertility motivations in the U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 261.
- Matysiak, A., Sobotka, T., & Vignoli, D. (2021). The Great Recession and fertility in Europe: A sub-nation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7(1), 29-64.
- McDonald, P. (2000a).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cDonald, P. (2000b).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16.
- Mills, M. & Blossfeld, H. (2013).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meets globalization: A comprehensive theory to understand changes in family formation in an era of rising uncertainty. In A. Evans, & J. Baxter (Eds.), *Negotiating the life course: stability and change in life pathways* (pp.9-33). Springer.
- Morgan, S.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 589-603.
- Morgan, S. P., Cumberworth, E., & Wimer, C. (2011). The Great Recession's influence on fertility, marriage, divorce, and cohabitation. *The great recession*, 220-245.

- Myrskylä, M., Kohler, H.-P., & Billari, F. C.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7256), Article 7256.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2).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Fertility Behavior in Developing Nations: Theory and Initial Result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Neels, K., & De Wachter, D. (2010).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of Belgian fertility: how are they related to rising female educational attainment?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77-106.
- Nisén, J., Jalovaara, M., Rotkirch, A., & Gissler, M. (2022). Fertility recovery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n Finland? *Finnish Journal of Social Research*, 15, 25-44.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 OECD Publishing.
- OECD. (2019). *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Gender Equality at Work*. OECD Publishing.
- OECD. (2023). *Exploring Norway's Fertility, Work, and Family Policy Trends*. OECD Publishing.
-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 Oppenheimer, V. 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563-591.
- Parsons, T. (1964).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Philipov, D. (2003). Fertility in times of discontinuous societal change. Popul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arsaw, Statistical Publishing Establishment*, 665-690.
- Philipov, D., & Kohler, H.-P. (2001). Tempo Effects in the Fertility Decline in Eastern Europe: Evidence from Bulgaria, the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and Russia. *European Journal of*

- Population*, 17(1), 37-60.
- Pison, G. (2020). France has the highest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ocieties*, 575(3), 1-4.
- R Core Team. (2023).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 Raley, R. K. (2001). Increasing fertility in cohabiting unions: Evidence fo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38(1), 59-66.
- Reher, D. & Requena, M. (2019). Childlessness in Twentieth-Century Spain: A Cohort Analysis for Women Born 1920-1969.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3, 133-160.
- Rindfuss, R. R., Guilkey, D., Morgan, S. P., Kravdal, Ø., & Guzzo, K. B. (2007).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irst-birth timing in Norway. *Demography*, 44(2), 345-372.
- Rindfuss, R. R., Guilkey, D. K., Morgan, S. P., & Kravdal, Ø. (2010). Child-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in Norwa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4), 725-748.
- Rotkirch, A. (2020). The wish for a child.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8, 49-61.
- Saldana, J.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pp. xi-223). Sage Publications Ltd.
- Savelieva, K., Jokela, M., & Rotkirch, A. (2023). Reasons to Postpone Childbearing during Fertility Decline in Finland. *Marriage & Family Review*, 59(3), 253-276.
- Seltzer, N. (2019). Beyond the Great Recession: Labor Market Polarization and Ongoing Fertility Decline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56(4), 1463-1493.
- Settersten Jr, R. A., Bernardi, L., Härkönen, J., Antonucci, T. C., Dykstra,

- P. A., Heckhausen, J., ... & Thomson, E. (2020).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Covid-19 through a life course le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45, 100360.
- Shreffler, K. & D. Johnson. (2013). Fertility Intentions, Career Considerations and Subsequent Births: The Moderating Effects of Women's Work Hou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4(3), 285-295.
- Skirbekk, V. (2022). *Decline and Prosper! : Changing Global Birth Rates and the Advantages of Fewer Children*. Palgrave Macmillan.
- Sobotka, T. (2003). Re-Emerging Diversity: Rapid Fertility Chang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s. *Population (English Edition, 2002-)*, 58(4/5), 451-485. <https://doi.org/10.2307/3246652>.
- Sobotka, T. (2004). Is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ained by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2), 195-220.
- Sobotka, T. (2017). Childlessness in Europe: Reconstructing Long-Term Trends Among Women Born in 1900-1972. In M. Kreyenfeld & D. Konietzka (Eds.),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pp. 17-53).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Sobotka, T. (2008). Overview Chapter 6: The diverse faces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9, 171-224.
- Sobotka, T., Skirbekk, V., & Philipov, D. (2010). Research note: Economic recession and fertility in the developed world: A literature review. *Vienna: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 Sobotka, T., Skirbekk, V., & Philipov, D. (2011). Economic recession and fertility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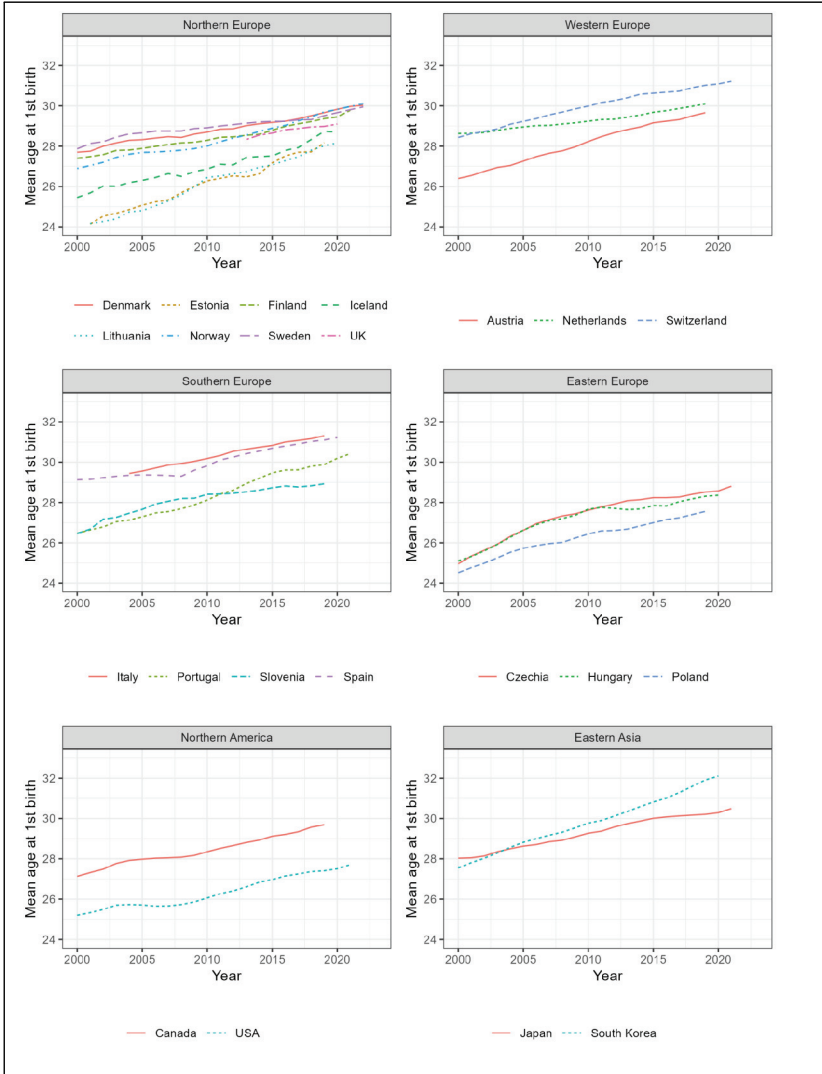
- review*, 37(2), 267-306.
- Sobotka, T., Zeman, K., Jasilioniene, A., Winkler-Dworak, M., Brzozowska, Z., Alustiza-Galarza, A., Németh, L., & Jdanov, D. (2023). Pandemic Roller-Coaster? Birth Trends in Higher-Income Countr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 Sobotka, T., Zeman, K., Lesthaeghe, R., Frejka, T., & Neels, K. (2012).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cohort fertility: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in a European context.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36(2-3), 417-452.
- Spéder, Murinkó & Oláh. (2020). Cash support vs. tax incentives: The differential impact of policy interventions on third births in contemporary Hungary, *Population Studies*, 74(1), 39-54, DOI: 10.1080/00324728.2019.1694165.
- Sveriges Riksdag, (2023). *Barnbidrag*. [https://www.riksdagen.se/sv/webb-tv/video/interpellationsdebatt/barnbidrag\\_HA1079](https://www.riksdagen.se/sv/webb-tv/video/interpellationsdebatt/barnbidrag_HA1079). 2023. 8. 1.
- Sweeney, M. (2002).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1), 132-147.
- Thomas, J., Rowe, F., Williamson, P., & Lin, E. S. (2022). The effect of leave policies on increasing fertility: a systematic review.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9(1), 1-16.
- Tocchioni, V., Berrington, A., Vignoli, D., & Vitali, A. (2021). The Changing Association Between Homeownership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Demography*, 58(5), 1843-1865.
- Tsuya, N. O., Wang, F., Alter, G., & Lee, J. Z. (2010). *Prudence and pressure: Reproduction and human agency in Europe and Asia, 1700-1900*. Cambridge, MA: MIT Pres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UN DESA/POP/2022/TR/NO. 3.
- Vignoli, D., Bazzani, G., Guetto, R., Minello, A., & Pirani, E. (2020). Uncertainty and Narratives of the Futur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ontemporary Fertility. *Analyzing Contemporary Fertility*, 25-47.
- Vignoli, D., Mencarini, L., & Alderotti, G. (2020). Is the effect of job uncertainty on fertility intentions channeled by subjective well-being?.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46, 100343.
- Wilson, C., Sobotka, T., Williamson, L., & Boyle, P. (2013). Mig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placement i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9(1), 131-157.
- Zaidi, B., & Morgan, S. P. (2017).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A Review and Appraisal.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1), 473-492.
- Zeman, K., Beaujouan, E., Brzozowska, Z., & Sobotka, T.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25), 651-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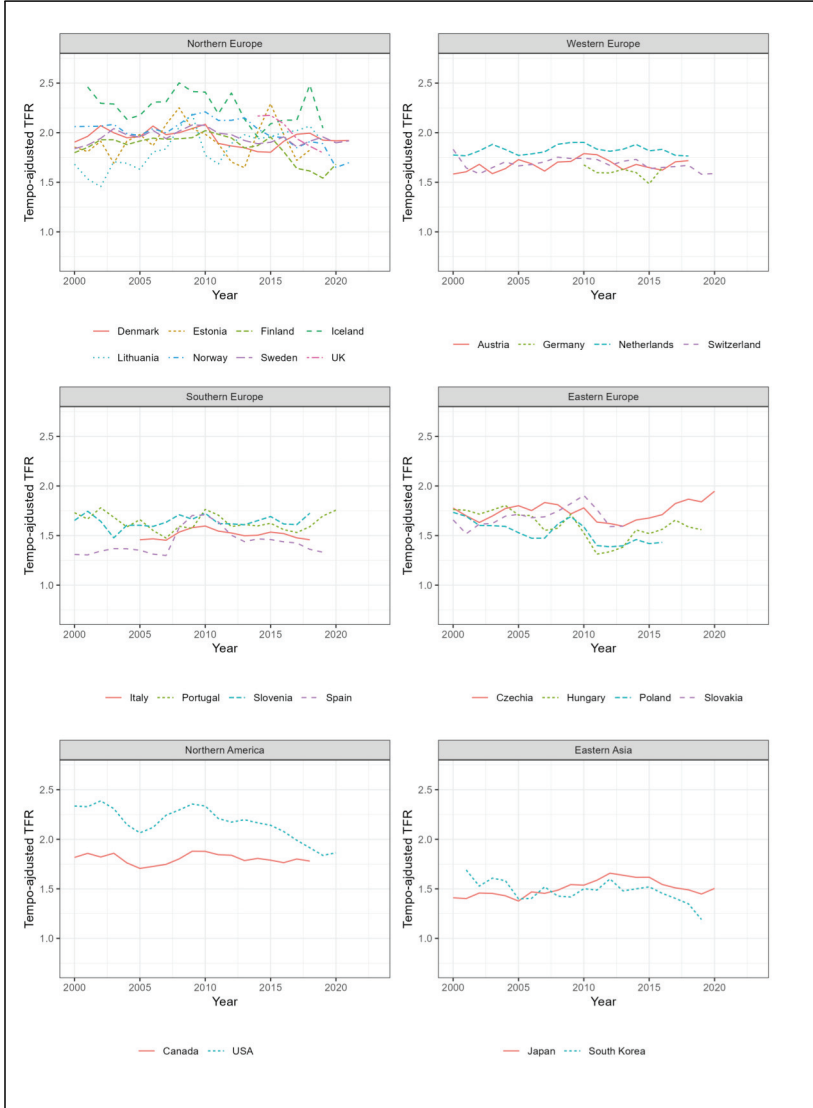


[부그림 1] 주요 국가별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 200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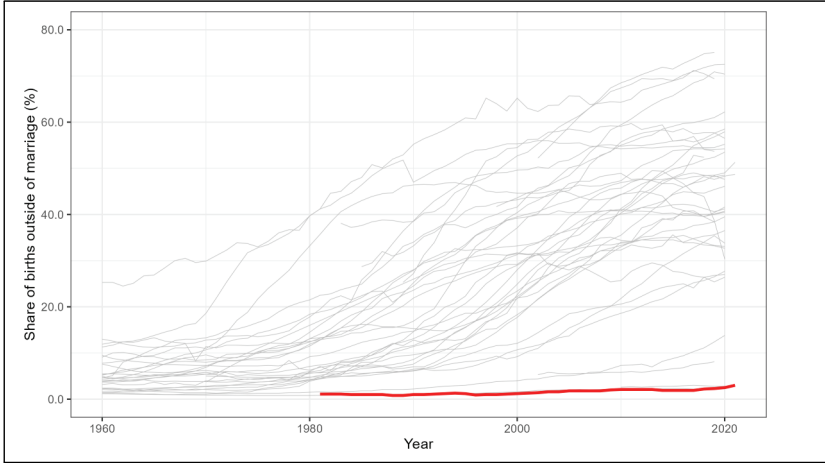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부그림 2] 주요 국가별 템포 보정 합계출산율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부그림 3] OECD 회원국 국가별 혼외출산 비중, 1960~202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